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동일조건변경허락. 귀하가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했을 경우에는, 이 저작물과 동일한 이용허락조건하에서만 배포할 수 있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신문방송학석사 학위논문

한국 신문의 ‘민생’관련 담론에 관한 연구 :
(1988.2.25-2013.2.24까지)
주요 종합일간지 사설을 중심으로



2013년 5월

부 경 대 학 교 대 학 원

신 문 방 송 학 과

이 정 민

신문방송학석사 학위논문

한국 신문의 ‘민생’관련 담론에 관한 연구 :
(1988.2.25-2013.2.24까지)
주요 종합일간지 사설을 중심으로

지도교수 이상기

이 논문을 신문방송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3년 5월

부 경 대 학 교 대 학 원

신 문 방 송 학 과

이 정 민

이정민의 신문방송학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13년 5월



주심 철학박사 김 무 규 (인)

위원 문학박사 오 창 호 (인)

위원 문학박사 이 상 기 (인)

- 목 차 -

ABSTRACT

제1장 서론	1
제2장 이론적 배경	3
제1절 담론과 사회	3
제2절 비판적 담론분석과 언어	7
제3절 비판적 담론분석과 대중매체	12
제3장 연구방법 및 연구문제	13
제4장 민생담론의 양적분석	16
제5장 민생담론의 비판적 분석	23
제1절 민생담론의 표현	24
제2절 민생담론의 주체·정체성	32
제3절 민생담론의 사회적 관계와 변화	43
제6장 결론	61

- 표 차례 -

<표 1> 주요 종합일간지 사설의 민생담론 빈도	17
<표 2> 민생담론의 주제별 분류	18
<표 3> 민생담론의 주제별 빈도	19
<표 4> 노태우 정부(1988년 2월 25일~1993년 2월 24일)의 민생담론 주제별 빈도	20
<표 5> 김영삼 정부(1993년 2월 25일~1998년 2월 24일)의 민생담론 주제별 빈도	20
<표 6> 김대중 정부(1998년 2월 25일~2003년 2월 24일)의 민생담론 주제별 빈도	21
<표 7> 노무현 정부(2003년 2월 25일~2008년 2월 24일)의	

민생담론 주제별 빈도	21
〈표 8〉 이명박 정부(2008년 2월 25일~2013년 2월 24일)의 민생담론 주제별 빈도	21
〈표 9〉 민생담론의 주제별*정부별 교차분석	22
〈표 10〉 사실의 청자가 정부인 경우	27
〈표 11〉 경찰청 범죄발생 및 검거현황	47

- 그림 차례 -

〈그림 1〉 시간의 흐름에 따른 민생치안 담론의 발생빈도	45
〈그림 2〉 시간의 흐름에 따른 민생의정 담론의 발생빈도	48
〈그림 3〉 정치영역에서의 민생담론 변화과정	51
〈그림 4〉 시간의 흐름에 따른 민생경제 담론의 발생빈도	53
〈그림 5〉 경제영역에서의 민생담론 변화과정	61
〈그림 6〉 굴비 든 박근혜 위원장	65
참고문헌	65
부록	72

국문초록

이 연구는 현대사회에서 대중매체에 의해 발화되는 ‘민생’이란 어떤 의미를 가지며, 그것을 지칭하는 구체적인 대상은 무엇인가? 하는 의문에서 시작되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입각하여, 노태우 정부가 시작되는 1998년 2월 25일부터 이명박 정부의 임기가 끝나는 2013년 2월 24일까지(25년간)를 분석기간으로 정했다. 한국의 주요 종합 일간지의 표제어에 ‘민생’이란 키워드를 담고 있는 사설들을 민생담론으로 상정하고, 페어클로우(Fairclough, 1995)의 비판적 담론분석틀에 의거해서 분석했다. 또한 본고에서는 담론분석에 대한 실천적 경향에 앞서, 비트겐슈타인의 언어이론과 푸코의 담론, 알튀세르의 이데올로기론이 연구자의 의식적인 배경으로 깔려있다.

민생담론은 한국의 민주화·세계화 과정이라는 거대한 사회적 흐름에 관계했다. 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의 전반적인 민생담론은 민생-치안으로 접합되는 주제의 빈도가 유달랐다. 이 시기는 한국의 민주화 이후 노동운동과 개헌과정, 과거 청산을 촉구하는 시위대와 공권력의 갈등 등으로 과열된 양상을 보이고 있었는데, 민생담론은 치안문제에만 편중되어 재생산된 것을 알 수 있었다. 치안을 주된 문제로 삼는 민생담론의 주제는 최초의 민선민간 정부인 김영삼 정부까지 이어졌지만, 90년대 후반부터는 민생치안이란 주제의 빈도가 현저하게 줄어들었다. 김대중 정부에 들어서 다양한 민생현안에 대한 요구의 담론이 부상하기 시작했는데, 특이한 점은 요구대상의 변화이다. 정책에 대한 불신을 피력하고 요구하는 점은 변함이 없지만, 정책의 비판에서 정당의 행위 자체를 문제 삼기 시작했다.

우리사회에 위기가 닥칠 때마다 민생 경제담론은 경제정책을 주도하는 주체에 대해 비판을 가했지만, 위기를 벗어나려는 대안의 모색이나 구체적인 분석을 제시한 것은 아니었다. 외환위기 때의 사회적 분위기라면 민생경제와 관련한 담론이 상당량 쏟아져 나왔을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연구자의 예상과는 달리 ‘IMF사태와 민생문제가 직접 연결되는’ 담론의 사례는 극히 적었다. 또한 경제위기에 직면할 때면 의례히 재벌 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졌지만, 민생담론은 재벌개혁에 동참하고자하는 의지가 소극적이었다. 정부·정치권과 정치색을 띄는 시민단체는 비판의 대상이 되지만 경제를 지배하는 재벌들에 대한 비판은 제외되고 있었다. 90년대 민생담론을 경제적인 관점으로 볼 때, 노동쟁의, 물가, 통화증가율, 주택문제, 외환위기 등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었다면, 환란이후인 2000년대 들

어서는 경제성장과 분배문제부터 양극화 문제, 일자리 창출, 비정규직 철폐 등의 문제들에 대해 지면 할애를 하고 있었다. 이 시기의 민생담론들은 공통적으로 성장과 분배에 초점을 두고 있었지만, 분배보다는 성장우선에 무게를 두고 있었다.

연구자의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대중매체에서 생산되는 ‘민생’을 살펴보았을 때, 대중매체에 의해서 생산되는 ‘민생’이란 단어의 의미는, 사전적 정의로써 ‘국민의 생활’이기보다 정치의 대상으로써, 주로 정부·정치인, 정치색을 띤 저항세력 등을 제외한 ‘국민’으로 사용되고 있었다. 또한 민생담론은 대체로 민생을 대변한다는 암묵적인 전제하에, 정부·정치권과 저항세력에 대해 적대적이나 공격적인 질문을 정당화했다. 그런 견지에서 볼 때, 신문의 민생담론도 역시 권력관계가 재생산되는 것이며, 적어도 신문의 민생담론은 명백히 권위적이라 할 수 있는 면모를 보여주고 있었다.



제1장 서론

선거기간이 되면 ‘민생투어’(民生tour)¹⁾ 라는 명목으로 정치인이 시장의 상인들을 찾아다니며 일일이 악수하는 모습을 우리는 대중매체에서 흔히 접할 수 있다. 그들은 저마다 국민의 안녕(well)과 미래에 대해서 장밋빛 전망을 내놓으며 민생우선을 강조한다. 그러나 정작 국민들은 그들이 강조했던 말의 실천에 대해서 그다지 만족하지 못하는 듯하다. 정치인의 행위는 대중매체를 통해 알려지기도 하지만 그러한 정치행위의 실천에 대해서 대중매체의 비판을 받기도 한다. 대중매체는 정치인에게 있어 ‘양날의 칼’을 가지고 있는 셈이다. 그렇다면 대중매체는 국민들을 향해 정치인들의 발화를 대변하는 것인가? 아니면 역설적으로 ‘대중매체가 정부·정치권의 감시기능으로서 민생을 대변하는 것인가?’ 이 연구는 이러한 질문들과 관련해서, 대중매체에서 ‘민생’이란 어떤 의미를 가지며, 그것을 지칭하는 대상은 무엇인가? 하는 의문에서 시작되었다.

‘민생’(民生 ; livelihoods of the people)이란 의미는 통치권과 함께 존재해 왔던 오랜 역사적 개념으로 이해된다.²⁾ 그런데 민주주의체제에서도 이 ‘민생’을 소위 말하는 왕권아래 백성들의 생계와 동일한 의미로 보아야 되는지 반문해 볼 필요가 있다. ‘민생’은 국민의 삶과 관련해 포괄적이고 역사적인 개념이지만, 오늘날 사전적으로는 “일반 국민의 생활이나 생계”를 의미한다.³⁾ 생계(livelihoods)는 곧 먹고 사는 일이다. 이는 삶의 본질이므로 중요한 일에 틀림없다. 그런데 그런 함의를 담고 있는 민생이란 용어가, 대중매체에서는 국민의 생활이나 생계를 구체적으로 다루기보다는 주로 정부와 정치권에 대칭되는 의미로만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용어의 사용과 소통의 매개는 언어로 이루어지며 언어에 의한 발화는 기록형태로 남겨진다. 즉 대중매체에서 다루는 민생에 관한 정보도 결국 언어인 말과 글(text)로 남겨지게 되고, 그것이 모여서 주제를 가진 담론이 형성되게 된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형성된 담론들이 일정한 관행으로 되풀이 되는 것을

1) 정치인이 일반 국민의 생활 여건을 직접 알아보기 위하여 재래시장, 노인정 등을 돌아보는 일. (박용찬, 『신어 자료집』, 국립국어원, 2004, p182.)

2) 민(民)의 어원과 유래를 고찰한 장현근(2009)의 연구에 따르면 民의 개념은 불잡허 눈이 찢린 채 이주해 와서 노동에 종사하는 노예들로부터 출발하였으나 신분변동을 거치며 결국 피통치자를 지칭하는 말로 의미신장을 하였다고 한다. 나중에는 국왕 한 사람을 제외하고 정치사회의 모든 구성원까지 지칭하게 되었으며, 최고통치자까지를 포함하는 국민개념으로 발전되었다는 것이다. 民은 결국 피통치자 전체를 대변하는 글자가 되었으며, 國의 근본이었으며, 자유롭고 재산권을 가진 존재였다고 했다. 동양 전통 정치사상속에 등장하는 民을, 단순한 권리와 의무의 상관관계로 정치를 인식하여 맹목적이고 어리석은 존재로 보는 시각은 교정되어야 한다고 했다.

3)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2013.3.7검색 <http://stdweb2.korean.go.kr/main.jsp>

어렵지 않게 관찰 할 수 있다. 가령, 민생을 주제로 생산된 담론이, 정작 내용은 정치인들의 정쟁을 비판하거나 민생현안이나 법안들의 실천에 관해 책망하고 촉구하며 마무리하는 식이다. 이종영(2003)은 이에 관해 흥미로운 것이 우리가 하나의 정치적 정세를 대면할 때, 그 정세는 언제나 특정한 담론들이 ‘먹혀들고’ 있는 정세로 나타난다고 하였다. 그는 크게 두 가지 문제로 보고 있는데, 것처럼 ‘먹혀들고 있는’ 담론은 그 정세 속에서 당연한 것처럼 여겨진다는 것, 결코 의문이나 반성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그 하나이고, 또 한 가지 문제는 그 ‘먹혀들고 있는 담론’이 거대한 전통에 의해 지탱되고 있다는 것이다. 담론은 사회에서 작동하며 언어를 단위로 한다. ‘민생담론⁴⁾’과 같이, 하위 주제를 가진 담론들의 합은 공시적인⁵⁾ 한에서 거대담론을 형성하고 나아가서 지배담론으로 고착화될 수 있다.

특히 신문은 매체의 특성상 지면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대부분 텍스트로 기록되고 보관하기가 용이해서 반복적으로 재독이 가능하다. 이러한 기록과 해석은 일정한 정형화를 필요로 하므로, 특정한 의제가 반복적으로 재생산 된다면 수용자는 그러한 주제에 대해서 고정관념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것은 좀 더 주의깊이 살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한다. 또한 신문사는 표면적으로는 중립적 가치를 내세우지만, 그 내면의 작동원리는 이익집단의 성격도 띄며, 정파성을 드러내기도 한다. 이런 점에서 각각의 신문이 생산하는 담론은 정치적인 기준에서 편향성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조금 다르게 생각하면 이것은 개별신문사의 편향 문제가 아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문제들도 더 거시적인 관점에서는 담론형성의 과정이며 요소일 수 있기 때문이다.

신문사설에서 다루어지는 민생담론들, 즉 민생을 주제로 한 사설들은 주로 외연과, 하위주제들이 가시적인 텍스트 구조로 존재 할 것이다. 이에 동의 한다면 담론역시 구조화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텍스트의 구조는 그 시대를 반영한다. 그러므로 기록으로 남겨진 텍스트는 다양한 분석대상이 된다. 언어의 용법은 본질적이지 않고, 의미로서의 텍스트 역시, 글을 쓰는 순간과 해석하는 시점이 다를 수 있다. 그러므로 현재의 관찰시점에서는 과거 담론과의 비교를 통해서 사회가 변화했던 과정과 관계들을 조망 해보기가 더욱 용이 할 것이다. 이에 따라 사설에서 다루는 민생담론의 구조를 고찰하고, 그 속에 담긴 사회적 관계에 대해 검토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4) 이하 ‘민생’에 관련된 담론’은 문맥에 따라 ‘민생담론’으로 줄여서 표기 하겠다.

5) 공시적이란 특정한 시점의 정태성을 의미하는 것인데 역사를 어느 정도의 기간으로 구분하느냐에 따라서 그 단위는 다를 수 있다. 따라서 위의 문장에서 “공시적”이란, 담론과 사회의 관계적인 측면으로 볼 때, 사회체계내의 큰 사건 등으로 형성된 거대담론이 다른 사건으로 인해 변하게 되는 조작적인 경계선을 의미한다. 예) 911테러 이후 아랍권에 대한 미국의 정책담론

제2장 이론적 배경

제1절 담론과 사회

"discourse 라는 용어는 다양한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그리고 때로는 혼란스럽게 사용 된다(Fairclough 1992,1995 ; Foucault 1978 ; Van Dijk 1985)."

한국에서 '담론(discourse)'이란 말은 푸코의 여러 논의 소개와 더불어 사용되다가 포스트모더니즘이나 탈근대 학문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면서 정착 되었다. 프랑스나 영미권에서 쓰이는 'discourse'가 국내에서는 담화, 담론, 언설 등으로 쓰였는데, 이 용어는 기존 언어학 분야에서 '담화'라는 언어 단위의 한 분야로 쓰이는 전략과 구별하기 위해 '담론'이란 말을 누군가가 만들어낸 듯하다. 이제 '언설'이란 말은 쓰이지 않고 담화보다는 '담론'이란 말로 일반화 되었다(김슬옹, 2009).

푸코는 'discourse'란 용어의 사용을 고집했다. '담론(discourse)'은 푸코가 특별히 고안해낸 용어로 전통적으로 말하기(talk), 말하는 행위(the act of speaking), 담화(conversation)의 의미로 통용되었다. 담론은 세상의 모습을 보여주는 하나의 방식인데, 문제는 이렇게 드러나는 세상의 모습이 일방적으로 조작된 것이라는 데 있다. 가령, 노동계층이 비위생적이고 게으르며, 식민지인이 열등하다는 언술이나, 광인과 죄수가 감시와 처벌과 교화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인식체계 등은 지배 이데올로기가 권력을 정당화하기 위해 고안한 담론에 의한 것이다. 이처럼 푸코가 염두에 둔 담론이란, 지배계급이 피지배계급에 특정한 지식과 규율을 강요함으로써 '진리'의 장을 구성하는, 말하기와 글쓰기를 포함한 언술체계를 말한다. 그리고 어떤 언술은 허용되고, 어떤 언술은 허용되지 않는다. 분류, 배분, 순서를 정해서 만들어진 언술체계는 개개인을 통제하고, 지배하고, 순응시키는 데 동원된다. 즉 언술체계는 권력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자의적·일방적으로 만들어 낸 하나의 담론이다(박종성, 2006).

조금 다른 관점에서 담론은, 인문학과 사회과학의 경계를 가로지르면서, 지식과 상징의 영역을 통한 실천과 현실개입, 그리고 지식생산 자체가 다변화되고 대중화되고 있는 다매체, 탈전통화, 탈장르주의 시대의 특성을 적절하게 포착하고 있는 대표적 단어이기도 하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접하는 정치담론, 정책담론, 사회담론, 문화담론, 미디어담론이라 불리는 사회적으로 순환되는 주장이나 입장 그리고 시각들이 공공적 소통의 기능을 수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사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나 해석, 논쟁점을 제공하기도 하며, 특정한 이해관계가 반영되거나 투사된 주장을 드러내기도 한다(이기형, 2006).

푸코는 기원전 6세기 그리스 시대를 들어 참된 담론이란, 존경하면서 두려움을 가졌던 담론이라고 하면서 정의(justice)를 바탕으로 공평한 몫을 부여했던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오늘날 담론은, 무엇인가 또는 무엇을 하는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말하는가에 있게 되면서 참된담론과 거짓담론의 진위를 언표행위로 구별하며 분할이 수립되었다고 하였다. 그는 사람들이 말한다는 사실 속에, 담론들의 증식과 위험의 존재를 언급하면서 “어떤 사회에서든 담론의 생산을 통제하고, 선별하고, 조직화하고, 나아가 재분배하는 일련의 과정들이 존재한다.”고 했다. 그는 16세기 이후 부(富)에 대한 이론과 생산의 토대위에서, 금지, 분할, 배제와 진위의 대립은 결국, 주체가 어떤 진리를 향해 작동시키는 과정이고, 그것이 결국 권력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하는 문제를 던졌다. 담론은 하나의 권력으로서 힘에 의한 압력을 가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담론이란 그 자체가 권력의 투쟁이며, 일정하지 않은 방식으로 계속 말해지고 유지되며, 앞으로 말해야 할 담론들 역시 사회체계 안에서 시간의 흐름에 의해 계속 수정된다는 것이다(Foucault, 1971).

이러한 담론은 사회체계내의 이데올로기와 관계하고 있다. 푸코 이전에 맑스의 유물론적 해석을 제시한 프랑스 철학자 알튀세르는, 이데올로기가 자본주의 사회 안에서의 생산조건의 재생산을 담당한다고 했다. 이데올로기는 종교, 교육, 가족, 법률, 정당, 노조, 문화 등의 이데올로기적 국가기구라는 물질적 실체의 형태로 작동한다는 것이며 또한 하나의 체계 및 제도로서, 개인의 행위나 사유를 일정하게 강제화 하고 구조화하기 때문에, 일상적 실천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다(윤평중, 2006).

푸코는 그의 저서 ‘담론의질서’에서 담론은 배제의 내부적인 과정과 외부적인 과정들을 통해서 구별된다는 것을 강조한다. 그가 말하고자 했던 담론이란, 의미의 지칭으로서의 담론이라기보다는 그것을 구별 짓고 있는 담론의 질서 혹은 규칙을 정립하고자 한 것으로 보아진다. 따라서 에피스테메⁶⁾의 기초 하에서 존재하는, 푸코의 담론체계는, 언어분석을 통해 권력 내외적으로 사회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연구의 방법론으로서는 너무 거시적이고 추상적이라는 것이 현대 담론학의 중론으로 보인다.

적어도 한국에서 담론의 형성사에 선구적인 영향을 끼친 이가 바로 푸코라는데 이견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푸코만이 유일하게 담론이란 용어를 사용하는 이론가는 아닐 것이다. 가령 담론학의 큰 줄기들 중에서 하버마스의 ‘의사소통 행위

6) “15세기 이후의 ‘전(全) 서양문화의 가장 깊은 기층’을 발굴하려 하는 푸코의 고고학은 특정한 시기의 지식 형상과 학문 체계들을 생산해 내는 담론적 실천들의 총체인, 에피스테메의 구조를 천착한다. 에피스테메는 우리의 인식과 실천, 문화를 가능하게 하는 감추어진 결과로서, 사물을 특정한 방식으로 확정하려는 근본적 코드이다(윤평중, 2006).”

이론'과 같이 생활세계에 대해 합리적 의사소통방식의 담론적용과 실천을 찾아 볼 수 있겠다. 이와 같이 담론은 이제 학자간, 학제간의 인위적·제도적인 틀과 전통적인 객관주의, 주관주의의 인식론적 틀의 한계를 벗어나서 다원적으로 정의되고 있다.

특히 인문학과 사회과학 분야에서 문화연구와 문화비평의 주도 아래 부상하기 시작한 담론이론에 따르면, 최근 10여 년간 담론을 정의하는 방식은 훨씬 더 넓게 다루어지고 있다. 이 입장에서 보면 담론은 발화되거나 문자로 쓰여진 서류나 진술문(statement)에서 중요한 사회적 이슈에 대한 특정한 시각이나 입장을 담고 있으면서, 사회 내에서 형성되고 유통되는 크고 작은 종류의 이야기나 텍스트 혹은 발화의 집합을 지칭하기도 한다(Phillips & Jorgensen, 2002; Barker & Galasinski, 2001; 양운덕, 2003, 신선희, 2011, 재인용).

그렇다면 담론은 구체적으로 우리사회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기능하는가?, 이기형(2006)은 2004년의 대통령 탄핵사건과, 지금까지도 첨예하게 지지와 반대가 엇갈리는 이슈인 신자유주의적인 세계화 정책에 대한 찬반의 입장, 그리고 대북 정책, 대체복무제, 혹은 페미니스트와 반페미니스트 간의 성정치성과 성적 차이를 둘러싼 논쟁의 예를 들었다. 정당성과 지지세력을 구현하기 위한 과정 속에서 이들 담론은 서로 종종 갈등관계를 형성하게 되는데, 이들 사안에 서로 차별화되거나 치열하게 대립각을 세우는 입장을 반영하는 담론은 사회 내에 복수적으로 존재하고 순환한다고 하였다. 담론은 개인이나 집단에 의해 생성되거나 매개되지만, 특히 사회제도적인 층위에서 주도적으로 발생, 교환 수용되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담론은 복잡하게 얽힌 의미망을 형성한다는 것이다.

담론의 쓰임은 크게 지칭으로서의 의미와 방법론으로서의 의미로 나눌 수 있다. 전자는 어떤 사건이나 문제에 대해 어떤 맥락으로 얘기하거나 글을 쓰고 있으며 그런 그의 말이나 글은 어떤 의미작용을 일으키고 있는가를 따진 것이다. 이에 반해 방법론으로서의 담론이란, 담론에 대한 담론 또는 특정 담론을 분석하기 위한 담론이므로 메타 담론이라 할 수 있다(김슬옹, 2009). 둘의 기본 방향은 같지만 담론자체의 의미를 해석하는 것과 방법론으로서의 메타담론은 질적으로 상당히 다를 수 있다. 이 연구에 사용할 비판적 담론분석은 두 가지 의미를 모두 포함하고 있지만 비교적 후자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오늘날 이데올로기와 인지적 구조, 언어분석을 통해 미시적으로 담론과 사회관계를 고찰하는 여러 학자들의 연구가 소개되고 있다. 반다이크에게 있어 가장 핵심적인 주장은 사회적 구조와 담론적구조가 어떻게 관련 맺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이 두 구조가 직접 연관되어 있다면 이데올로기는 무의미하며 사회집단의 구성원들은 모두 같은 것을 수행할 뿐이라고 했다. 그는 사회내의 행위자와 그들의 정신상태, 사고방식을 통한 담론적 구조들이 사회적 구조와 연계된다는 이론

의 틀을 제시했는데, 바로 이 정신적 모델이 사회적 구조와 담론의 관계를 중재한다는 것이다. 이 이론의 핵심은 사회기능, 인지구조, 담론적 표현과 재생산의 세 가지 요소로 정리할 수 있으며, 이 핵심적 요소들이 분석의 거시층위와 미시층위 사이의 간극들을 이어준다는 것이다. 이데올로기적 바탕에서 그러한 담론구조들이 어휘적요소나 문법적 구조와 같은 미시적 차원으로부터 보다 큰 텍스트 혹은 담론 전체 속에 간접적으로 표현된 주제나 테마와 같은 거시구조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담론의 내적 해석을 넘어 사회적 관계를 중요시하는 반다이크와 유사한 이론을 펼치는 페어클로우의 초기 저서들(Fairclough, 1989; 1992)은 미디어 텍스트들을 사회·정치적 권력과 사회적 변화의 과정들내에서 언어와 담론의 지위에 대해 강조했다. 그는 Media Discourse(Fairclough, 1995)에 와서 푸코의 이론들을 첨가 했다. 페어클로우의 분석틀 역시 반다이크와 마찬가지로 세 가지의 큰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는데, 첫째는 텍스트 분석이다. 그것은 미시적인 차원들과 텍스트 안의 대인적 요소들뿐만 아니라, 텍스트 구조의 거시적 차원들도 모두 아우르고 있다. 두 번째는 담론관행들의 분석이다. 이는 텍스트의 구성과 해석을 담당하고 그것이 어떻게 확산되는 가에 대해 관심을 갖는다. 담론에 대한 분석은 서로 다른 사회 영역들(정치적 담론과 같은)의 담론 관행을 고려하기도 했는데, 이러한 관행들과의 관계를 두고, 그는 푸코로부터 차용한 용어인 ‘담론의 질서’라고 칭했다. 세 번째는 사회적 관행들이다. 특히 담론과 권력 및 이데올로기의 관계 분석이다. 두 이론가들의 뚜렷한 차이로는, 반다이크가 담론과 사회의 매개가 사회인지-인지구조에 있다고 보았다면, 페어클로우는 텍스트가 생산되고 수용되는 담론관행을 중심 역할로 보고 있다(Bell & Garrett, 1998).

페어클로우는 담론을 크게 두 가지 의미를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첫째, 언어 연구에서 널리 사용되는 의미로서, ‘discourse’를 사회적 행위와 상호작용, 즉 사람들이 실제 사회적 상황에서 함께 상호작용을 하는 것으로 보는 것과, 둘째, 후기구조주의(Post-structuralist) 사회이론에서 우세한 것으로써 ‘discourse’를 실제의 사회적 형성(social construction of reality), 지식의 한 형태(a form of knowledge)로 보는 것이라고 했다(Fairclough, 1995).

결국 담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이 사회적 산물이라는 점이다. 담론은 그것을 수행하는 사람들의 의식과 사고를 담고 있고, 그들이 속한 집단의 의식도 배어 있게 된다. 담론은 그것을 수행하는 사람들의 시각이나 관점이 반영되고, 그러한 점들을 담을 수 있는 적절한 언어나 기호의 양태를 띠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담론은 담론수행자들 사이에서 평등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담론수행자들의 사회적 위치나 역할에 따른 위계질서(hierarchy)하에서 나타나게 된다. 즉, 담론에도 그것을 수행하는 수행자들의 역학관계에 따른 위계가 존재한다는 것이다(백

선기, 1995 ; 정미정·백선기 2011, 재인용).

위의 이론적 진술들을 정리하면 담론이란 언어를 기반으로 만들어지는 사회적 생산물인데, 담론을 생산하는 주체가 자기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다른 체계들과의 구별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이때 주체와 수용자간 사회적 위치와 계층의 구별이 성립된다고 할 수 있는데, 무엇보다 연구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러한 체계들의 구분이 어떤 단위⁷⁾로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해석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이다. 또한 담론의 의미와 체계들은 시·공간적인 단위로 구분해서 다양하게 해석 해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담론의 주체와 대상, 생산자와 수용자, 담론의 사회적 관계들 그리고 시간적인 관계와 변화의 예를 들 수 있겠다. 이러한 연구의 틀은 아래에서 제시하는 페어클로우의 매체담론 분석이 유용할 수 있다.

제2절 비판적 담론분석과 언어

20세기 초반 영미철학계를 중심으로 서구에서 대두된 언어에 대한 지대한 관심은 주로 과학적 합리성에 대한 굳은 믿음에 기초해 있었던데 비해, 20세기 후반에 전반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언어문제에 대한 관심은 과학적 합리성에 대한 믿음의 붕괴, 또는 과학의 불투명성 및 한계에 대한 새로운 반성의 문제와 직결되었다고 할 수 있다.…… 20세기 전반에는 과학 및 합리주의에 대한 강한 믿음이 언어와 같이 불확실한 문제조차도 논리적, 합리적인 방법으로 투명하게 분석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부여했다면, 20세기 후반에 들어 과학적 합리성에 대한 불신이 심해지면서 논리적분석의 대상이라는 차원에 놓여있던 언어의 지위가 오히려 과학적 분석이나 방법론 및 이론일반의 패러다임을 대체해버릴 정도로 급격히 격상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경향에서 흥미로운 것은 언어/과학의 맞물린 쌍에서 어느 축에 방점이 주어지는가 하는 것에 차이가 있을 뿐, 경향과 반경향 모두가 의식과 관념이라는 지평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공통점을 지닌다는 것이다. 그와 같은 동일한 지평 내에서 이 대립쌍의 이동은 확실성/불확실성이라는 다른 쌍을 동반하면서 불균등한 궤적을 그리다가 최근 들어 언어의 불확실성과 과학의 불확실성이라는 지점으로 맞물려가고 있는 듯하다(심광현, 1992).

오늘날 이 불확실성이 부각되는 것은 자연의 우연성을 인간의 의지로 필연성으

7) “담론의 구성단위는 더 큰 단위의 생산물일 수 있다. 그러므로 위계적 계층구조를 생산해 낸다. 더욱이 언어 사용자는 담론의 계층화를 만들거나 이해하는데 그러한 단위를 기능적으로 사용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Barker & Galasinski, 2001).”

로 만드는 것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심광현(1992)이, 인간이 염두에 두지 못한 자연적, 인위적 관계들과 그것의 본질적인 용법을 두고, 서로 상충하는 구조와 주체들을 대립쌍으로 가정했다면, 불확실성이 부각된다는 것은 그러한 쌍들이 언젠가는 만나게 되는 평행선으로 이해된다. 인간에게 있어 이러한 관념과 구조가 발현되는 장(sphere)은 바로 사회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언어라는 커뮤니케이션 수단을 통해 의미화 하고 소통하게 된다. 사회에서 언어의 의미작용이란, 관념형태의 집합체라고 할 수 있는 이데올로기로 안에서 가능하다. 담론은 보다 구체적인 층위로, 이데올로기 내에서 작동하며 우리는 언어의 의미작용을 담론을 통해 발현시킨다. 그런데 이데올로기 속에서 그것들의 작동을 내면화시키고 있다면 우리는 이데올로기의 작동방식을 알아차리기 어렵다. 또한 사회과학적인 방법들조차도 내적인 언어관계에만 머무른다면 피상적일 수 있다. 내적인 관계의 지평이 단선적이라면 더욱 그러 할 것이다.

본고에서 인용한 학자들의 배경이론을 종합해 볼 때 언어와 담론의 사회적 층위는, 사회 > 이데올로기 > 담론 > 언어라는 등식으로 정착되어 있는 듯하다. 위와 같이 기존의 이론들이나 방법론들에 대해 비판하는 담론실천의 과정에서 언어의 내적인 관계를 벗어나 사회와의 관계를 고려하는 이론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비판적 담론분석도 그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비판적 담론분석(Critical Discourse Analysis : CDA)은 Fairclough를 비롯하여, Wodak, Fowler, Hodge, Kress 같은 학자들을 중심으로 발전된 이론틀인데, 언어라는 것을 경우에 따라서는 이념적인 성격을 띠는 것으로 보고, 사회적 과정(process) 및 문제(issues)들의 언어학적, 기호학적(semiotic) 측면을 분석하는 담화분석의 한 분야로서, “텍스트 자체의 분석, 텍스트의 생산, 소비 그리고 분배 과정의 분석, 담화 사례의 사회·문화적 분석을 통합하는 것”으로 정의된다(Fairclough, 1995). 또한 이 접근법은 “사회·정치적 담화분석”이라고 불리기도 해서 힘 관계(power relation)는 담화와 관련이 있다는 전제하에 지배 관계의 생성과 도전에서 담화가 수행하는 역할에 관심이 있다. 이 접근법이 추구하는 또 다른 관심사는 사회 유지 및 변화와, 담화관행⁸⁾ 및 그 구조가 어떻게 상호 재귀적(reflexive)으로 반영하거나 반영되고 있는가를 변증법적인 측면에서 분석하는 것이다.⁹⁾ 특히 영국과 호주의 선구적인 비판언어학자들과 담론분석가인 페어클로우

8) 관행과, 관례에 대한 혼용에 대해서 규정지를 필요가 있다. “담화(담화 및 담론) 및 실천(실천의 관행 및 사례)이라는 용어는 ‘적절한’ 중의성이라고 부를 법한 내용을 가진다. 두 용어가 모두 특정한 경우에 사람들이 실행하고 있는바(≒실천사례)를 가리키거나 또는 모종의 경우가 주어지면 습관적으로 사람들이 실행하는바(≒실천관행)를 가리킨다. 다시 말하여, 두 용어가 모두 행위(action)를 가리킬 수도 있고, 관례(convention)를 가리킬 수도 있는 것이다(Fairclough, 2011).” 따라서 역시 이 연구에서도 동의어로 사용한다.

9) 이원표역, Fairclough(1995), 『media discourse』, 한국문화사, 2004, 역자서문 참고

및 텍스트 언어학자인 반다이크의 접근법 등이 융합되어진 만들어진 산물을 의미한다(bell & garrett, 1998).

비판적이란 말은 특별한 의미로서, 여러 사람으로부터 가려져 있을 만한, 언어·권력·이념 사이의 연결모습 들을 드러내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된다. 비판적 언어 연구에서는 사회적 상호작용을 그것들의 언어요소에 초점을 모으는 방식으로 분석을 진행 한다(Fairclough, 2011). 이러한 접근법을 ‘비평적’ 혹은 ‘비판적’이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당연히 되는 관행과, 통용되는 어휘 등을 이용해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상식적인 것으로, 전혀 의식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재인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비판적 언어분석은 기존의 언어학적 접근법과는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를 정리 할 필요가 있다.

“특정단위의 의미는 그 언어의 활용에 의해서 생성 된다”(Wittengenstein, 1953 #43:20 ; Barker & Galasinski, 2001, 재인용). 는 비트겐슈타인의 연구는 언어분석에 기여한 바가 크다. 그는 우리가 사회·문화적으로 언어를 활용하는 것에 대해 언어게임으로 비유하면서, 특정한 언어에서 발견되는 언어게임들은 사람들이 지니는 삶의 양식을 표현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우리가 사회에 통용되고 있는 언어에 대해 익숙한 것은 부분적으로는 어느 특정한 문장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선입견을 갖고 있기 때문이며 이런 견해를 제거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하였다. 이는 우리에게 생소하기 때문이 아니라 분명히 너무 친근하기 때문에 감추어진 특성이 있다는 것이다(엄정식, 1983).

‘비판적 담론분석’에서 기본을 이루는 단위는 언어이다. 페어클로우(1995)는 “담화는 사회적 관행의 한 형태로서, 특정한 방식으로 인식되는 언어 사용을 의미한다.”고 주장하였고, 김슬옹(2009)은 “언어학으로서의 담론학은 언어만 보면 언어는 보이지 않는다는 평범한 진리에서 출발한다.”고 했다.

쿡(1992) 역시, 담론은 언어에만 주목하지 않으며 커뮤니케이션의 맥락에 천착하는데, 어떤 사람이 왜 소통을 하고 있고, 어떤 종류의 사회와 상황에서 어느 미디어를 사용해서 의사소통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다양한 의사소통들이 어떻게 발전되고 있는지와 의사소통의 주체들의 관계들에 대해 고찰한다.(bell & garrett 1998, 재인용)

이는 텍스트 자체의 분석만으로는 하나같이 피상적이라고 보는 학자들에 의해서 기존의 언어학과는 차별되고 있는데, 페어클로우는 ‘주류언어학’이라고 지칭되는 기존 언어의 접근법들이 비판적 연구에 무언가 기여하였으나 그러한 접근법들이 사회관계를 설명하기에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한 페어클로우의 진술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첫째, 언어학은 인문학을 넘어 광범위하게 수용 되어 왔지만, 비교적 실제 발화

와 글쓰기에 주의를 쏟지 않았다는 것이 역설적인 사실이다. 이는 곧 현실의 실천 모습을 기술하려고 시도하는 것이 아니다.

둘째, 사회언어학은 언어형식(음운·형태·통사)의 변이모습과 사회적 변인들 사이에 체계적 상관성을 보여 주었지만, 사회언어학 역시 과학 실증주의의 개념에 종속되어 자유롭지 못하다.¹⁰⁾

셋째, 화용론은 언어가 행위의 형태로 간주되어 발화되는 것에 대해, 광의의 개념에서는 비판적 언어연구로 부르고 있는 바에 상응하는 경향들이 있지만, 결국 자신의 목표나 의도를 성취하기 위하여 개별 발화자에 의해 채택된 전략들이기 때문에 개별주의이다. 화용은 언어를 전략적으로 사용하게 되는데, 관례들을 이용하거나 어떤 환경에서는 관례들을 따른다. 그러나 비판적 언어연구에 필요한 것은 실천관행을 하나 또는 다른 것으로 환원하지 않은 채 관례들의 효과를 결정하는 일과 개별화자들의 전략적 창의성을 결정하는 일 모두를 설명 할 수 있어야 한다.¹¹⁾

넷째, 대화분석은 일군의 민속지학자(ethno-methodologist)¹²⁾에 의해 발전된 분석방법으로 참여자들이 그들 자신의 발언기회를 마련하고, 다른 사람의 대화에 반응하는 방식으로, 이들이 사회적 구조를 체계적으로 지향해 나간다. 그러나 그런 대화의 ‘미시구조’ 및 사회적 제도와 여러 사회의 ‘거시구조’ 사이를 연관 짓는 일에는 저항에 왔다. 이는 그 사회적 진공 속에서 자족적 속성에만 관여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한다(Fairclough, 2011).

특히 페어클로우(2011)는 소쉬르에 대해, 랑그를 파롤에 앞서 주어지는 체계로 보며 실제 발화인 파롤 보다 ‘추상적’언어인 랑그의 연구에 치중한다며, 주류언어학에서 통용되는 소쉬르의 핵심적인 아래의 두 가지 가정을 상정하고 이를 비판한다.¹³⁾

① “특정 공동체의 언어는 모든 실천적 목적을 위하여 두루 그 공동체에 걸쳐서 불변의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10) 이에 관해 김슬옹(2009)은 사회언어학은 사회 속에서의 언어 사용 그 자체에 초점을 맞춘 반면에 담론은 어떠한 언어 사용에서 왜 그러한 언어 사용이 일어나게 되었는지의 맥락에 초점을 둔다고 설명하였다.

11) 화용론 역시 그러한 행위를 수반하는 사회적 조건의 본질 곧 권력 문제 등이 언어 자체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존 톰슨 1995 : 52-6, 김슬옹 2009 재인용).

페어클로우는 화용론의 비판에 대해 Journal of Pragmatics의 창간호의 정의에서 영미권의 언어에 국한된 용법으로 제한했다(Fairclough, 2011).

12) 번역본에는 ‘하위문화 연구방법론자’로 표기되어 있다.

13) 페어클로우는 소쉬르의 비판에 앞서 그의 업적에 대한 출간내용이 사후에 다른 사람들에 의해 모아졌기 때문에 그의 착상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불분명한 점이 있다고 전제 했다(Fairclough, 2011).

② “랑그의 연구는, 응당 역사적인 것보다는 ‘공시적’인 연구가 되어야 한다. 시간상으로 주어진 임의의 시점에서, 이 연구는 시간 축을 통하여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것으로써가 아니라, 정태적인 체계로서 연구되어야 하는 것이다.”

페어클로우는 소쉬르에게서 실제로 말해지거나 씌어진 파롤은 순수하게 개인의 선택에 의해서 결정되고, 전혀 사회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사회적 역사적 기반으로부터 언어를 고립시켜 버린다는 것이다. 언어사용은 사회적으로 결정되는 것인데 주류 언어학은 긴밀히 관계적인 언어연구의 갈래들이 분리되며, 언어의 사회적 본질이 하위영역으로 쫓겨나버린 것에 대해, 이것은 비-사회적 방식이며 언어·권력·이념 사이에 있는 관련성에 대해서는 말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비판적인 언어 연구에서는 전통적인 접근법¹⁴⁾들 보다, 오히려 할리데이(Michael Halliday)의 ‘기능적 언어접근법들¹⁵⁾이 더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Fairclough, 2011).

바커와 갈라신스키 역시(Barker & Galasinski, 2001) 사회적인 맥락에 귀속한 진실성과 담론의 맥락에 대한 통찰은 담론분석의 필수불가결한 부분인데, 기호학은 결국 개인적인 문헌연구로 귀결된다고 하였다. 담론은 지속적인 해석이 근거로 하는 분석된 발화의 합의 된 양태가 명백하게 존재한다는 것이다. 또한 그들은 담론분석의 언어적 도구로 ‘언어수준’에 의한 틀로써 단어, 문법, 문장구조 등으로의 접근법과, 텍스트의 기능적 관점을 소개했다. 전자는 기존의 언어학적 접근법을 의미하는 것이고, 후자는 바로 비판적 담론분석에 적용되는 접근법으로서, 재현과 상호작용, 분석적으로 분리된 텍스트의 형태의 문제를 유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텍스트의 기능적 분석틀이다. 기능적인 언어접근법은 관념적인 것(the ideational), 대인적인 것(the interpersonal), 텍스트적인 것(the textual)으로 나눈다. 첫째, 관념적인 기능은 화자의 재현능력이다. 인지, 감정, 인식, 담화행위 등으로써 화자의 내면세계와 화자가 경험한 바깥세계의 실재를 알 수 있게 해준다. 둘째, 대인적 기능은 텍스트를 통한 화자와 청자간의 상호작용을 말한다. 셋째, 언어의 텍스트적 기능은 청자로 하여금 텍스트 자체의 의미를 이해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문맥상의 의미들도 이해하게 만들어주는 기능을 가진다. 바커와 갈라신스키는 앞에서 언급한 세 가지의 기능이 한꺼번에 표현되어야 하는 것을 강조한다.

이에 대해 담론의 맥락과 한국어 어휘 쓰임새에 큰 가치를 두고 있는 김슬옹(2009)의 말을 빌리면, 담론은 언어의 실천적인 측면을 다루는 언어 이론이라 할 수 있는데 언어 이론이라고 해서 언어 자체를 연구하는 이론이라는 뜻이 아니라

14) 위 문장에서는 촘스키의 ‘형식주의’, 소쉬르의 기호학을 일컫는다.

15) 기능적 언어접근법 (Halliday and Hasan, 1985)참고

언어를 연구의 중심부에 놓는 이론이라고 말한바 있다.

제3절 비판적 담론분석과 대중매체

지금까지의 이론적인 배경에서 담론의 쓰임이란, 의미를 지칭하는 담론과 방법론으로서의 비판적 담론분석이, 언어를 기본 단위로, 담론의 다양한 주체와 생산과 수용의 관계, 인위적인 것과 사회적인 것의 관계들과 상호작용에 대해 전반적인 이해를 돕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신문의 사설에 기록된 텍스트가 주된 분석의 대상이지만, 그 이전에 담론과 대중매체의 관계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

현대 대중매체의 언어분석에 있어서 ‘담론’과 ‘텍스트’를 구두언어와 문자언어로 구분하는 전통적인 언어학의 입장으로는 한계를 가진다. 전통적인 구두언어는 청자와 화자가 함께 있으므로 해서 화자의 담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대중매체는 화자와 청자가 함께 있을 수 없다. 그리고 전통적인 문자 텍스트들이 멀리 떨어져 있는 독자를 염두에 둘 수 있었다면 대중매체의 구두언어가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또 다른 원인으로 특정한 시대의 텍스트 해석은 시간에 따라 변할 수 있기 때문이다(Bell & Garrett, 1998).

Bell(1991)의 저서인 *The Language of News Media* 이후 본격화되기 시작한 대중매체와 담화에 대한 분석은, 이제 담화분석이라는 분야에서 중요한 연구 주제로서 확고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 대중매체를 구성하는 신문, 텔레비전, 라디오 등 구체적인 매체의 종류와 관련된 언어사용의 차이와, 특정한 매체, 가령, 신문에 실리는 보도기사, 사설, 논평, 광고 등 구체적인 레지스터에서의 차이에 따르는 언어차이, 또는 진보주의, 보수주의, 공산주의, 민주주의 등 이념이나 사회·정치 체제에 따르는 언어 차이, 인종 차별과 계층간 갈등의 표출에서의 언어 사용, 이런 일련의 주제들과 관련된 언어(가령, 영어와 한국어)에서의 차이 등 흥미로운 연구주제들이 다루어지고 있다.¹⁶⁾

오늘날 통신과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은 실시간으로 원거리의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인터넷과 모바일장치를 낳았다. 대중매체에 대해 수용자 개인 의견의 즉각적인 개진은 물론이며, 온·오프라인을 아우르는 커뮤니티의 형성에 힘입어 대중매체에 대한 견제와 역능이 빠르게 실현될 수 있는 세상이 되었다. 이제는 이를 혁명이라 하기에는 진부한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 대중매체가 가지고 있는 위상과 권위적인 면모는 여전하다.

16) 이원표역, Fairclough(1995), 『media discourse』, 한국문화사, 2004, 역자서문

매체에서 발화된 언어는, 필자와 수용자가 소통하여 일정한 영향을 주고받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적 소통행위라고 볼 수는 있지만 개입의 공간을 마련하기는 힘들었다. 또한 여전히 매체의 담론은 매번 결정권자에 선별되어 생산되므로 권위적이라고 할 수 있다. 매체담화와 면대면 담화의 가장 큰 차이는 그것의 일방성(one-sidedness)이다. 즉 대중매체는 생산자 및 해석자사이에 뚜렷한 구분이 있다. 가령, 매체에서 뉴스기자는 권위의 인물이며, 무엇인가를 아는 사람, 그리고 말할 권리를 가진 사람으로 제시 되는 것이다. 언어는 영상¹⁷⁾과 함께 세련되고, 강조적이며 진지한 말투의 권위적 성격과 함께 작용한다. 반면에 시청자는 수용적이고, 듣기 위해 기다리며, 알기를 원하는 것으로 제시된다. 신문매체의 보도기사와 사설도 역시 권위의 인물, 사실을 아는 사람, 말 할 권리를 가진 사람으로서 한 가지 특별한 입장을 주장하는 것이다. 한 가지 사실을 주장하는 매체담론의 일방성에 있어서는 단정적 진술이 될 가능성이 있다. 단정적 진술은 기자와 시청자 사이의 관계, 그리고 기자와 시청자의 사회적 정체성이 프로그램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어떻게 설정되는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Fairclough, 1995).

페어클로우(1995)는 이러한 사회적 현안 문제에 대하여 조사하고 집필하는 사람들이, 불가피하게 그들이 그런 현안 문제를 지각하는 방식뿐만 아니라, 주제를 선택하고 그런 현안에 접근하는 방법에 의해서, 그리고 그들 자신의 사회적 경험과 가치와 정치적 결단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은 널리 잘 이해되고 있다고 역설한다. 그러므로 사회적 논제들의 중립성에 대해 이들 영향을 인정하고 접근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이를 종합해볼 때 매체담론의 비판적인 분석을 위해서는 표현, 주체와 수용자의 관계, 수용자들의 관계, 권위의 관계 등을 모두 아우르는 폭넓은 관찰이 요구된다.

제3장 연구방법 및 연구문제

이 연구는 한국사회를 대표하는 주요 종합일간지¹⁸⁾에서 제목에 ‘민생’이란 단어를 포함하는 사설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신문은 과거의 자료들을 언어학적으로 분석하기 용이하며 그것과 관련한 사회의 흐름을 맥락 속에서, 혹은 특정한 시기의 맥락의 구조를 다양한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다. 신문의 사설(社說)을 분석대

17) 대중매체에서 영상은 글과 함께 의미전달에 중요한 요소가 된다. 신문에서도 마찬가지로 글과 사진을 어떻게 수용하느냐에 따라 그 해석을 달리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고는 글을 주된 대상으로 한 담론의 분석으로서 신문의 사설을 대상으로 하고 분석의 범위는 글로 한정한다.

18)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국일보, 국민일보, 한겨레신문, 서울신문, 경향신문, 세계일보, 문화일보이다.

상으로 삼은 이유는 사실은 말 그대로 신문사의 설(說), 곧 주장으로서, 날마다 일어나는 여러 사건들 가운데 각 신문사가 그 날 하루 가장 중요한 사안이라고 판단한 부분에 대해 신문사의 시각을 명백히 밝히는 지면이기 때문이다, 신문 사설에는 객관성을 중요시하는 다른 지면과 달리 특정 사안에 대한 신문사의 가치 판단이 강하게 나타난다. 이러한 가치판단의 기준은 곧 신문사의 편집 철학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신문사에서 오랜 취재와 데스크 일을 통해 편집 철학을 공유하고 있는 논설위원들에 의해 구현된다. 그러나 신문 사설이 익명으로 처리된다는 사실에서도 볼 수 있듯이 논설위원들 개개인의 소신이 그대로 반영 된다고 보기는 사주나 신문사의 기업적 이해관계에 따라 논조가 조정된 것으로 봐야 한다(신선희, 2011).

신문 사설은 사회적 사건이나 쟁점에 대해 지지하거나 반대하고, 사회적 문제나 실태에 대한 평가나 고발을 하며 관심과 의식의 각성, 문제의 해결, 행동이나 실천을 촉구하는 신문의 주장이 담긴 글이다. 따라서 독자들은 신문 사설을 통해 사건의 의미를 이해하기도하고 사회상에 대한 비판적 안목을 형성하기도 한다(김선양, 1963, 신선희, 2011, 재인용).

이 연구에서는 가능한 한 주요 종합일간지 모두를 분석대상으로 했다. 종합일간지들을 폭넓게 선택한 이유는 기존의 연구들이, 보수적인 언론으로 분류되는 조선·중앙·동아일보와 진보적 언론으로 대표되는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에 대한 대립구도¹⁹⁾ 위주로 분석한 경향이 많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연구는 언론의 보수와 진보성향을 떠나 사설이 생산하는 민생담론을 가능한 한 넓은 사회적 관계에서 조망해보기 위한 목적도 있다.

분석기간의 주요 범위는 문민정부 이후로 설정했다. 그러나 문민정부가 정식으로 출범하기 전의 우리사회는 군사정권이후 사회적으로 과도기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으므로, 자료의 수집은 노태우 정부를 포함시킨 1988년 2월 25일부터 이명박 정부의 임기가 끝나는 2013년 2월 24까지의 기간으로 정했다.

자료의 수집방법은 크게 90년대 전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90년대 이후 자료의 수집은 주로 한국언론진흥재단(KINDS)²⁰⁾에서 구축하고 있는 기사통합검색 서

19) 한겨레신문은 창간당시 진보적 매체를 표방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동아일보등과 비교 되며 이들과 대립하는 매체로 여겨져 왔다(정재철2002). 특히 조선일보와 한겨레신문과 관련해서 김효진(2008)은 학계의 시각도 이와 다르지 않다고 했으며 한겨레신문이 창간된 1988년 이후 두 신문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 왔으나 대부분의 선행연구들(백선기 1997, 정재철2001, 강진숙2006, 유용민·김성해2007, 한동섭 2000)은 두 신문이 '다르다'는데 초점을 맞추었다고 했다.

20) 한국언론재단의 기사통합검색의 정식서비스는 1991년 1월1일 부터이지만, 실제 검색서비스는

비스를 이용했다.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KINDS)에서 검색이 불가능하므로 자사의 홈페이지 검색서비스를 통해서 개별적으로 수집했다. 90년대 이전의 자료들은 대부분의 신문들이 전자문서화 되지 않아서 키워드 검색이 불가능했다. 서울신문과 한국일보는 KINDS의 '90년대이전신문'에서 스캔되어 저장된 PDF 자료들을 찾아 수집했다. 중앙, 조선, 세계일보는 자사의 PDF 서비스를 이용했다. 한겨레, 경향, 동아일보는 온라인포털 네이버의 '뉴스라이브러리'에서 검색했다. 국민일보는 국회도서관에서 마이크로필름 형태로 보존하고 있는 자료를 이용했다.²¹⁾ 주요 종합 일간지로 분류되는 신문 중에서 내일신문은 창간일이 이 연구의 분석기간에 적합하지 않음으로 제외하였다.²²⁾

본고의 방법론은 비판적담론분석(CDA)중 페어클라우(Norman Fairclough, 1995)의 분석틀을 사용했다. 그러나 주체와 관련한 접근법은 그의 다른 저서²³⁾를 참고 했다. 담론분석틀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접근법을 '비판적'이라고 부르는 것은 전반적인 사회적 관행과 우리가 특정한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우리의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인과관계로 묶여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다(Bourdieu, 1977, Fairclough, 1995, 재인용). 둘째, 언어는 사회의 다른 단면들과의 변증법적 관계 속에서, 사회적·역사적으로 위치해 있는 행위방식이다. 즉 언어는 사회적으로 구성되지만 또한 사회적으로 구성한다. 셋째, 각각의 담론 유형은 특정한 일련의 주체 지위들 속에서 운용하는 사람들이 해당 주체 지위를 점유하도록 제약되어 있다. 넷째, 언어 사용 또는 모든 텍스트는 동시에 표현, 사회적 정체성, 사회적 관계를 형성한다. 다섯째, 텍스트분석은 전통적인 형태의 언어학적 분석, 즉 어휘 분석과 의미론, 문장 및 좀 더 작은 단위들의 문법, 소리체계 그리고 글자체계 등을 망라한다. 또한 문장이상의 텍스트 조직에 대한 분석도 포함 한다. 이 분석은 텍스트의 존재뿐만 아니라 부재(absence), 즉 텍스트에서 발견되지 않는 표현, 참여자 범주, 참여자 정체성이나 참여자 관계의 형성 등에도 주의를 기울인다. 여섯째, 담론관행은 매체텍스트 생산 및 소비과정의 다양한 측면들을 포함 한다. 이런 것들 가운데 어떤 것은 좁은 의미에서 담론 과정인데 반해, 어떤 것들은 좀 더 제도적인 특성을 띤다. 창조적인 담론관행은 형태와 의미에서 상대적으로 이

1990년 1월 1일부터 가능하다.

21) 국민일보는 내부사정으로 2002년 이전의 자료는 공개하지 못하였다. (2013.06.10 기준)

22) 내일신문의 창간일은 1999년 10월 9일이다. 또한 국민, 세계, 문화일보의 창간일은 각각 88년 12월, 89년 2월, 91년 11월이다.

23) Fairclough, N(2011), *Language and Power 2nd*, Pearson Education Limited(1989, 2001) 김지홍 역(2011) 『언어와 권력』, 도서출판 경진

질적인 텍스트에서 실현되는 반면, 관습화된 담론관행은 형태와 의미에서 상대적으로 동질적인 텍스트에서 실현된다.²⁴⁾ 일곱째, 사회·문화적 관행은 실제 특정한 사례들을 모든 단계에서 누적적으로 재형성 한다.

위 방법들을 근거로 다음 연구문제를 추출했다.

- ① 주요 종합일간지 사설의 민생담론은 어떤 표현을 보이고 있는가?
- ② 주요 종합일간지 사설의 민생담론의 주체와 정체성은 어떠한가?
- ③ 주요 종합일간지 사설의 민생담론은 어떤 사회문제와 관련했고 변해왔는가?

제4장 민생담론의 양적분석

1. 민생담론의 분류

이 연구의 주된 방법론은 비판적 담론분석(CDA)이지만 필요에 따라 연구자가 코딩한 자료들을 양적으로 분석해서 제시 할 것이다. 양적분석방법은 자료들을 객관화에 가깝게 하여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수집한 자료들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²⁵⁾ 이는 본 연구에 있어 비판적 담론분석방법이 언어, 즉 텍스트를 단위로 사회관계를 분석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다소 자의적인 해석이 될 수 있는 여지를 보완하기위한 목적이 있다. 양적 분석도구는 windows spss Ver.12 와 microsoft excel 2007 program을 사용하였다.

수집한 자료에서 가령 ‘북한의 민생’과 같이 본고의 연구주제와 관련 없다고 판

24) 다섯째와 여섯째의 접근법에 대해 연구자의 의견을 더하자면, 창조적인 담론관행과 관습적인 담론관행은 맥락이 변화하는 교차점으로 볼 수 있는데, 이 경계선에서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에 대해 역설적인 반론에 취약 할 수 있다. 페어클로우는 이 둘의 관계를 양극성(polarity)이라고 언급하면서, 다양한 측면의 담론실천에서 재구조화와 재생산이 복잡해 질 것으로 기대되지만 이 복잡성 또한 관습화 될 수 있다고 한다. 즉, 창조적인 담론관행과 관습적인 담론관행은 그 복잡성에 기인해서 극성의 증가성으로 상쇄 시킬 수는 없다고 이해된다.

25) 담론분석의 단점은 근원적으로 많은 시간이 요구되는 노동-집약적이며, 세부-어휘적 작업이고, 그로 인해 거대한 텍스트 집합체에 적용하기는 어려운데, 보완책으로는 통계적으로 가능한 내용 분석(Boumaand Atkinson, 1996; Krippendorf, 1981; Weber, 1990)의 적용이다. 이러한 양적 내용분석은 빈도 같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나아가 문서의 묶음에서 행위자, 주제, 이슈나 이벤트가 작용하는 맥락을 제공한다(Barker & Galasinski, 2001). 그러나 이 연구의 주된 분석방법은 비판적 담론분석이다. 양적 내용분석과 담론분석의 혼용은 언어와 사회의 상호작용에 대해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상충할 수 있으며 담론의 분석이 내용분석의 방법론에 종속되는 결과를 보일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하므로 이 연구에서는 민생담론의 주제에 대해 시간적인 변화추이의 이해를 돕기 위해 기초통계분석만 제시하였다.

단한 사설들을 제외한 분석대상의 사례는 총 455건이며 신문매체별로 분류하면 다음 <표1>과 같다.

<표 1> 주요 종합일간지 사설의 민생담론 빈도

신문사	빈도	백분율
조선일보	24	5.3%
중앙일보	19	4.2%
동아일보	74	16.3%
한국일보	37	8.1%
국민일보	57	12.5%
한겨레신문	31	6.8%
서울신문	75	16.5%
경향신문	47	10.3%
세계일보	74	16.3%
문화일보	17	3.7%
합계	455	100%

2. 민생담론 표제어의 주제별 분류

담론의 분석에 앞서 ‘민생’이란 키워드를 포함 하고 있는 자료들의 표제어는 한 눈에 보일만큼 뚜렷한 양태를 보이고 있었다. 수집한 자료의 제목에 나타난 민생담론의 하위 주제는 대부분 네 글자의 합성어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코딩단위(coding units)²⁶⁾를 사용하여 명시된 표제어를 중심으로 분류 하였다. 그렇지 아닐 경우는 리드(lead)에서 언급하는 핵심적인 주제어를 근거로 연구자가 분류한 9개의 항목에 가깝다고 판단되는 쪽으로, 나머지는 기타로 분류했다.

① 민생치안은 주로 범죄, 시위 등으로 인해 국민의 생활에 위협이 가해지는 것이다. ② 민생경제는 세계화, 신자유화, 물가, 부동산, 금융문제, 경제성장, 분배 등에 관한 것이다. ③ 민생현안은 국회에 상정되는 국민생활에 관계한 법안 등을 통칭한다. ④ 민생우선은 정부·정치권에 대해 민생문제의 우선을 촉구하는 담론 전반이다. ⑤ 민생국정은 정부의 민생사정, 대통령의 기조연설, 정책의 다짐 등 국정전반에 관한 담론을 의미한다. ⑥ 민생의정은 의회정치 체제에서 정치인들의 국회활동 행위를 말한다. ⑦ 민생외면은 정부·정치권이 정쟁과 당리당략 등을 이

26) 단어, 주제, 주장, 기사, 지면 양과 같이 객관적으로 분석 할 수 있는 분석단위를 말한다(차근배, 1983, 우하중, 2005 재인용).

유로 민생문제를 등한시 한다는 내용이다. ⑧ 민생투어는 대통령을 포함한 정치인이 재래시장, 노인정 등을 돌며 일반 국민의 생활 여건을 직접 알아보는 행위이다. 분석자료에서 나머지 민생사범, 수재와 민생, ‘민생사면’과 같이 수적인 사례가 극히 적고 연구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주제어는 ⑨ 기타로 분류했다.

이를 개념적 층위로 분류하면 민생담론의 많은 주제는 민생치안, 민생경제, 민생현안, 민생우선, 민생국정, 민생의정인 중분류로 범주화 할 수 있고, 이들은 민생문제, 정치행위, 그리고 신문사의 비판이 담긴 요구인 대분류로 묶을 수 있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민생담론의 주제별 분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민생담론의 주제	민생문제	민생치안	민생안전 민생사범 민생위협
		민생경제	민생물가
		민생현안	민생안전 민생입법 민생법안 민생대책
	요구	민생우선	민생으뜸 민생전념 민생주력 민생위주 민생중시 민생전념 민생불만 민생회복 민생해결 민생 살리기
	정치행위	민생국정(행정)	민생안정 민생개혁

			민생사정(査正)
		민생의정	민생체제 민생정국 민생국회 민생정당 민생회담 민생협력 민생합의 민생국감 민생대책회의
		민생외면	민생뒷전 민생실패 민생표류 민생따로 민생실종
		민생투어	민생행보 민생탐방 민생현장

<표 3> 민생담론의 주제별 빈도

주제	빈도	백분율
민생치안	108	23.7%
민생경제	43	9.5%
민생현안	56	12.3%
민생우선	75	16.5%
민생국정	22	4.8%
민생의정	71	15.6%
민생외면	44	9.7%
민생투어	8	1.8%
기타	28	6.2%
합계	455	100%

3. 민생담론 주제의 정부별 분류

<표4>~<표8>은 민생담론의 주제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 하는 것인지를 알아 보기위해 분석기간인 25년간의 자료를 정부별로 나눈 것이다.

- ① 노태우 정부(1988년 2월 25일~1993년 2월 24일)
- ② 김영삼 정부(1993년 2월 25일~1998년 2월 24일)
- ③ 김대중 정부(1998년 2월 25일~2003년 2월 24일)
- ④ 노무현 정부(2003년 2월 25일~2008년 2월 24일)
- ⑤ 이명박 정부(2008년 2월 25일~2013년 2월 24일)

<표 4> 노태우 정부(1988년 2월 25일~1993년 2월 24일)의 민생담론 주제별 빈도

주제	빈도	백분율
민생치안	65	68.4%
민생경제	8	8.4%
민생현안	4	4.2%
민생우선	5	5.3%
민생국정	4	4.2%
민생의정	3	3.2%
민생외면	4	4.2%
민생투어	0	0
기타	2	2.1%
합계	60	100%

<표 5> 김영삼 정부(1993년 2월 25일~1998년 2월 24일)의 민생담론 주제별 빈도

주제	빈도	백분율
민생치안	24	51.1%
민생경제	6	12.8%
민생현안	0	0
민생우선	3	6.4%
민생국정	9	19.1%
민생의정	1	2.1%
민생외면	4	8.5%

민생투어	0	0
기타	0	0
합계	47	100.0%

<표 6> 김대중 정부(1998년 2월 25일~2003년 2월 24일)의
민생담론 주제별 빈도

주제	빈도	백분율
민생치안	2	4.1%
민생경제	2	4.1%
민생현안	6	12.2%
민생우선	9	18.4%
민생국정	3	6.1%
민생의정	15	30.6%
민생외면	9	18.4%
민생투어	3	6.1%
기타	0	0
합계	49	100%

<표 7> 노무현 정부(2003년 2월 25일~2008년 2월 24일)의
민생담론 주제별 빈도

주제	빈도	백분율
민생치안	5	4%
민생경제	18	14.5%
민생현안	20	16.1%
민생우선	31	25%
민생국정	4	3.2%
민생의정	23	18.5%
민생외면	15	12.1%
민생투어	2	1.6%
기타	6	4.8%
합계	124	100%

<표 8> 이명박 정부(2008년 2월 25일~2013년 2월 24일)의
민생담론 주제별 빈도

주제	빈도	백분율
민생치안	12	8.6%
민생경제	9	6.4%

민생현안	26	18.6%
민생우선	27	19.3%
민생국정	2	1.4%
민생의정	29	20.7%
민생외면	12	8.6%
민생투어	3	2.1%
기타	20	14.3%
합계	140	100%

<표 9> 민생담론의 주제별*정부별 교차분석

			정부별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전체
주 제 별	민생 치안	빈도 (건)	65	24	2	5	12	108
		주제별의 (%)	60.2%	22.2%	1.9%	4.6%	11.1%	100.0%
		정부별의 (%)	68.4%	51.1%	4.1%	4.0%	8.6%	23.7%
	민생 경제	빈도 (건)	8	6	2	18	9	43
		주제별의 (%)	18.6%	14.0%	4.7%	41.9%	20.9%	100.0%
		정부별의 (%)	8.4%	12.8%	4.1%	14.5%	6.4%	9.5%
	민생 현안	빈도 (건)	4	0	6	20	26	56
		주제별의 (%)	7.1%	.0%	10.7%	35.7%	46.4%	100.0%
		정부별의 (%)	4.2%	.0%	12.2%	16.1%	18.6%	12.3%
	민생 우선	빈도 (건)	5	3	9	31	27	75
		주제별의 (%)	6.7%	4.0%	12.0%	41.3%	36.0%	100.0%
		정부별의 (%)	5.3%	6.4%	18.4%	25.0%	19.3%	16.5%
	민생 국정	빈도 (건)	4	9	3	4	2	22
		주제별의 (%)	18.2%	40.9%	13.6%	18.2%	9.1%	100.0%
		정부별의 (%)	4.2%	19.1%	6.1%	3.2%	1.4%	4.8%
	민생 의정	빈도 (건)	3	1	15	23	29	71
		주제별의 (%)	4.2%	1.4%	21.1%	32.4%	40.8%	100.0%

		정부별의 (%)	3.2%	2.1%	30.6%	18.5%	20.7%	15.6%
	민생 외면	빈도 (건)	4	4	9	15	12	44
		주제별의 (%)	9.1%	9.1%	20.5%	34.1%	27.3%	100.0%
		정부별의 (%)	4.2%	8.5%	18.4%	12.1%	8.6%	9.7%
	민생 투어	빈도 (건)	0	0	3	2	3	8
		주제별의 (%)	.0%	.0%	37.5%	25.0%	37.5%	100.0%
		정부별의 (%)	.0%	.0%	6.1%	1.6%	2.1%	1.8%
	기타	빈도 (건)	2	0	0	6	20	28
		주제별의 (%)	7.1%	.0%	.0%	21.4%	71.4%	100.0%
		정부별의 (%)	2.1%	.0%	.0%	4.8%	14.3%	6.2%
	전체	빈도 (건)	95	47	49	124	140	455
		비율 (%)	20.9%	10.3%	10.8%	27.3%	30.8%	100.0%

* $\chi^2=265.279$, $df=32$, $p=.000$

<표4>~<표8>에서 주의 깊게 볼 점은 90년대와 2000년대에 걸쳐 있는 김대중 정부로 넘어가면서 민생치안의 사례는 급격하게 줄어들고 의정행위에 대한 사례가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정치인의 대민행보를 일컫는 ‘민생투어’란 신조어도 이 시기에 등장 했다. 연구자의 예상과는 달리 ‘민생투어’를 주제로 한 사례는 신문의 다른 장르에 비해 빈도가 상대적으로 현저하게 적게 나타났다. 경제와 관련해서는 노태우 정부와 김영삼 정부, 노무현 정부가 이외의 정부와 비교해 다소 높은 빈도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각각 90년대 초의 통화증가율에 따른 물가상승, IMF 사태, 한미자유무역협정(FTA) 협상과 관련해 무관하지 않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사례의 수적인 차이에도 불구하고 시간에 따른 빈도는 정부별로 뚜렷한 특징을 보이고 있다.

제5장 민생담론의 비판적 분석

분석에 앞서 연구자가 가지는 문제의식중 하나는, 최근 신문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신문과 신문을 비교하는 것에 묻혀 신문의 전체적인 담론이 시사하는 사회

적 의미에 대해 소홀 했다는 것이다. 한겨레신문의 창간이후 이른바 진보와 보수를 가르며 정치적이고 대립적인 메타담론으로서의 연구가 팽배했다고 볼 수 있다. 담론이 주는 사회적 기능과 의미를 가능한 한 ‘신문사가 지향하는 이데올로기’의 심급위에서 조망 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민생담론은 국가단위의 신문전체를 대상으로 살펴보아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민생은 곧 국가 구성원인 국민들의 삶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데올로기가 사회 내에서 작동하는 것이라면 같은 주제의 민생담론이라도 한국의 사회와 미국의 사회는 분명 다를 것이라 예상 할 수 있다.

푸코는 분할과 배제는 이미 권력의 작용이라고 말한바 있다. 즉 담론에서도 어떤 의미가 배제되고, 어떤 의미가 선택되어 지배적으로 작용했는가에 따라서 권력의 문제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권력관계를 대전제로 견지하면서 보다 미시적인 실천의 예로, 신문에 의해 주제를 가진 담론이 생산되고 수용되고 해석하는 과정에 있어, 그러한 담론생산의 관행에 이의가 없다고 가정한다면 그 담론생산의 체계는 이어지는 재맥락화 속에서 안정되었다고 할 수 있다. 신문의 담론은 그런 안정에 기인하여 제도적·경제적으로도 최소의 비용으로 재생산된다. 즉 민생담론이 정부에 대한 감시기능으로서 그 논조의 성향이 비판적이라 할 때, 비판이라 함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피력하는 것이므로, 그것이 옳은 것으로 관행화 된다면 사회에서 역시 당연한 상식으로 통용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당연한 상식들이 민생담론에 있어서는 어떤 의미로 해석되고 있는지, 나아가서 이런 의미 해석이 왜 내면화 되어질 수 있는 것이고, 시간에 따라 어떤 변화를 보이고 있는지, 민생담론을 통해 메타적인 관찰시점으로 되짚어보자는 것이다. 이것을 아우를 수 있는 접근법은 “모든 텍스트의 모든 부분은 동시에 표현하고, 정체성을 설정하며, 관계를 설정한다는 것이다(Fairclough, 1995).”

제1절 민생담론의 표현

“담론의 분석은 그 단위인 텍스트의 언어와 ‘짜임새(texture)’에 대해 세부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 텍스트의 언어학적 분석은, 음성적, 어휘적, 문법적, 그리고 거시구조적/도식적 차원을 포함하여 많은 차원에서의 분석을 포함한다(Fairclough, 1995).”

어휘들을 명사화 하는 것은 신문에서 기사를 읽지 않고도 본문의 내용을 유추하게 할 수 있다. 이는 헤드라인에서 자주 사용되는 것으로 신문의 오랜 관행이기도 하다. 자료수집에서 가장 부각되는 것은 민생과 관련한 접합이다. 우선 표제어에 드러난 합성어가 눈에 띈다.

① <u>민생치안</u> 이래서야	국민일보 1988-12-28
② <u>민생물가</u> 확실히 잡아야	경향신문 2002-08-27
③ ' <u>민생 전념</u> ' 또 빈말이어선 안 된다	동아일보 2004-08-24
④ ' <u>민생 안정</u> ' 실천 뒤따라야	한겨레신문 2002-01-17
⑤ ' <u>민생국회</u> ' 되도록	국민일보 1998-05-02
⑥ <u>민생 표류</u> 방지할 것인가	경향신문 2003-11-12
⑦ 이런 ' <u>민생투어</u> ' 할때인가	한국일보 2000-08-11

위의 표제어들은 주격조사가 없는 명사적인 용법으로서 주체를 지칭하는 직접적인 진술이 없음에도, 관계적인 가정으로 표현되었다. 그러나 이처럼 주체들이 생략되어 있어도 우리는 무엇이 무엇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지 의식적인 추론과정 없이도 해석이 가능하다. 밑줄 친 합성어에서 '민생'이 포함됨으로 이를 단서로 주체와 대상의 교량적인 연결이 가능한 것이다. 그러므로 위의 제목에서 민생을 제거하면, 텍스트로 표현되는 국민과 정부·정치권에 대한 담론의 내적관계부터 단절된다. 페어클로우는 이를 두고, 사회의 구성원들이 텍스트를 산출하고 해석하기 위하여 사람들이 이끌어내는 기억자원²⁷⁾을 이용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하였다. 텍스트의 형식적 속성들은 담론분석의 관점에서 보면 텍스트 산출과정에 대한 흔적으로 간주 될 수 있고 해석과정의 단서들로 간주 될 수 있다. 위와 같은 경우를 의미해석의 입장에서 엄밀히 따지면 후자에 가깝다고 할 수 있겠으나 결국 해석과 생산은 상호작용이라는 것이 된다. 즉 사람들이 이끌어내는 기억자원은 사람들의 머릿속에 들어 있다는 의미에서 인지적이지만, 사회적 기원을 지닌다는 의미에서는 기억자원이 사회적이라는 것이다(Fairclough, 2001). 담론에서 이런 기억자원의 형성은 장기적인 언어의 맥락에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는데, 이는 그 시기의 담론에서, 각 신문이 지향하는 바에 의해 안정적으로 작동하게 하려는 의도가 반영된 담론실천의 결과이다. 이는 곧 담론생산자의 설정에 의한 재맥락화로 이데올로기적인 지위가 안전해지며 재생산이 용이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어휘의 사용이 가능해 진다.

또한 각 신문사간의 가치판단은 상이해도 특정한 시기에 같은 주제를 공유할 수 있는 것은 신문사간의 모니터를 통한 비판기제의 맥락화로 인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아래는 비슷한 시기에 발화된 민생담론의 주제들이다. 민생 문제는 많은 것을 포함하고 있음이 틀림없다 그런데 유독 그 시기에는 하위주제

27) '구성원들의 기억자원(members' resources)' - 장기기억 속에 저장해 놓은 표상의 원형(낱말의 모습, 문장의 문법형태, 서사이야기의 전형적 구조, 대상과 사람들의 유형에 대한 속성, 특정한 상황유형 속에서 사건들의 기대된 연결체 등)을 말한다(Fairclough, 2001).

의 설정에 있어 연발성이 강한 경향이 있다. 그러니까, 신문사의 이데올로기는 다를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시기의 큰 틀은 벗어나지 않음으로 해서 서로간의 주제를 안정화 시킨다.

민생치안 무엇이 문제인가 (서울신문 1989-12-07)

민생치안... 실행을 보고 싶다 (한국일보 1990-01-12)

민생치안 무엇이 달라졌나 (중앙일보 1990-02-08)

민생치안 처방이 없는가 (국민일보 1990-02-10)

‘시국’은 있고 ‘민생’은 없는 치안 (한겨레신문 1990-02-11)

민생치안 하나만이라도 (경향신문 1990-03-20)

민생외면한 텅빈국회 (국민일보 1998-05-13)

민생 외면하는 ‘식물국회’ (경향일보 1998-06-27)

뒤늦게 민생 챙기는 국회 (서울신문 1998-08-08)

국회 民生 챙겨라 (서울신문 1998-08-24)

민생외면 장외투쟁 중단하라 (서울신문 1998-09-14)

민생담론은 발화시기의 중요한 사회적 사건이나 쟁점에 대해 다룬다는 점에서 근거성에 기인하며, 비판적임과 동시에 대체로 부정적인 논조를 보여주고 있었다. 민생담론은 비판의 대상이 주로 정부와 정치권이었다. 김용진(1997)은 한국과 미국의 신문사설에서 ‘근거성’을 중심으로 개진한 논증의 표현에 대해 비교했다. 결과에 따르면 한국과 미국의 신문은 언어 내적으로는 서로 비슷하고 안정적인 글쓰기 규범을 보이는데 반하여 서로 간에는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논증에 대한 근거성은 한미간에 뚜렷한 차이를 보임으로써 미국신문의 사설이 한국 신문의 사설에 비해서 직접적인 주장이나 강한 주장을 억제하는 글쓰기의 규범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하였다. 특히 한국의 사설은 ‘must’류와 같은 적극적 근거성 표현을, 미국의 사설은 ‘may’류와 같이 소극적 근거성 표현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김용진(2003)은 조선일보의 신문사설 제목을 대상으로 한 사회언어학적 분석에서, 1979년부터 1999년까지 21년간에 걸쳐서 정치, 경제, 사회 등의 내용을 어떤 비율로 다루었으며 정부 당국을 직간접적인 청자로 삼은 사설의 제목은 얼마나 되며, 어떤 언어 형식으로 표현되었는지를 조사 하였다. 직간접적인 대상이 정부인 경우는 거의 대부분의 경우 그 내용이 정부의 정책이나 활동에 대한 비판임을 알 수 있다고 하였다. 그의 사례에서, 화자가 어떤 대상에게 싸가지²⁸⁾운 운 할 수 있다는 것은, 이것을 사회언어학으로 판단한다면, 화자가 그 대상에 대

해서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조선일보의 사설이 정부, 여당, 공무원에 대해서 직접 시비를 가리는 일이 이 기간 동안에 꾸준히 증가하여 1979년도에는 여덟 개중 하나(12%)이던 것이 1999년에 이르러서는 거의 두 개 중에 하나(44%)가 정부에 대한 것이었다고 분석했다. 정부 정책에 대한 진단과 ‘비판’이라는 기존 담론의 틀에서 정부 정책에 대한 지시와 ‘질책’이라는 새로운 담론의 틀로 옮겨갔음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표 10> 사설의 청자가 정부인 경우 (단위: %)

1979년	1984년	1989년	1994년	1999년
12	21	37	39	44

신문 사설제목의 사회 언어학적 분석 김용진(2003)

민생담론은 민생 문제의 설정²⁹⁾-정부·정치권의 평가와 질책-제시, 기대, 촉구 등과 같이, 비교적 단순한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를 페어클로우(1995)가 언급한 ‘장르의 도식적 관점(schematic view)’³⁰⁾의 틀에 대입하면 제목+ 도입부분(문제, 사건)+ 위성(정부·정치권의 평가와 질책)+ 요약(요구)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다음은 문제에 대한 부정적인 비판의 사례이다. 민생문제를 해결해야한다는 관점에서 민생담론은, 치안·경제문제 등이 발생하는 것은 주로 정부와 정치권의 책임에 있는데, 그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므로 인해서 민생문제가 불거진다는 것이다.

① 민생치안... 실행을 보고 싶다. (한국일보 1990-01-12)

좁도독은 좁체 명함도 내밀기 어려운 난세가 되었다. 범죄의 흉포화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폐강도 조직폭력 인신매매 살인 마약 등 끔찍한 강력사건이 율 틈조차 없이 벌어진다. 정부가 민생치안을 바로잡겠다고 철석같은 공약을 한 게 어디 한두번인가 범죄와의 투쟁은 한계를 그을 수 없다. 칼을 뽑았으면 끊임없이 추적하여 없애버린다는 가시적 위력을 발휘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 래야 국민이 믿고 마음놓고 살아갈 수 있다. 민생치안이 더이상 속수무책일 수는

28) ‘정말 싸가지 없는 세상’ (조선일보 1999-12-15)

29) 넓은 의미로서 ‘문제의 제기’ 보다는 신문사가 사회문제를 민생과 결부시킨다는 점으로 설정이 란 용어가 적합하다.

30) 장르에서 여러 단계로 구성된 도식구조(schematic structure)는 의무적이나 선택적인 것으로써 완전히 고정되거나 부분적으로 고정된 순서로 존재한다. 가령 도입부분은 기사 전체의 요지를 요약하며 고정되어 있는 반면에 위성단락들은 독립적이며 순서를 재배열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Fairclough, 1995)

없는 일이다.

② 물가와 민생,경제 (국민일보 1993-10-02)

서민 주부들의 잔주름이 늘어간다. 물가가 뿔박질하고 있어서다. 시장 가기가 겁난다고 한다. 물가가 하루가 다르다. 이를 피부로 느껴야 하는 주부들의 고통은 이만 저만이 아니다. …… 그렇기 때문에 신경제에서는 과거 어느 정권 때보다 강하게 물가안정을 역설해왔다. 하지만 이 약속은 갈수록 빛을 잃어가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대신 주부들의 원성이 높아 간다. 정부는 이 순간에도 연말 억제선 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물론 그렇게 된다면야 얼마나 좋은 일인가 …… 물가를 잡고 경제를 살려야 한다. 민생을 안정시켜야 한다. 정신 바짝 차려야 할 때다.

③ 政爭에 발목잡힌 민생현안 (서울신문 1999-08-11)

우리 경제는 지금 재벌개혁 부진으로 금융불안이 우려되는 등 각 부문에서 위기를 예고하는 경고등이 켜진 상황이다. 중산·서민층은 소득 감소와 상대적 빈곤감으로 심한 좌절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막대한 경제적 손실과 인명피해를 초래한 수재(水災)까지 겹친 실정이어서 민생현안의처리가 매우 시급한 시점이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이 총리 직무와 아무런 관련 없는 내각제 유보문제를 새로이 정치쟁점화, 정국긴장을 고조시키는 것은 국가경제의 위기상황에 대해 전혀 책임의식이 없는 ‘정쟁지향 일변도’의 소아병적 정치행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추경예산안은 물론 다른 주요 민생법안들도 시기를 늦춤 없이 챙김으로써 책임있는 야당의 자세를 보이길 거듭 당부한다.

다음은 행위에 대한 비판의 사례이다. 행위의 관점에서 보면 민생담론은 정부 혹은 정치권 또는 정부와 정치권의 갈등으로 인한 행위 그 자체가 문제라는 것이다. 민생문제는 배경화 되고 정치적 갈등이 전경화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④ '선거최면'에서 민생정치로 (중앙일보 1998-07-23)

여든 야든 재.보선 결과를 과장되게 해석해 스스로를 충동해서는 안된다.

여당이 분을 못참고 여소야대를 강압적으로 바꾸려 또 가속기를 밟거나, 야당이 승리라고 자만해 정권의 개혁진로에 잘못된 브레이크를 걸거나 해서는 안될 것이다. …… 여야는 입만 열면 정치개혁을 외치면서도 손과 발로는 아예 개혁의 싹을 몽개버린 꼴이 되고 말았다.

뇌사(腦死) 국회를 내버려두고 선거관으로 달려갔던 정치권의 뻔뻔스러움에 유

권자들은 분노했으며 이는 60%의 투표포기라는 충격으로 나타난 것이다. …… 여야는 이제 선거취면 (催眠)에서 깨어나 차분한 마음으로 민생정치에 다가서야 한다.

⑤ 민생이 政爭 다음인가 (서울신문 1999-08-10)

국회를 열어 놓고도 정작 정쟁(政爭)에만 몰두하는 여의도 ‘정치 풍토병’은 언제나 고쳐질 것인가. 제206회 임시국회 역시 여야의 그같은 고질을 또 다시 드러내주고 있다. 이번 임시국회는 13일로 회기가 끝나게 되어 있지만 정작 시급한 수재(水災)복구대책이나 민생관련법안 등의 심의는 별 진전없이 표류하는 양상이다. …… 이렇게되면 당연히 민생현안은 뒤로 밀리게 되어 있다. ‘위’에서 정치현안이라는 총론에만 매달리니 소속 의원들은 ‘각론’에 정성을 쏟을리 없다. …… 여야간의 정치적 대치나 대립이 없을 순 없겠다. 하지만 민생을 보살피고 수재민(水災民)의 고통을 덜어주는커녕 정쟁만 일삼는 정치는 국민적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⑥ 이런 '민생투어' 할때인가 (한국일보 2000-08-11)

정치인들은 만나라 사람인가. 의료대란·현대사태 등으로 나라가 곧 숨 넘어갈듯 긴박한 상황인데도, 정당 대표들은 한가롭게 ‘민생투어’를 하고 있고, 여당은 최고위원 경선에 앞서 돈선거 파문을 일으키는가 하면, 야당은 야당대로 정쟁거리를 만들어 내느라 여념이 없다. …… 시국이 어려울때 그 해결의 실마리를 푸는 일에 누구보다 앞장서야 한다. 그러나 의사들이 또다시 전면 파업에 나서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도 국회는 오불관언이다. …… 정치의 본령은 제반분야의 갈등을 해소하는 데 있다. 정치권이 하루빨리 본령을 찾도록, 특히 정치 지도자들이 각성해 주기를 바란다.

위의 사례들은 주제를 포함한 도입과, 주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위성단락이, 결국 국 문제와 행위가 번갈아가며 요약인 결론에 이르는 구조를 보이고 있었다. ‘장르적 도식관점’에 도입과 위성단락의 배열이 바뀌어도 결국 정부·정치권의 질책과 민생정책 개선에 대한 함의가 담긴 요구로 귀결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민생담론은 주제어(표제어)와 본문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사례가 빈번했다. 그러한 사례는 주제어에 대한 상술(詳述)이,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을 추정하고 단언하는 위성단락에 의해서 혼탁해지는 결과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언론사가 민생을 매개로 주로 정부와 정치권에 대해 비판을 가하는데 치중한 결과로 이해된다. 민생담론이 실제로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전통적인 매체의 환경감시 기능으로서는 이를 당연하게 생각 할 수 있지만, 민생문제가 정

치적인 비판의 기제로만 부각됨에 따라 ‘본질적인 민생문제’³¹⁾가 등한시 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페어클로우(1995)의 말을 빌리면 대중매체가 사회문제들에 의해서 그 문제를 푸는 사회적 처방이 있다는 생각. 관념을 정부·정치권에 있다고 봉쇄 해 버리며, 그러한 특권을 마치 신문이 맡고 있는 것처럼 맥락화(contextualization)된 어휘의 재생산에 의해서 공식적인 담론의 적법성을 유지한다는 것이다.

Hall 외(1978:61)는 ‘공식적인(official) 관점을 대중적인 언어(public idiom)의 형태로 전환’ 하려는 매체의 경향을 언급 하였는데, 이런 전환은 공식적인 관점들을 충분한 지식이 없는 사람들도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만들 뿐만 아니라, 이런 공식적인 관점들을 서로 다른 대중들의 이해력 범위 안에서 자연스러운 것으로 만들면서 대중적인 힘과 반향을 갖게 한다는 것이다(Fairclough, 1995, 재인용).

지금까지 비판의 부정적인 면을 따져보았다면 아래의 사례에서는 긍정에 대해 민생담론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분석기간의 자료에 의하면 민생정책과 정치권의 활동에 대한 긍정을 나타내는 문장에서, 본용언으로 완결되는 ‘옳다’ 같은 완전한 긍정보다는 어근이 중의적인 단어로써 평가, 의미, 이례, 관심 등과 함께 보조용언을 사용한 어휘를 많이 사용하고 있었다. 자주 사용되어진 어휘로는 용언에서 보조형용사, 보조동사, 서술성 의존명사를 사용한, 평가 할만하다, 평가할 만한 일이다,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의미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등이다.

① 예산과 민생법안 처리 더는 차질 없게 (동아일보 2004-12-22)

그동안 국회가 헛돈 이유는 분명하다. 국가보안법 등 이른바 ‘4대 법안’ 때문이다. 이들 법안 처리를 둘러싸고 대립하느라 정작 해야 할 일들을 방치해온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여야 지도부가 대화와 협상을 통해 이들 법안을 다루기로 한 것은 평가할 만하다.

② 아직도 민생대책회의인가 (중앙일보 2002-01-17)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를 확대하고 생계비 지원금을 인상하며, 청소년 실업 해소를 위해 1분기 중에 관련 예산의 40%를 조기 집행한다는 발표도 있었다. 이런 대책들은 지난해 하반기 이후 뚜렷이 악화되거나 새로 부각된 문제들을 추려 현실적인 대응 방안들을 마련한 것이라는 점에서 평가할 만한 부분이 있다.

31) 민생문제는 물가, 노동, 빈곤, 교육, 여성, 가족, 노인문제 등을 함의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실제 민생담론이 주제로 삼고 있는 민생문제는 민생치안, 민생경제, 외에는 민생사안으로 포괄해 버리는 경향이 있어 민생담론에서 ‘실제 국민의 생활’의 구체적인 면은 찾아보기 힘들다.

③ 민생법안 자유투표 폭 넓혀야 (서울신문 2003-08-01)

여야가 어제 의원들의 자유투표 방식으로 외국인고용허가제법을 통과시킨 것은 평가할 만한 일이다. 입법 내용 자체도 그러하거니와 당론을 결정하기 어려운 현안에 대해 의원 개개인의 양식과 판단에 기초해 처리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있는 시도였다고 하겠다.

④ 민생을 앞세우는 후보의 자세 (서울신문 1992-05-30)

대통령선거운동을 일정기간 유예시키기 위해 여야대통령후보회담을 갖자는 김영삼 민자당후보의 28일 제안은 시기적으로 매우 의미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문맥에 비추어 해석할 때 긍정을 함의하고 있지만 모호하게 흐리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 이런 어휘들은 접미사와 보조용언을 사용하여, 다행스럽다, 다행스런 일이다. 다행스런 처사라 할 것이다. 등이 있다.

⑤ 선 민생법안 후 교섭단체 (중앙일보 2000-07-28)

국회법 개정안 날치기 처리로 꼬인 정국이 큰 가닥에서 풀려가는 모습이어서 다행스럽다.

⑥ 민생회담, 합의보다 실천이 중요하다 (세계일보 2007-02-10)

참여정부 4년간 청와대와 여야가 정파 이익과 당리당략만 앞세운 정쟁에 골몰하는 사이에 국정이 표류하면서 국민의 살림살이는 갈수록 어려워지고, 국민의 정치 불신은 극에 달해 있다. 정치권이 뒤늦게나마 민생 해결에 힘을 모으기로 한 것은 다행스런 일이다.

이러한 어휘는 긍정의 대상이 되는 사건을 흐리고, 그동안의 맥락으로 배경화(backgrounding)된 정계의 무능을 같이 이끌어 내어 독자로 하여금 ‘그나마 다행이다’라는 인식을 심어주려는 의도가 담겨있다고 볼 수 있다. 비록 우리사회에서 통용되는 긍정의 의미지만, 이는 분명히 어정쩡하고 인색한 긍정이다. 반면에 아래의 부정적 진술의 어휘들은 미래에 대한 우려 즉, 일어날 수 있는 일조차도 단호하고 단정적인 진술을 보이고 있다. ~스럽다. ~만하다. ~등의 보조용언이 포함된 어휘를 사용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① 정치국판에 쏟는 힘을 민생에 돌려라 (한국일보 2006-12-04)

여기에 내년 2월부터 지하철과 버스요금에 일제히 오르고, 시중 금리인상 추세에

따라 대출에 대한 이자부담도 크게 늘어날 것이 분명하다.

② 민생경제가 급하다 (국민일보 1991-05-13)

만약의 경우 올해에 또다시 지난 89년과 같은 험악한 노사사태가 재연된다면 우리경제는 파국을 면하기 힘들다.

③ ‘시국’은 있고 ‘민생’은 없는 치안 (한겨레 신문 1990-02-11)

공통여당에 반대하는 학생·노동자·농민의 거센 저항이 일어날 것이 예상되는 오는 봄에 경찰력이 그쪽으로 더 쏠리면_민생치안이 지금보다도 소홀해질 것이 걱정이다.

제2절 민생담론의 주체·정체성

1. 민생담론의 주체제약

데카르트 이후 “주체는 인식론적으로 우위에 있었지만 존재론적으로 우월한 것은 오히려 대상이다(김석영 2012).“ 인식대상은 인식주체가 없이도 존재하지만 주체는 대상 없이 존재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흔히 맑스식의 구조주의자라고 불리는 알튀세르(1994)는 ‘나바로³²⁾ 와의 대담’에서 주체는 이데올로기 적이며 자신의 실존에 앞선다고 했는데, 이는 그 실존을 창설하는 구조들의 효과로서의 주체를 가리킨다고 하였다. 주체는 이데올로기적인 사회적 관계에 예측해 있거나 그것에 의해 결정 되는 개인으로서의 주체라는 것을 언급한다(Althusser, 1994) “주체라는 용어는 좀 더 익숙한 용어인 ‘개인’이라는 용어와 매우 다른 의미를 갖는다.”(sarup, 1993) 사럽에 의하면 푸코, 데리다와 같은 후기구조주의자들은 인간이 이해해온 개념들의 해체를 동반하며, 주체를 두고 무의식적이라 할 수 있는 의미화 작용의 산물로 생각하게 만든다고 한다. 그것은 의식을 탈 중심화 하는 것으로써 주체라는 범주내의 의식과, 동의어인 자아 개념에 의문을 제기한다(sarup, 1993 ; Fairclough 2001).

푸코는 주체가 보편적으로 존재 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방식으로 만들어 진다고 보는데, 바로, 근대 주체가 특정한 역사적 시기에 특정한 권력 장치를 통해 만들어진 산물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그는 역사를 뛰어넘은 인간 본질 대신에 역사적

32) 멕시코 철학교수 페르난다 나바로와의 인터뷰(1983년)

특정단계에서 특정하게 생성되는 주체를 문제 삼는다(양운덕, 2003). 주체에 대한 견해들은 “현대로 접어들면서 이러한 사고의 경향이 확대되어 주체와 대상이 각각 실체화 되고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대상인 객관과 분리될 수 없는 관계적 개념으로 규정되었다(김석영, 2012).”

의식의 산물이 개인의 인식 내에서만 존재한다면 그 자체는 ‘관계’에서 무의미하다. 텍스트의 의미작용 역시 그러한데, 이를테면 담론의 문장구조 내에서 반어의 와 같이 텍스트 내적인 관계에 의해서 의미가 형성되는 준거를 가지지 않는다면 그 역시 상호텍스트의 관계가 불가능한 것에 머무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즉 긍정이 없다면 부정이 없다는 것과 같다. 텍스트로 이루어진 담론 역시 주체의 설정과 대상의 관계가 없다면 사회적 의미작용(signification)이 불가능한 국소적인 의미화 작용일 뿐이라는 것이 성립된다.

그런데 민생담론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담론의 구조에 따라 주체(subject)와 대상(object)의 단위를 구분하고 규정지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주체와 대상은 그 의미가 광의적이고 추상적이기 때문이다. 또한 관점(능동, 수동)에 따라 서로 뒤바뀔 수 있는 것이므로 상호의존적인 관계에서 그 의미를 가진다, 특히 대상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포함 하지 않는 사물일수도 있으므로 이 연구에서의 주체와 대상은 모두 이데올로기 내에서, 인위적인 것과 동시에 사회적인 것으로 전제하고, 능동적임을 함의하는 행위주체(agents), 사회적주체(social subject),³³⁾ 피동적인 성격을 가진 대상인 피동작주(patient)³⁴⁾로 제한하겠다. 행위주체는 담론의 생산주체이며 곧 신문사를 의미한다. 사회적주체는 신문사의 관점에서 정부·정치권, 저항단체 등을 지칭한다. 피동작주는 국민으로서 민생담론에 의해 구별되는 지위인데, 행위주체와 사회적주체들을 제외한 그 나머지 대상³⁵⁾으로 정리 할 수 있겠다.

정체성이란 독립적인 주체의 존재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담론의 실천에 있어서는 대상과 관계를 설정하고 비판을 하기 위해서 주체의 존재라고 할 수 있는 정체성이 형성되는 것은 필연적이다. 신문사가 민생담론에서, 어떤 주체의 존재를 설정하고 대상으로 지칭하여 비판하는 것은, 담론이, 관계의 설정이 필연적

33) 사회적 주체는 담론유형으로 마련된 주체지위(subject positions) 속에 제약되어 있다는 점에서 피동적이지만 주어로서의 사회적 주체는 능동적 존재로서 행위주체이며, 행위속에 인과적으로 깃들여 있는 능동적 존재가 된다(fairclough, 2011. p89).

34) 포괄적인 범위의 대상과는 달리 이 용어는 ‘환자’, ‘피동작주’로 번역되고 있다. 이는 동작을 당하는 대상으로서, 능동적이지 않다는 의미로 이해된다. 이 연구에서는 ‘민생’이라고 칭해지는 주체에 대해서 그람시(gramsci, 1971)의 ‘아래로부터의 자발적인 동의’를 함의하면서 잠재적 대항의 가능성을 지닌 주체로 한정한다. 미디어 담론(bell & garrett 1998, p41 참고)

35) 민생담론에서는 ‘국민들의 생활’에 해당하는 민생이 신문사에 의해서 도출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인 의미의 전달 혹은 증계에 라는 점에 있어서, 대체로 민생과의 동일시를 표방하고자 하는 신문사의 통념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아래의 사례를 통해 어떤 주체가 설정되고 있는지 살펴보겠다.

① 민생치안… 실행을 보고 싶다 (한국일보1990-01-12)

그렇다면 민생치안은 속수무책인가. 한국일보는 「불안해서 못살겠다」는 국민여론을 대변하여 범죄추방캠페인을 연초부터 펼치고 있다. 한가한 이야기가 아니다. 현실은 너무 다급하다. 이러다간 정부의 존립에 대한 회의마저 생겨나지 않으리라 장담하지 못할 것이다.

② 경제난,물가고,민생고 (한국일보 1996-02-02)

그럼에도 정치권의 「신선놀음」에 경제와 물가동향,민생은 뒷전의 문제로 외면당하고 있는 듯이 보인다. 정치권의 관심은 소모적인 정치게임과 다가오는 4월의 총선에 집중되고 있다. 「상황」이 꼭 파국을 향해 자리잡아가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렇다해서 결코 안심할 수 없다는 것도 분명하다.

민생담론은 민생문제들을 등한시 한다는 사회적 주체인 정치인들에게 ‘민생은 힘들다’는 암묵적 가정을 설정하고, ‘그 가정이 지향하는 정부·정치권의 순기능’에 반하는 행위에 대해 비판을 가한다. 이것은 곧 민생과의 유대관계를 표방하는 것으로, 정당성을 갖는다. 그러나 권력관계와 신문사의 가치판단에 따라 대상으로서 민생에 대한 해석의 입장을 달리하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 아래는 그 중의 대표적인 예이다.

③ 화염병시위와 민생치안 (세계일보 1990-03-21)

운동권학생들은 이번주를 「총학생회 진군기간」으로 정해 앞으로 가투가 한층 격렬해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때문에 그동안 주택가나 유흥가의 방범순찰에 투입됐던 경찰병력이 다시 시위진압에 동원되는 악순환이 되풀이 될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④ 민생에 고통주는 과격시위 (동아일보 2001-06-04)

민주노총과 일부 대학생들의 대규모 도심 시위는 민생에 고통을 주고 시민들을 불안하게 만들었다. 주말 민주노총의 시위에서는 다시 화염병이 등장했고 도로 무단점거로 서울역 마포 신촌 일대의 교통이 마비됐다.

⑤ ‘쇠고기’를 넘어, 民生 회복에 國力 모으자 (동아일보 2008-06-23)

시위대는 그제 밤 서울시가 광화문광장 공사용으로 보관하던 모래주머니를 불법으로 꺼내가서 도로 한복판에 ‘국민토성’이라는 것을 쌓아놓고 시위대가 경찰버스에 올라가는 계단으로 이용했다. 그 모래도 국민 공유의 재산이다. 도심에서 새벽까지 확성기를 동원해 벌인 시위 때문에 인근 주민들은 잠도 못 자고 정서적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⑥ 민생 위협하는 촛불, 또 켜나 (세계일보 2008-10-25)

서울 청계광장의 도심이 오늘 또다시 대규모 촛불로 어지럽게 될 것 같다. 반정부 성향의 ‘민주주의와 민생을 위한 새로운 연대기구’가 출범식을 갖고 사그라진 촛불을 다시 켜다고 한다. ‘광우병 국민대책회의’가 겉포장만 바꿔 반정부 투쟁으로 방향을 바꾼 것이다.

살펴본 바와 같이 민생담론에서 대상이 되는 주체는 정부, 정치권, 저항단체, 등으로 설정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주체에서 민생담론이 표현하는 ‘민생’이란 외연을 만족할 수 있는 주체를 어떻게 규정 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 될 수 있다. 예컨대 한미자유무역협정(FTA) 쇠고기 협상과 관련한 범국민적 촛불시위는 자신과 가족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위협을 우려한 자발적이고 범국민적인 시민참여 운동이었다. 시위대도 일반 국민 중에 한사람일 것이다. 그것이 순수한 시민의 참여이든 세력들을 동반한 반정부 집단이든 민생치안을 위협하기 때문에 민생이란 범주에서 배제되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국민의 입장에서 역설적으로 오히려 그러한 권력관계로부터 위협받은 꼴이 된다. 연구자는 시위대와 정부의 관계에서 무엇이 옳고 그르다는 것을 따져보자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거시적으로 각 신문사가 지향하는 가치판단이기 전에, 금지, 분할과 배제의 권력이 작용했다는 것이다. 민생이란 주체의 지위가 신문의 담론에 의해 설정되고 있다. 위와 같이 대항적인 시민주체를 제외한 국민이 민생담론의 수혜자가 된다면, 즉 피동작주(patient)인 소극적 대상으로 분류된 민생이 힘들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해석할 때, 이면에 있는 권력의 의견불일치들과 신문사의 구별짓기에 의해서라는 것이고, 이러한 관행을 공식화 시키는 과정으로 의심 해 볼 수 있는 것이다. 민생이 피동적이어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이데올로기를 내면화 한 것임을 알 수 있어야 한다.

다음은 담론생산자를 지칭하는 정체성은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민생담론은 비판의 대상들이 되는 주체를 명시적으로 제시하고 있었다. 신문사설은 개인의 입장이 아닌 신문사 편집부의 평가적 신념 혹은 사측에서 합의된 의견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그렇다면 입장에 따른 의견을 피력하는 것은 주체가 형성된 것이며 ‘우리’라고 칭할 수 있는 정체성을 가질 수 있다. 민생담론도 사설

이므로 그러한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다. 그런데 민생담론에서 ‘우리’라는 정체성은 신문사를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국민을 의미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 다음 사례를 보자

① 민생치안 체제의 상시화 (한국일보 1991-07-02)

시국 경찰과 일반 경찰이 따로 있을 수 없는게 원칙인데, 불행히도 우리는 그렇지 못해왔다. 자못 만성적이었던 반체제 및 반정부적 과격투쟁의 물결 앞에서 민생을 보살피야 할 경찰의 일손들이 정국 안보나 체제안보쪽으로 집중되다 못해 시국 경찰을 사실상 별도로 운영하게끔 하기에 이르렀다. 「백골단」으로 알려진 사복체포조 등 시국 전경을 민생치안 활동에 투입키로 한것은 여러모로 우리의 관심을 끈다.

② 민생치안의 확립 의지 (서울일보 1990-03-20)

따라서 이번 개각이 정말로 민생치안이 확보되는 하나의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 싶다. 이 문제만은 그만큼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에 모두가 인식을 같이해야 한다. 인사가 있고 장관이 바뀌었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그것을 슬하게 보아왔다.

① 에서 전자의 ‘우리’는 경찰 혹은 넓은 의미에서 국가의 경찰력으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시국경찰과 일반경찰을 분리한 경찰행정이 우리사회의 치안문제를 소홀히 해왔다는 것이다. 그러나 후자의 ‘우리’는 그것을 수식하는 주체가 모호하므로 해석하기 따라서 ‘우리’는 신문사의 입장이 될 수도 있고, 국민의 입장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이런 표현은 ‘우리’라는 의미를, 자사의 입장에 암시적으로 국민의 뜻을 동반시켜 담론의 정당성을 유지하려는 것으로 간주 할 수 있다. 적어도 90년대 초중반의 민생담론에서의 민생은 일반 국민을 의미하며 물개성적이며 피동적인 주체로 가정되어 왔다. 그러한 민생의 입장을 신문사가 떠맡고 있는 것처럼 담론의 실천은 사회적으로 관행화 되어 왔다.

2. 개인의 정체성 회복과 저항

푸코에게 있어 담론의 근거는 바로 사회체계 내에서 권력과 지식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가이다. 그에 따르면 실제로 권력은 유일한 지점에 고정되어 있지 않고 사회체(le coprs social)안에서 다양하고 두루 존재하는, 조각나 있고 분산되어 있는 힘들의 그물망이다. 이러한 미시권력들은 사회안에 분산되어 있고 항

상 운동하는 다양한 세력 관계로 포착된다. 그리고 권력은 지배·피지배란 이분법에 의해서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지점들에서 밑으로부터 만들어진 체계이다. 따라서 권력은 동질적이지 않고 유동적인 관계의 수많은 지점들에서 작용한다(양운덕, 2003). 조금 더 나아가 급진주의 관점에서 라클라우와 무페(2001)는 담론에 대해 민주주의체제하에서의 종속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저항들을 접합하는데 사용될 수 있을 때에야 비로소 여러 다양한 종류의 불평등에 대한 투쟁이 이루어질 수 있는 조건들이 존재하게 된다고 하면서, “비록 우리가 푸코처럼 권력이 있는 곳에 저항이 존재한다고 단언할 수 있다고 해도, 저항의 형태가 지극히 다양할 수 있다는 것 역시 인정해야한다.”고 하였다.

다양한 형태의 저항은 결국 국민 개개인의 목소리들일 것이다. 민주주의의 궁극의 총착점이라 할 수 있는 직접민주제는 동시에 유권자의 의견을 수용할 수 있는 인프라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에 근대이후 절차적민주주의, 속의민주주의, 전자민주주의, 참여민주주의와 같은 대안적 용어를 계보로 갖가지 이론들이 여전히 쏟아져 나오고 있다. 그 중의 일환으로 뿔뿔리 민주주의와 같이 지역공동체 형성에 비중을 둔 새로운 대안모델이 나왔는데, 우리사회에서는 지방자치제를 일컫는다고 할 수 있다. 이론적인 관점에서는 다양한 의견에 따른 갈등의 해소방안이, 중앙이 아닌 지역공동체에서부터 절차적으로 순조롭게 이행 된다면 우리 사회의 정치적 갈등은 줄어들 것이다. 그러나 이 역시 한계가 있었다. 김정훈(2006)은 뿔뿔리 민주주의에 대해서 국민의 생활세계 차원에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지만 이마저도 주민자치가 되지 못하고 여전히 소수의 기득권이나 지역 토호세력에 의한 자치가 되었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기존의 대안들 역시 다양한 세력 간 갈등들을 소화하기에는 역부족인 실정이며, 이미 사회·문화적으로 다양한 의견을 피력하는 개인들을 수용하기에는 이제 진부한 제도가 된 듯하다.

개인들의 부상과 더불어 생활세계를 통해 기존의 사회체제에 저항하는 다양한 움직임들이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개인들은 다양한 목소리들에 대해 통제력을 행사하는 기존 언론매체를 우회해서 SNS와 실시간 인터넷방송 등을 통해 즉각 소통한다. 개인은 이제 정부·정치권과 기성 언론매체의 진술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게다가 소수자운동, 외국인노동자, 여성운동, 환경운동 등으로 공동체를 형성하기도 하며, 세계적인 국제인권기구에 연대하기도 한다. 개인의 의식은 이제 탈영토화 되고 있다. 민생은 매순간 변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을 아우르는 가치는 무엇보다 개인의 정체성 회복의 산물이라 할 수 있는 ‘자기결정’(self-determination)이다. 기존 지배담론의 저항이라는 관점에서 주체 지위의 일방적인 설정으로 인해 발현되지 못했던 자기결정의 가치가 실현되도록 하는 것이 오늘날 새롭게 부상하는 개인들의 욕망일 수 있을 것이다(김정훈, 2006,

참고). 사적이익을 추구하는 개인의 논의나, 나아가서 다양한 주체들이 접합된 연대들의 특징은 그들의 의견에 대한 여러 가지 시도들을, 새로운 도구인 뉴미디어에 기반하여 언론의 제도적 장치 외부에서 발현 하는데 있다고 할 수 있다. 신문은 이제 사회변화로 인해 국민 일반의 목소리를 ‘민생’이란 명목으로 주체지위를 규정할 수 있는 권위에 도전을 받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예로 촛불운동³⁶⁾을 들 수 있다. 그중 2008년 한미자유무역협정(FTA)와 관련한 광우병 사태는 그 규모로 말미암아 비록 정치에 관심이 없는 국민들에게도 초미의 관심사였다고 할 수 있다. “한미 FTA협상은 2006년 2월 협상 출범 선언 후 1년 2개월만인 2007년 4월에 협상이 종결되었다(김종영, 2011).” 그러나 협상에 대한 저항의식을 가진 일부 국민과 대항지식인들은 트위터 등을 통해 30개월 이상의 쇠고기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광우병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고 불평등한 협상이라는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르면서 사회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했다.

2008년 촛불운동은 5월 2일부터 8월 15일까지 서울 청계광장에서 제1차로 2만여 명의 시민이 참여한 것을 시작으로 제100차 촛불운동까지 전국적으로 수백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촛불 집회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조직되지 않은 다양한 인터넷동호회나 토론회 단위의 참여, 가족 단위의 참여, 종교인 등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이 자발적이고 다양한 형태로 참여했다(홍성태, 2008). 촛불운동에 대한 학문적 평가는 정치적 성향에 따라 해석을 달리 할 것이다. 한편으로 촛불운동이 한국정치에서 새로운 참여민주주의의 가능성을 보였다고 평가한다면 다른 한편으로는 촛불운동이 민주주의 질서를 파괴하고, 대내외적으로 정부의 권위를 추락시킨 한국사회의 위기 상황으로 간주할 수도 있을 것이다. 촛불운동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존재하지만 가장 주지할 점은 바로 다양한 주체들의 등장이었다.

촛불운동은 전통적인 정치참여에서 소외되거나 무관심했던 시민들이 대거 참여했다는 점에서 상이한 항의 주체의 특성을 보였다. 가장 주목 받은 참여자들은 초기 촛불운동 참여자들의 절반이상을 차지한 ‘촛불소녀’로 불리던 10대의 여중고생들과 가정 내에서 아내와 엄마로서의 역할로 제한되어 온 ‘유모차 부대’로 불리던 주부들이다(Chhibber, 2002, 고경민·송효진, 2010, 재인용). 이처럼 참정권이 없는 10대 여중고생들과 정치적 무관심층으로 분류되어 오던 주부들의 참여는 비관습적인 참여 영역에서의 새로운 정치참여 주체의 등장을 시사하고 있다(고경민·송효진, 2010). 또한 기존의 권력에 맞서는 지식인들이 등장하기도 했

36) 이 의식에 대해 지칭하는 연구자들의 명칭이 촛불운동, 촛불시위, 촛불집회 등으로 일관성 있게 표현되고 있지 않았다. 이 연구에서, 제시한 인용문들의 문맥에 비추어 볼 때 어떤 것을 사용해도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촛불운동’으로 통일해서 사용하도록 하겠다.

는데 이들은 촛불운동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주요개념들이 경험적 기반의 세밀한 관찰과 자료수집에서 도출되기 보다는 정치적 요구와 이념적 편향에 의해 추상적인 개념으로부터 끼워 맞추거나 급조된 사회학으로부터 도출되었다고 지적한다.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는 과학기술지식의 판단은 시민들이 고통 받고 있는 경험과 상치되는 경우가 많았으며, 이에 시민들은 자신들이 직접 공식적인 전문지식을 반박하거나 대항전문가들과의 연대를 통해 정부-전문가 집단의 공식입장에 대항하였다(김종영, 2011). 촛불운동의 참여자들은 개인주의적 성향이 높게 나타났으며, 40대 이하가 참여자의 95%정도를 차지했다. 또한 참여자들의 학력은 월등히 높았고 소득수준은 중상위에 위치한다고 했다(조기숙·박혜윤, 2008).

연구자가 가지는 문제의식은 당시 촛불을 거론했던 민생담론이 이런 다양한 사회주체들을 설명하고 포용할 만큼의 역량을 갖추지 못했으며 굳이 그럴 이유를 필요로 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했다고 보는 것이다. 촛불운동과 관련한 민생담론들은 동아일보의 사례들이 두드러졌는데 우선 아래의 사례들을 보자.

① ‘쇠고기’를 넘어, 民生 회복에 國力 모으자 (동아일보 2008-06-23)

국민이 ‘불법폭력 誘導세력’ 단호히 배격할 때
정부의 추가협상 성과에도 불구하고 그제 저녁부터 어제까지 계속된 철야
시위에서는 경찰버스를 맞췄로 끌어내고 버스에 불을 지르려는 시도까지 있었다.
방화하려던 사람은 시위대에 불잡혀 경찰에 넘겨졌지만 이른바
광우병국민대책회의가 계속 시위를 부추킨다면 심각한 불상사가 생기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촛불집회와 시위를 주도하고 있는 대책회의는 사실상
불법과 폭력을 유도하고 있다는 국민 각계의 분노 어린 시선을 따갑게 느끼고
정부를 겨냥한 무리한 무한투쟁을 끝내야 한다.

시위대는 그제 밤 서울시가 광화문광장 공사용으로 보관하던 모래주머니를
불법으로 꺼내가서 도로 한복판에 ‘국민토성’이라는 것을 쌓아놓고 시위대가
경찰버스에 올라가는 계단으로 이용했다. 그 모래도 국민 공유의 재산이다.
도심에서 새벽까지 확성기를 동원해 벌인 시위 때문에 인근 주민들은 잠도 못
자고 정서적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광화문과 시청 주변에 사는 주민과
직장인들은 통행권을 제한당하고, 인근 식당과 업소는 두 달가량 장사를 제대로
못할 정도로 영업권을 침해당하고 있다. 시위 참가자들은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표현의 자유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남의 생활권과 행복권을
해치면서 불법시위를 할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다.

정부는 기업과 민간이 불안감을 느끼지 않고 경제활동과 생업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한다. 그런데도 정부는 불법시위를 방치함으로써 법질서 수호자로서의 역할을 포기했다. 평범한 국민의 소중한 생활권이 침해되는 현실을 대책 없이 마냥 방치하는 정부는 정부라고 할 수도 없다. 사회 각계각층도 불법과 폭력을 유도하거나 이에 동조해 불법시위를 일삼는 세력을 단호하게 꾸짖고 배격해야 한다.

② 민생 위협하는 촛불, 또 커나 (세계일보 2008-10-25)

서울 청계광장의 도심이 오늘 또다시 대규모 촛불로 어지럽게 될 것 같다. 반정부 성향의 ‘민주주의와 민생을 위한 새로운 연대기구’가 출범식을 갖고 사그라진 촛불을 다시 켜고 있다고 한다. ‘광우병 국민대책회의’가 겉포장만 바꿔 반정부 투쟁으로 방향을 바꾼 것이다. 불법·폭력시위를 주도한 촛불세력의 투쟁 본색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셈이다. 불법 집회에 대해 정부가 엄정 대처했기에 주춤하던 촛불 집회가 얼마 전부터 준동했다. 촛불시위 주도 혐의로 수배된 8명이 조계사로 도피한 지 100일째를 맞아서다. 촛불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핵심 인물들도 잇달아 풀려나 세력 모으기가 쉬워졌다. 민주노총 등이 주축을 이루는 민민연은 현 정권과의 대척점 세력을 자처하고 있다.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방안과 종부세 인하 정책 등에 ‘제2의 촛불’을 지펴 투쟁 수위를 높여가겠다는 심산이다.

경제적 위기를 틈타서 정부를 궁지에 몰아넣겠다는 저의가 아닌지 의심된다. 국민 건강권 우려 차원에서 타올랐던 촛불의 순수성이라는 알맹이는 사라진 지 이미 오래다. 수입 소고기보다 더 무서운 중국발 멜라민 사태 등에 대해 촛불 한번 켜 적 있던가. 반정부 투쟁 세력만 남았다. 전문 시위꾼들의 반정부 촛불집회가 더 이상 호응을 얻을 수 없는 이유다.

모두가 힘을 합쳐도 세계 금융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지 불안에 떨고 있는 상황이다. 그들이 외치는 ‘반정부 구호’는 공허하게 들릴 뿐이다. 가뜩이나 힘겨워하는 민생에 위협이 될 것임은 자명하다. 순수성을 잃은 촛불은 국가경제에 시름을 더할 뿐이다.

진보 진영은 더 이상 촛불에 대한 향수와 집착을 버려야 한다. 경제적 사회적 위기 현실을 냉철하게 파악하고 민생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 모색에 나서기를 당부한다. 목적도 그렇거니와 법 테두리를 벗어난 촛불이 다시 커져서는 안 된다. 당국은 불법 집회·시위에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해 사회불안을 막아야 한다.

③ 폭력街鬪세력이 경제와 민생 혼돈다 (동아일보 2009-05-04)

지난해 광우병 불법 폭력시위로 국가에 일대 혼란을 초래한 과격 세력이 다시 ‘나라 흔들기’에 나섰다. 4월 18일 출범한 이른바 ‘촛불시민연석회의’를 중심으로 한 좌파세력은 광우병 시위 1년을 맞은 이달 2일 ‘촛불 1주년 행동의 날 행사’라는 미(未)허가 집회를 가진 뒤 서울 도심 곳곳에서 불법 시위를 벌였다. 하루 전인 1일 노동절 집회에 참석한 일부 복면 시위대는 도로를 점거하고 보도블록을 깨 경찰에게 던졌고 여자 경찰관을 억류했다. 시위 주도세력은 작년 5월부터 석달 이상 대한민국을 무법천지로 만든 ‘광우병 소동’을 재현하려는 의도를 드러냈다. 시위 현장에서는 “이명박 정권 퇴진” “현 정권의 독재에 맞서자” 같은 구호가 난무했다.

‘촛불시민연석회의’는 출범 선언문에서 “5월 2일을 ‘촛불 행동의 날’로 선포하고 이명박 정권 심판의 날로 만들겠다”고 선동했다. 노동절 시위를 주도한 ‘범국민대회조직위원회’는 이른바 ‘10대 요구사항’에서 경제위기를 빌미로 한 일방적 구조조정과 해고 행위 중단,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 중단,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전면 참가 방침 철회, 6·15 및 10·4선언 이행 등을 주장했다. 과격 좌파세력의 핵심 목표가 무엇인지를 보여준다. 이들의 주장대로 하면 부실기업은 늘어나고, 경제회복 속도는 더더지며, 결국 세계가 위기를 극복한 뒤에도 우리나라는 활력을 되찾지 못한 채 투자 소비 일자리가 모두 위축돼 민생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다. 이들 ‘시위대 권력’을 위해 경제 살리기를 포기할 수는 없다.

이들이 치켜세우는 ‘촛불의 정신’이란 합법적 선거를 통해 출범한 정권을 타도하겠다는 대선 불복(不服)운동에 다름 아니다. 이들은 왜곡, 과장된 정보로 국민을 선동하는 것도 서슴지 않았다. 공권력을 상징하는 경찰이 대의민주주의와 법치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불법 시위대의 폭행 제물(祭物)이 되는 나라에서 ‘독재 정권’ 운운하는 것도 어불성설이다. 북한이 군사적 위협에다 인질 협박까지 하는 상황에서 남북관계 경색의 책임을 우리 정부에 돌리는 것을 보더라도 이들이 어떤 세력인지 짐작할 만하다.

폭력가투(街鬪) 세력은 민생 개선을 외치지만 이들의 불법과 폭력 때문에 민생과 경제가 명든다. 2일 일부 시위대가 하이서울페스티벌 행사장을 점거해 무산시킴으로써 발생한 3억7500만 원의 직접 피해는 극히 일부일 뿐이다. 평화로운 한국 풍경을 즐기고 싶어 하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줄어들면 이 또한 민생 피해로 이

어진다.

시위 주동자들은 마스크와 복면을 쓰고 공공연히 폭력을 휘둘렀다. 국회는 복면 방지법안을 빨리 통과시켜야 한다. 정부는 작년에 보인 비검함을 되풀이하지 말고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해야 한다. 국민의 냉철함도 요망된다.

90년대의 맥락으로 볼 때, 당시 촛불운동의 사회적 상황이라면 주로 시국혼란을 우려한 민생치안 담론이 쏟아져 나왔을 것이나 그렇지 않았다. 이는 정치적 지형이 변화함에 따라 민생담론의 생산관행도 변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그러나 대상을 보는 눈은 변하지 않았다. 동아일보의 사례와 같이 민생담론은 다양한 사회주체들을 인정하지 않았다. 시민운동을 둘러싼 좌파적·급진적·진보적인 행위로 상정하고 부정적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거나, 이들과 민생 구별하고 있다. 이는 주체의 다양성을 무시한 결과이다. 신문에 의해서 다양한 시민사회의 주체가 단일하게 구별되어질 아무런 이유가 없으며, 촛불운동의 합법·불법성의 가치 판단을 신문이 결정 할 수는 없는 일이다.

우리사회는 군부독재에 체제에서 절차적 민주주의로 이행해오는 과정에서 많은 변화들을 경험했다. 그리고 대안체제로서 풀뿌리 민주주의에 입각한 지방자치제도와,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한 공론장형성과 관계한 수많은 이론들과 의견이 쏟아져 나온 것이 사실이다. 또한 그러한 의견들이 첨예하게 다루어지면서 우리사회의 대안이자 갈등을 부추기는 요소가 되기도 했다. 이렇듯 크고 작은 사건들과 함께 사회가 변하면서 민생담론 역시 변화 했다는 데는 이의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민생담론의 변화는 협소한 대상에 한정되었다. 즉 민생담론의 소재와 비판대상은 변했지만 그 대상이 정부와 정당, 단순화된 대항세력에 머무름으로써 다양한 주체를 수용하지는 못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그렇게 함으로써 이면의 권력은 묵시적으로 일관되고 가시적인 권력만을 공고히 해주는 기제가 될 수 있다. 현대 사회는 비약적인 통신기술의 발달로 실시간 소통이 가능해 짐으로 인해서 커뮤니티 형성, 저항담론의 발생과 분화가 용이해 졌으며 그에 따르는 과편화와 새로운 헤게모니 접합이 이루어지는 복합적인 장이다. 그런데도 민생담론은 여전히 이 대항의 주체들을 단순화해서 묶어 버리거나 일관함으로써 우리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들을 내는 기능은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바로 이것을 두고 민생을 표현하는 것에 대한 주체의 지위를 신문이 결정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민생담론이 변화하는 다양한 사회주체를 수용하지 못하고 주체와 관계를 제약하는 것은 신문지면이 가지고 있는 물리적 특성의 한계일 수 있다. 그러나 데스크의 경직성에 따른 교조적인 가치판단은 바뀌어야 한다.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오늘날 민생담론이 지칭하는 민생은 신문이 만들어낸 구별에 의한 허상이 될지도 모른다. 신문의

민생담론들은 다양한 주체를 수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제3절 민생담론의 사회적 관계와 변화

지금까지 논의에서는 페어클로우(1995)의 분석틀을 이용하여 신문사설의 민생담론이 민생의 문제를 설정하고 주로 정부·정치권인 대상에게 비판을 가해 왔으며 이때 대상과 독자에게 공식적인 담론의 정당성을 유지하기 위한 권위를 가진다고 했다. 그러한 담론실천 자체가 의심 없이 재맥락화(recontextualization)에 의해 관행화 되어 왔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언어의 맥락에서 통시적인 관점과 공시적인 관점의 분석양태가 다르듯이, 담론실천의 관행은 특정한 시점과 분석단위에 따라 그 결과가 다르게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맥락은 분석기간내의 통시적인 한에서 변화하는 모습이 가시적으로 드러날 수 있다.

분석에 앞서 언급하고자 하는 것은, 담론은 사회에서 비롯되며 사회로 영향력을 미쳐서 하나의 힘이 도출 된다는 것으로서, 한편을 배제할 수 없는 변증법적인 결과로 보아야 한다는 페어클로우의 의견이다. 담론의 단위인 텍스트는 사회적으로 형성 되지만 재생산적일뿐만 아니라 변형적인 방식에 의해, 사회를 형성하기도 한다. 또한 담론에서는 주체가 설정하기도 하고 설정되기도 하는 능동적인 측면과 피동적인 측면을 모두 포함 하고 있다. 담론은 사회구조들 상으로 효력을 지니고, 사회지속성 또는 사회변화에 대한 성취에도 기여한다. 권력관계 및 권력 갈등에 비추어 담론이 그러한 중요성을 지니는 것은 바로 담론과 사회구조 사이의 관계가 이런 방식으로 변증법적이기 때문이다. 사회구조는 담론을 결정해 줄 뿐만 아니라 담론의 생산물이 된다. 담론역시 생산자가 선행한 이데올로기의 해석이다. 그러므로 비판적 담론분석은 이데올로기에 내재한 신문사의 자의성을 인정한다. 또한 사회현상을 설명하는 연구에서 완전하게 한편의 입장만을 가져야 한다는 것에 대해 반박한다(Fairclough, 1995; 2001). 어떤 주제를 상정하는 담론이 사회와 떨어질 수 없는 관계라면 담론이 시사하는 함(含)의 도출은 각 신문사 이데올로기의 심급을 넘어 한 사회 내에서 신문 전체를 단위로 관찰 할 때 가능해질 것이다. 따라서 민생담론분석에 있어서도 가능한 한 많은 신문을 분석할수록 그 타당도는 증가 할 것이다. 연구자는 이러한 관점을 견지하면서 시간에 따른 담론과 사회적 관계들의 변화를 분석해 볼 필요성을 제안한다. 그러나 비판적 담론분석의 이론들은 한국사회를 설명하기 위한 담론분석의 단위적인 틀이 부재한 실정이라고 본다. 따라서 연구자는 민생담론의 주체어 분류에 의해 도출한, 민생담론들을 1987년 이후 민주화와 세계화에 따른 한국의 정치·경제의 전

환적 배경과 비교하여 분석 해볼 것을 제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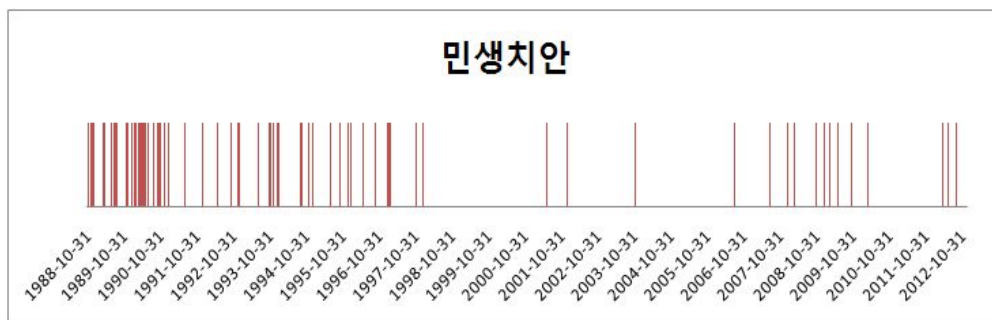
1. 민생담론의 정치사회적 관계와 변화

분석 자료에서 한국의 주요종합일간지가 ‘민생’이라는 거시적인 주제를 상정하고 그에 따른 하위주제들을 설정 하는 것은 한국의 민주화·세계화 과정이라는 거대한 사회적 흐름에 관계한다. 한국은 1987년 6월 민주항쟁이후 군부독재에 대항한 민주화 운동의 소산으로 대통령 직선제를 이룩하며 민주주의 사회에 한걸음 다가서게 되었다. 그러나 노태우 정부는 구권에 의한 정권의 계승이 완전히 종식되지 않은 민선군부정권으로서, 민주화의 염원이 채 가지지 않은, 과도기적 시대상황 이었다.

6·29선언이 나온 직후부터 시민사회 내에서 갖가지 요구가 분출하기 시작했다. 이 선언으로 권위주의 국가의 억압이 완화되자 그동안 억눌렸던 온갖 사회적 요구가 봇물처럼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요컨대 과거청산, 개헌이라는 과제를 앞에 두고 있었던 노태우 정부 시기에는 노동자, 농민 등 각종 기층집단이 기존의 성장위주 정책에 반대하면서 자신들의 권리와 몫을 주장하는 분배 갈등이 이 시기 갈등의 주된 양상이었다(조현연, 2006 ; 김일영, 2009).

특히 90년대 초는 민생담론이 마치 곧 치안문제인 것처럼 편중되어 재생산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시기 민생담론의 내용은, 민주화 이후 과열된 양상을 보이던 노동운동과 개헌과정, 과거청산을 촉구하는 시위대와 공권력의 갈등 등에 의해서 시국경찰에 인력을 빼앗기게 되므로 경찰력의 분리가 불가피하고 이러한 문제가 치안행정의 소홀함을 초래 했다는 것이다. 아래 <그림1>은 민생치안으로 분류한 담론들의 발생빈도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나열한 것이다. 80년대 말 전환적 혼란기의 사회분위기를 이어받은 90년대의 민생담론은 민생-치안으로 접합되는 주제의 빈도가 유다르다. 민생담론의 주제는 아래와 같이 시기별로 뚜렷하게 구분 할 수 있을 정도의 구조를 띄고 있다.

<그림 1> 시간의 흐름에 따른 민생치안 담론의 발생빈도



① ‘시국’은 있고 ‘민생’은 없는 치안 (한겨레신문1990-02-11)

경찰이 없는 것은 아니다. 거리마다 대형버스가 서 있고 그 안에는 많은 전경들이 있다. 노동쟁의 현장에서 112 신고가 들어오면 경찰이 재빨리 출동하여 노동자들을 강제 연행한다.

민생치안은 뒷전으로 물러나고 ‘시국치안’만 서슬이 퍼런 이 현실은 누구 때문에 빚어졌는가? 단순히 경찰만을 탓할 일이 아니다. 근본적인 책임은 현 정권에 있다.

치안은 나라를 편안하게 다스림. 또는 그런 상태, 국가 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보전함을 의미하는 것이지만.³⁷⁾ 이 시기의 치안이란 강도, 강간, 인신매매, 조직폭력과 같은 강력범죄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90년대 초중반 한국 신문의 민생담론은 이른바 민생안정의 중심이 치안에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즉 신문은 국민들에게 제반 치안문제 중에서 범죄의 증가가 특별히 심각함을 알리고 사회적인 분위기를 형성하는데 촉진자(facilitator)의 역할을 하며 재생산을 담당했다. 담론의 재생산은 사회와 상호관계를 가진다. 그런 점에서 담론은 여론을 형성하고 국가의 정책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설명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건은 1990년 10월 13일 노태우대통령의 ‘범죄와의 전쟁’ 선포이다.

② 민생치안 이번만은 기필코 (세계일보 1990-10-14)

노태우 대통령은 13일 우리의 공동체를 파괴하는 범죄와 폭력에 대한 전면전을 선포했다. 대통령이 직접 헌법이 부여한 모든 권한을 동원, 각종 폭력과 범죄의 공포에서 국민을 해방시키겠다고 약속한 것이다. 우리는 집권 후반기를 맞은 노태우대통령이 이미 극에 이른 사회악 소탕에 발벗고 나선 것을 때늦은 감은 있지만

37) 국립국어원, <표준대사전>, 2013.4.20 검색, <<http://stdweb2.korean.go.kr/main.jsp>>

환영한다. 대통령의 공약이 지켜져 우리 사회에서 폭력과 범죄가 줄어들고 국민들이 밝고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당시 대통령 노태우는 민생치안 확립을 위한 특별선언으로 '범죄와의 전쟁'을 발표했다.

이 선언의 주요 골자는 첫째, 국가의 공동체를 파괴하는 범죄와 폭력에 대한 전쟁을 선포하고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의 모든 권한을 동원해서 이를 소탕해나갈 것, 둘째, 민주사회의 기틀을 위협하는 불법과 무질서를 추방할 것, 셋째, 과소비와 투기, 퇴폐와 향락을 바로잡아 '일하는 사회', '건전한 사회'를 만들어나갈 것 등이었다.…… 범죄와의 전쟁이 선포된 지 2년 만에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등 5대 범죄가 선포 전에 비하여 5.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에서는 '범죄와의 전쟁 결과 폭력조직은 사실상 와해되었으며 매년 증가하던 흉악범도 감소 추세로 바뀌고 퇴폐·향락 분위기가 수그러드는 등 긍정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자체 평가했다.³⁸⁾

이토록 많은 민생문제 중에 민생치안이라는 이름하에 범죄사건과 시국의 혼란을 문제 삼는 민생담론의 의제는 최초의 민선민간 정부인 김영삼 정부의 시기에 도 다르지 않았다.³⁹⁾ 이는 국가주도의 제도적인 사고들이 맥락에 따른 담론의 재생산으로 이어져 온 것으로 해석된다. 즉 국가주도 체제를 비판하지만, 국가의 강력한 행정적 통제를 원하는 아이러니 말이다. 민생-치안의 접합⁴⁰⁾은 국민과 정부의 통제를 연결해주는 민생담론의 권위적인 기능을 함의하고 있기도 하다.

90년대 후반부터는 민생담론에서 민생치안이란 주제의 빈도가 현저하게 줄어든 것을 표에서 알 수 있다. 그렇다고 범죄가 현저하게 줄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닐 것이다. 1990년부터 2010년까지의 총 범죄발생건수에 따르면 인구의 증가와 같은 통계학적 변화를 감안하더라도 범죄발생은 전반적으로 크게 줄지 않았다. 이것은 분석기간 내에서 늘 발생했던 범죄로서, 담론의 생산관행과 실체가 필연적인 관계가 아님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⁴¹⁾ 게다가 오늘날 민생담론에서 강력범죄사건과 민생치안을 잘 결부시키지 않는 것은 그러한 맥락이 변했음을 의미한다. 민생담론의 문제설정에 본질적인 용법은 없다는 것을 반증하

38) 두피디아, 2013, 3, 25 검색, <http://www.doopedia.co.kr/doopedia/master/master.do?_method=view&MAS_IDX=101013000852512>

39) <표4>, <표5> 참고

40) 라클라우와 무페가 언급한 개념을 넓은 의미로 차용했다(Laclau & Mouffe, 2001).

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신문사 이데올로기의 지형이 변했음을 의미한다.

<표 11> 경찰청 범죄발생 및 검거현황

년도	총 범죄 발생건수	년도	총 범죄 발생건수
1990	1,147,752	2001	1,860,687
1991	1,185,648	2002	1,833,271
1992	1,210,786	2003	1,894,762
1993	1,304,349	2004	1,968,183
1994	1,309,326	2005	1,733,122
1995	1,329,694	2006	1,719,075
1996	1,419,811	2007	1,836,496
1997	1,536,652	2008	2,063,737
1998	1,712,233	2009	2,020,209
1999	1,654,064	2010	1,784,953
2000	1,739,558		

(전국) 통계 ID : TX_132_2009_H1001 (재구성)

민주화 이후 정부는 ‘책임과 신뢰 부재의 정치’의 전형을 보여 왔고, 기성 정당들은 사회적 요구에 기반을 둔 정책대안을 거부해 왔으며, 국민의 대표라고 하는 국회의원들은 정치적 대의를 위해 헌신하기보다는 자신들이 개인적인 정치적 자산을 키우는 데에만 관심을 쏟았다. 민주화 이후 부활한 지방자치도 주민 자치에 기초한 기관 자치 속에서 민주주의 강화에 기여하기 보다는, 오히려 지역 토호들의 이권 다툼장이 되면서 민주주의에 역행해 왔다. 사익추구의 무책임 정치와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정치의 대안적 전형 창출이 지체되는 상황에서 정치 일반에 대한 국민들의 혐오와 반감이 더욱 커지는 것을 어찌면 당연한 일이다. (조현연, 2006)

위의 인용문과 같이 대한민국의 정부와 국회가 생긴 이래 정치의 불신에 대한 우려와 비판이 없었던 때는 없었다고 말할 수 있다. 정부와 국회에 대한 언론의 불신도 결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닐 것이다. 김재한은 대한민국 국회는 진지하게 비판되거나 아니면 조롱거리로 회화되고 있으며 국민들뿐 아니라 외국 언론에서도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했다. 미국의 잡지 Foreign Policy는 2009년 "세계에서 가장 무법한 의회들(The World's Most Unruly Parliaments)" 5개 가운데 첫 번째로 대한민국 국회를 소개한바 있다고 밝혔다. 국회와 국회의원에 대한 보도는 주로 네거티브 프레임에서 작성되고 있다는 연구도 있다(최선열·김학수 2002)⁴²⁾. 언론은 특성상 주로 부정적인 면을 보도하게 되는데, 유권자의 언론 접

근성이 그 유권자의 국회 불신 정도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그의 연구에서는 주로 신문이나 인터넷을 이용할수록 의회를 더 불신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고 했다(김재한, 2012).

민생담론 역시 마찬가지로 민생문제를 두고 정부와 국회의 불신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던 시기는 없었다. 김대중 정부에 들어서도 여전히 불신과 함께 다양한 민생현안에 대한 요구의 담론이 부상하기 시작했는데, 특이한 점은 대상의 변화⁴³⁾이다. 분석자료의 초기에는 치안사건에 대한 정부와 정책의 불신에 있었다면 김대중 정부에 들어서 부터는 국회와 정당의 의정행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정책에 대한 불신을 피력하고 요구하는 점은 변함이 없지만, 그 빈도가 증가했으며 정책의 비판에서 정당의 행위 자체를 문제 삼기 시작했다. 이렇듯 민생담론은 정당의 모습을 결정하고 표현하는데, 정당의 의정행위에 대해서는 식물국회, 날치기법안 통과, 개판정치, 개판국회, 저질정치, 당리당락, 등의 어휘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

<그림 2> 시간의 흐름에 따른 민생의정 담론의 발생빈도



42) 이 연구는 우리나라 신문의 국회보도의 부정주의를 체계적인 내용분석을 통해 밝히고자 하였다. 대상은 15대 국회 전체, 16대 국회 일부(2011년 8월 15일까지)이며 조선일보와 한겨레신문의 기사 775개를 내용분석 하였다. 국회관련기사는 신문에서 매우자주, 비교적 크게, 심층적으로 다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내용에 의하면 뉴스의 주제로 정당활동의 비중이 너무 크고 주 취재원으로 고위당직자, 국회의원에 의존하는 등 정당중심 출입처 제도로 인한 보도의 질적 한계를 드러내었다. 파행국회상황에서의 국회보도는 정상국회 보도보다 더 정당중심적이었고, 심층적인 기사는 국회운영 상황과 관련없이 부정적인 경향을 보여주었다. 국회파행이 국회보도의 부정주의를 더 강화할 것이라는 가설 역시 대체로 지지되었다. 주로 국회파행이 뉴스거리의 중심이었고 부정성 강화 틀짓기는 국회운영 상황과 일관성 있는 관계를 보여주지 못했다. 갈등적 요소들이 화합이나 중립보다는 대립구도의 틀로 기사화 되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파행국회 상황에서 대립구도의 틀이 더 많이 나타났다. (논문의 요약을 재구성)

43) '민생의정'의 담론은 <표4>, <표5>의 빈도에서와 같이 노태우정부가 5%, 김영삼 정부가 2.1%였는데 김대중 정부 들어서 30.6%로 크게 증가했다. 초기 민생담론의 비판 대상이 국회와 정당의 의정행위가 주된 비판대상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분석기간 전체의 빈도 분포는 <그림 2>를 참고

① 민생 외면하는 '식물국회' (경향신문 1998-06-27)

야당인 한나라당이 또다시 소집한 임시국회가 문만 열어 놓은 채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국민들은 야당인 한나라당이 정상 운행이 불가능한 줄 알면서도 왜 계속 국회를 소집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다. 또 집권당인 국회의나 자민련이 국회를 보이콧하고 있는 이유도 잘 안다. 두말할 것도 없이 당리당락 때문이다. 정치인들이 국회를 그들의 놀이터쯤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은 다음에야 이럴 수는 없다.

② '민생국회' 조속히 다시 열어라 (경향신문 2000-07-27)

자민련을 교섭단체로 만들어주기 위한 민주당의 국회법 개정 강행 통과 시도는 결국 임시국회만 파행으로 몰고갔을 뿐이다. …… "16대 국회에선 절대 없을 것" 이라던 날치기 처리를 강행한 것 자체가 문제지만 운영위에서만 통과시켜놓고 결국 손을 들고 만 여당의 모습은 너무나 무책임하고 무능하다.

③ 국회파행에 방치된 민생현안 (문화일보 2000-07-20)

그러나 여당이 야당의 국조권 발동주장을 끝까지 거부해 국회파행이 계속되도록 방치하는 것 역시 책임있는 자세가 결코 아니다. …… 여당지도부는 남의 얘기하듯이 '개관국회'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국회정상화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해야 한다. 자민련과의 연대만을 의식해 '힘의 논리'로만 밀어붙이려 해서는 안된다. 시급한 민생현안들이 방치되고 있다. 여야 정치권의 정치력 발휘를 촉구한다

④ 민생 외면하는 국회 (중앙일보 2000-07-28)

며칠 전 개각을 하고 대통령이 신신당부를 하면서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지만 호전의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결국 민의 수렴장으로서 국회가 나서야 하는 지금이다. 하지만 돌아가는 모양새는 그렇지 못하다. 임시국회 소집 나흘 만에 문을 닫고는 뒷전에서 엉뚱한 싸움질만 하고 있다. 여야 스스로가 내뱉은 대로 '개관 정치' '저질 정치'가 이어지고 있다.

⑤ "민생 의정"으로 성난 민심 달래야 (세계일보 2006-11-17)

본격적인 대선 정국을 앞두고 벌어지는 정계 개편 논의나 차기 주자들의 물밑 경쟁도 국민의 눈에는 정권욕에 눈먼 정치인들의 권력 놀음에 지나지 않을 뿐이다. 그런데도 정치권은 흥흥한 민심을 아는지 모르는지 당리당락을 앞세운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다. 입만 열면 민생을 강조하면서도 갈수록 깊어지는 국민의 시름은 외면하고 있다. 정치권의 이 같은 행태는 국민의 정치 불신만 키울 뿐이다.

말하자면 정당의 입장만 고집해서 당리당략에 의한 정쟁에 얽매이지 말고 초당적 대처로 민생을 우선하며 국회정상화에 임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가 각종 민생현안을 상정하고 법제화 하는 노력은 곧 민생과 결부되는 일이기 때문에 국회의 기능 상실은 사회문제가 된다. 그러므로 민생담론 역시 국회·정당에 대한 문제들을 표현하고 있는데, 위의 사례들은 신문사의 입장에서, 민생문제에 대한 정당의 책임과 기능이 담론 재생산의 주동력이자 비판의 소재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분석에 따르면 노태우 정권에서 김영삼 정권에 이르기까지 민생문제의 중심은 바로 민생치안이 메우고 있었다. 그리고 치안에 대한 강력한 행정적 통제를 정부와 관계당국에 요구 하였다. 그렇다면 김대중 정부 이전의 정당은 왜 민생담론의 빈번한 소재가 되지 못했을까? 조현연(2006)에 의하면 한국의 정당체제는 이념 및 정책적으로 별 차이가 없는 인물이나 지역중심의 정당들로 이루어져 있었다고 한다. 산업화와 민주화를 거쳐 이미 상당 정도의 다원주의 사회로 발전한 한국의 정치경제 현실에 부합하지 못하는 전근대적 정당체제였다는 것이다. 이전의 역대 정당들은 사회적 기반이 약하여 사회의 특정 계급이나 계층, 세력을 대표하지 못하였고, 또 강한 인물중심주의로 인하여 보스의 정치적 운명과 함께 정당의 생존이 좌우되었으며 이것이 정당의 정체성 결손과 정책 부재로 나타났다(조현연, 2006). 한국의 정당은 단지 국가 권력의 장악 여부를 둘러싸고 명목상 여당과 야당의 차이가 있을 뿐이었다는 것이다.⁴⁴⁾

그러나 오늘날은 “보수의 입장에서 과잉민주화를 논할 만큼 우리사회의 민주화는 진척되었다(조현연, 2006). “민주주의는 기본적으로 권력분립을 전제로 하는데, 수많은 거부점(veto point)의 존재로 민주정부는 과단성(decisiveness) 측면에서 취약성을 보이고 있다(양제진, 2007). 특히 의정행위에 있어 의견과 갈등에 의한 스펙트럼(spectrum)과 위상차(phase difference)가 민주화의 발전만큼 넓고 깊어졌다고 말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의정행위를 통해 발현되는 ‘이상적인 사회의 지향점’이 있다고 가정 한다면 이러한 중심으로의 회기가 혼란스러워 진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결국 언론의 자유도 이와 궤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연구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사회가 변하고, 민주주의가 진척되어도 민생담론은 여전히 민생의 주체지위의 제약을 초연하게 행사하고 있다. 국민의 생활을 준거로, 정부에서 국회로 비판의 대상만 옮겨갔을 뿐이며, 오히려 혼란스런 민주화로 인한 권력게임에서 정작 민생은 배경화 되고 있다. 여전히 민생을 피동적인 대상으로 지위를 부여하고 있다.

민생담론의 정치적 변화는 첫째, 민주주의 발전과정의 변화에 따르며, 둘째, 비

44) 조현연은 2004년 17대 총선을 계기로 한 민주노동당의 국회 진출을, 민주화에 따른 한국정당의 전환시점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전환시점 이전에 주어진 정당의 전환기적 기반들은 김대중 정부부터라고 할 수 있다.

판의 대상이 정부에서 정당으로 변하고 있고, 셋째, 다양한 시민사회를 포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으로 정리 할 수 있다. 이 같은 변화의 토대가 되는 사회 환경을 <그림3>으로 나타내었다.

<그림 3> 정치영역에서의 민생담론 변화과정



2. 민생담론의 사회경제적 관계와 변화

위기론은 현실 상황에 대한 실증적 분석 차원을 넘어 이데올로기적 담론의 성격을 갖는다. 경제위기론 역시 경제상황의 곤란과 그러한 곤란을 초래한 경제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그 구조개편에 따른 부담을 계층·계급별로 배분하는 대안으로 끝을 맺기 마련이다. 1989년에 들어 수출부진이 심화되면서 이러한 위기론이 부상 하였고 전환점인 1990년 전후로는 ‘노사분규로 중공업 등 중심산업 위기’ 라는 식의 총체적 난국설이 대대적으로 유포되었다(김상조, 2004). 위에서 말하는 전환점에 대해서는, 이른바 80년대 중후반의 3저 호황

에서 90년대로 들어서며 3고의 위기를 맞았다는 한국의 90년대 경제담론에서도 찾아 볼 수 있겠는데, 중요한 점은 이것이 세계화의 에너지와 맞물리게 되는 한국경제위기론의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수출부진으로 인한 경상수지의 적자는 환율을 오르게 하고, 원화 가치가 하락되므로 물가는 오르게 된다. 그런 현실을 반영한 것일까? 90년대의 민생경제는 주로 물가와 통화증가율에 대한 내용의 민생담론이 잦은 빈도를 보이고 있었다.

① 물가비상과 민생안정 (서울신문 1990-04-03)

물가가 몹시 불안정하다. 국민생활안정의 전제가 되는 물가가 올들어 석달동안 3.2%나 상승하고 앞으로 전망도 불확실하여 심히 걱정이 된다. 1·4분기중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연율로 환산하면 12.8%로 두자리 수에 있다. 물가상승이 이대로 진행되면 81년이래 10년만에 최대의 물가상승이 예상되기도 한다.

② 확고한 대책으로 민생 안정을/경제운용 더‘표류’하면 안된다 (한겨레신문 1991-12-10)

그토록 자신 있다고 큰소리치던 총통화증가율이 지난달에 20%를 넘어, 연말 억제선이 사실상 무너지게 되었다. 중소기업에의 대출을 비롯한 정책금융과 추곡수매자금의 방출 등 재정부문의 지출이 급증하여 그러한 결과를 빚어냈지만, 이달에도 이와 같은 팽창기조는 그대로 지속될 듯하다. 이런 불안을 초래한 가장 큰 책임은 무엇보다도 재정이 져야 한다.

③ 민생물가를 안정시켜라(중앙일보 1993-10-02)

9월중 물가가 이미 연말억제선에 육박했다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추석을 계기로 냉해로 인한 농수산물 가격상승에 책임을 떠넘긴채로 두면 물가상승 추세는 수그러들지 않을 것이다. 여기에다 아직 복병으로 잠재해 있는 것이 통화공급의 확대에 의한 잠재유동성의 증가다. 실명제 후속조치로 풀린 돈이 제대로 금융권으로 환수되지 않을 경우 인플레이 압력은 내년까지 이어져 거시경제운용의 중요한 제약요인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④ 물가와 민생,경제 (국민일보 1993-10-02)

먼저 대책을 세워야한다. 이제 큰소리나 자신감만으로는 국민들을 설득하지 못한다. 물가상승요인은 산적해 있다. 통화증발만 해도 그렇다. 돈이 너무 풀린다. 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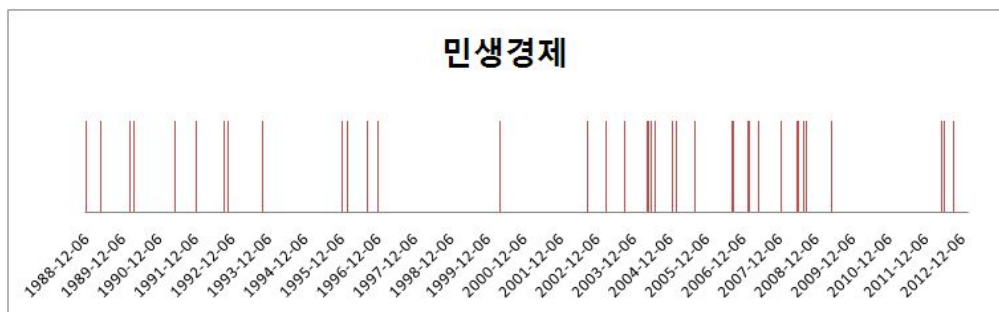
리지 않을 수 없다. 경제희생작업과 실명제 정착의 과제가 이를 불가피하게 해주고 있다.

⑤ 경제난,물가고,민생고(국민일보 1996-02-02)

무엇보다 물가의 뿔박질이 문제다. 특히 1월중 국민의 생계와 직결된 농수산물 등 기본생필품, 서비스요금 등이 물가를 주도했다. 정말이지 이런 식이면 민생이 위협받는다. 그럼에도 당국의 대처는 물리적이거나 공권력을 동원하는 등 구태의 연하다. 그리해서 결국 「지수」는 맞출 수 있을지 모르나 민생의 고통은 「지수」로 줄여지는 것이 아니다. 선거분위기는 인플레 심리를 더욱 부추기고 각종 선심시책은 필시 물가를 들먹거리게 할 것이어서 민초들의 속은 타들어 가기만 한다.

1994년 우루과이 라운드(UR)협상의 타결, 그리고 이듬해 세계무역기구(WTO)가 성립했던 전후로 한국경제는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흐름 속에 본격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다. 머지않아 일어난 97년의 IMF사태는 위의 흐름과 무관하다고 할 수 없다. 이 경제 환란으로, 기업의 잇따른 도산과 금융불안이 이어지고, IMF의 외압에 따른 정부주도의 기업 구조조정은 실업자를 무더기로 배출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결국 무거운 짐을 지게 되는 것은 일반 국민의 몫이었다. 수입의 원천이 사라진 가정경제는 곧 소비시장의 위축으로 직면하기에 이르렀고 일반 국민의 생활, 즉 ‘민생’은 총체적인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라면 민생경제와 관련한 담론이 상당량 쏟아져 나왔을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연구자의 예상과는 달리 ‘IMF사태와 민생문제를 직접 연결하는’ 담론의 사례는 그 수가 극히 적었다. 아래 <그림4>은 민생경제로 분류한 담론들의 발생빈도를 시간순서로 나열한 것이다.

<그림 4> 시간의 흐름에 따른 민생경제 담론의 발생빈도



경제는 특히, 국민들이 먹고 사는 것과 직결되기 때문에 민생문제로서는 매우 민감하게 대두될 수 있는 사안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시기에 민생경제의 담론은 독자적인 분석이나 견해 보다는 정부의 발표를 기반으로 한 피드백(feed back)의 수준에 머물렀으며, 의외로 경제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언급을 회피했던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1997년 12월 3일 국제통화기금에 자금지원 양해각서를 체결했다.⁴⁵⁾ 그러나 그 시기에 해당되는 아래의 사례들을 보면 여전히 정치권의 문제나 치안문제, 공무원 비리 등의 문제만을 삼고 있었다.

① 임시국회 민생 위주로 (서울신문 1997-12-22)

정치권의 인식부족과 재정경제원과 한국은행간 밥그릇 싸움으로 이월된 것이다. 이제는 국제통화기금(IMF)의 요구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도 처리가 불가피해진 만큼 이번 국회가 법안처리를 또 미루는 일야 없겠지만 자칫 ‘졸속처리’라는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법안 심의에 철저를 기해주기를 바란다.

② 느는 범죄, 움추린 민생 (세계일보 1998-01-05)

IMF(국제통화기금)한파로 모든 경제활동이 위축된 가운데 각종 범죄사건이 빈발할 것으로 예고돼 왔는데도 정권말기의 치안당국은 강력범죄에 속수무책이다. 이번 새해 연휴동안 은행금고가 털리는 등 강도-절도사건이 10%나 늘어나 치안공백의 심각성을 말해주고 있다. 전과5범의 무기수가 탈옥해 1년가까이 활개를 치며 경찰과 숨바꼭질하는 모습이 구명난 치안행정의 현실이다.

③ 민생분야 총체적 사정 (국민일보 1998-10-14)

김대중 대통령이 부패일소 방안 마련을 지시한 데 따라 법무부는 민생관련 비리를 무기한 단속키로 했다.……극히 일부일지라도 대민업무 담당자들의 부패는 비리의 구조화를 초래한다. 전체공직사회를 오염시키고 국민생활에 고통을 주면서 국가발전을 저해하는 데는 몇몇 공무원의 비리만으로도 부족하지 않다. 우리 경제가 파탄의 위기에 직면하게 된 것도 부분적으로는 그 탓이다.

이 같은 현상에 대한 원인은 첫째 사상 초유의 경제위기를 맞은 것에 대해 신문사들이 사태의 본질에 대해 감을 잡을 수 없었다는 것, 둘째 정보제공자로서

45) 정부, IMF 구제금융 2백억달러 공식 요청 연합뉴스 1997-11-21

정부-IMF 자금지원 조건 최종 합의(종합) 연합뉴스 1997-12-03

“2000년 12월 4일 당시 김대중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IMF 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 공식 선언했다.” 충청일보 2012-04-22

선구적인 전문분석의 부재, 셋째 정치에 종속된 비판에만 치중한 결과로 볼 수 있다. 물론 사설은 5W1H의 텍스트 전개 구조를 가지는 스트레이트 기사나, 여타의 피쳐 기사와는 다른 형식을 가지므로 이러한 경제위기에 대해서 다른 지면이나 논평에서 다루어 졌을 것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민생안정을 늘 강조해 왔던 민생담론이, 정작 국민들이 먹고사는 경제문제와 관련해 직접적으로 다루지 않은 점은 아이러니다. 다음의 인용문은 당시 사회분위기와 언론기관의 보도태도를 잘 설명하고 있다.

경제 전문가들과 IMF에서는 한국 경제 위기의 지배적 원인을 한국경제의 구조적 원인에 두고 있다. 과도한 정부의 규제, 재벌간의 과도한 상호지급보증, 낙후된 금융시스템 등을 주요 원인으로 지적한다. 그러나 IMF구제 금융 지원 결정 이후 언론의 보도 태도는 경제의 구조적 원인에 대한 명확한 분석보다는 경제위기의 원인을 국민들의 과소비나 일부관료들의 무능력으로 치부해 버리는 보도들이 많았다. 또한 IMF 위기 극복을 위해 근검 절약이나 금모으기 등 고식적인 방법의 동원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양 호도하기도 하였다. IMF구제 금융신청 직후 경제위기 원인 규명 과정에서 보인 편향적인 보도 태도는 김대중 정부의 본격적인 구조조정이 진행되면서 변화가 생기게 된다. 김대중 대통령의 재벌개혁이 과거 정권의 재벌 길들이기와 다른 차원이라는 것이 명확해지고 외재적 요인으로 IMF의 구조개혁 입김이 거세지자 뉴스의 보도태도도 재벌개혁의 당위성을 확산시키는 쪽으로 선회하게 된다. 한마디로 언론은 경제위기의 원인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에 기반한 일관성 있는 보도보다는 시기마다 상황에 편승한 보도 태도를 보여 왔다(노중일, 1999).

그 책임 소재가 어찌 되었건, 국민에게 있어 ‘국가’라는 배는 정부가 진두지휘해야 할 의무를 안고 있으며 정부의 존립이유이기도 하다. 지구적인 신자유주의와 개방화 물결에 대비해, 정부는 그에 따른 합당한 대처를 하지 못했다는 것이 90년대 경제담론의 중론으로 보아진다. 그런데 통화불안이나 물가상승을 비롯한 외환위기의 원인이 정부나 해당기관에만 있다고 단언 할 수는 없는 일이다. 그 중 정부의 입김에 자유롭지는 못했지만, 시장에 거대 독점자본을 직접 행사 할 수 있는 주체는 바로 재벌이다. 이 독점자본의 축척으로 재벌은 규모의 경제, 범위의 경제를 실현 할 수 있었지만, 일부 방만한 경영과 문어발식 계열사로 산발적인 확장을 했던, 재벌이 도산하게 되면 곧 이어 연쇄도산이 일어났으므로, 나라 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그 같은 원천 배경에 대해 김상조(2004)의 말을 빌리면 국가주도의 개발 독재 시절에는 정부가 은행에 대해 감시와

간섭이 용이 했지만 어쨌든 금융자유화가 시작되었고, 재벌의 독점과 자본운용 능력이 정부의 견제범위를 능가 하면서 누구도 재벌의 자원배분 의사결정을 통제 할 수 없었다는 것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치금융의 구조는 지속되어 재벌의 독점과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의 누적을 막을 수 없었다는 것이다.

혼란기에 김영삼 정부를 이어받은 김대중 정부는 출범과 더불어 재벌개혁에 전례 없이 역량을 집중했다. 그러나 재벌의 개혁과 총수의 사법처리는 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 수도 있다는 저항세력의 거센 반발과, 언론의 미온적인 태도, 등으로 재벌개혁은 중도하차하고 말았다. 그 동안 재무구조, 사업구조, 지배구조 면에서 부분적 개선이 없지는 않았으나 재벌체제가 선진적이고 사회적인 기업체제로 환골탈태하는 데는 실패하고 말았다는 것이다.(노중일, 1999 ; 김기원 2003)

정권화(2007)는 경제위기이후 재벌개혁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도 강도 높게 제기되었지만 IMF 경제위기 이후에도 여전히 기업지배구조의 측면에서 재벌계 기업의 ‘실질적 통제’ 메카니즘은 여전히 작동하고 있었다고 했다. 그는 기업지배구조 변화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재벌의 소유구조 문제라고 지적했는데, 재벌의 내부지분율이 외환위기 이후 오히려 높아졌으며, 내부지분 구성에도 동일인 지분율은 약간 줄어든 대신 계열사 지분율은 오히려 증가했다는 것이다. 그의 분석에 따르면 2004년에는 출자총액제한 기업집단 총수의 지분율은 1.5%인 반면 계열회사 지분율은 40.0%에 달했다고 한다. 주주권 행사요건이 완화되었지만 높은 내부지분율은 장벽으로 주주에 의한 시장규율이 작동하기 어려운 사정에는 변화가 없었다는 것이다. 게다가 비상장회사의 경우 상장회사에 비해 계열회사의 지분율이 더 높아 소유지배구조의 왜곡이 더 심해서 비록, 기업지배구조 측면에서 제도개혁과 오랜 관행이 개선되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지만, 소유구조의 개선에는 별 변화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언론은 개혁에 관한 의제를 일반에게 알리고 개혁을 추동하는 공익적인 기구여야 한다(김서중, 2003).” 민생담론은 재벌개혁에 동참하고자 하는 의지가 소극적이었다. 또 정부·정치권과 정치색을 띄는 시민단체는 비판의 대상이 되지만 경제를 지배하는 재벌들에 대한 비판은 제외 되고 있었다. 심지어 "언제부턴가 재벌은 글로벌 기업으로서 민족적 자긍심의 상징으로 대접받고 있다(정권화, 2007)." 그나마 민생담론에서 ‘재벌’이란 단어가 검색되는 소수의 사례가 1998년 이후로 ‘대기업’이라는 명칭으로 순화되는 양상을 보인다. 둘을 등가적으로 치환 할 수는 없어도 한국사회에서 대기업이란 재벌에 종속되는 개념이라는 것은 틀림없다. ‘재벌(財閥)’이라는 의미가 내포하는 선단문어발식경영, 가족경영이라는 선입견에 입각한 의도적인 비판 대상은 아니라는 것이다. 동일한 대상을 두고 행위주체의 관점이 바뀌면 담론내의 텍스트도 변화한다. 분배를 위한 개혁의 대상은 재벌이고, 성장을 위한 탈규제의 대상은 대기업인 것을 두고 하는 말이다.

90년대 민생담론의 경제적인 관점이 노동쟁의, 물가, 통화증가율, 주택문제, 외환위기 등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었다면 환란이후인 2000년대 들어서는 경제성장과 분배문제에 따른 거시적 구도에서부터 양극화 문제, 일자리 창출, 비정규직 철폐 등의 문제들에 대해 지면 할애를 하고 있었다. 이시기의 민생경제담론⁴⁶⁾은 외환위기 때 보다 많은 빈도를 보이고 있는데, 담론의 논조들은 대부분 노무현 정부의 정책방향이 분배우선에 치우쳐 있다는 것에 대해 비판하고 기업에 대한 규제완화와 경제성장이 우선이 되어야 할 것임을 피력하고 있었다.

① 민생의 근본은 역시 경제다 (조선일보 2003-03-03)

새 정부는 지금 우리 경제가 처해있는 위기국면의 심각성을 가감(加減)없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해결에 나서야 한다. 민생의 근본은 예나 지금이나 경제에 있다. 개혁이나 분배도 경제가 흔들림없이 성장하고 있을 때 가능한 것이다. ……더욱이 우리 경제를 위협하고 있는 것은 외부요인만이 아니다. 기업개혁과 분배·노동정책 같은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에 대한 불안감, 가계(家計)신용 대란 가능성 등이 우리 경제의 활력을 더 떨어뜨리고 있다.

② 개혁과 민생안정 조화 이루려면 (서울신문 2004-05-17)

그럼에도 경제의 또 다른 기조인 ‘개혁’의 경우 아직도 방향과 내용이 분명치 않은 것 같다. 경제부총리 등은 개혁이 시장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나 재계는 시장 규제, 또는 분배 우선으로 파악하고 있다.

③ 민생과 나라살림 ‘同伴 위기’로 모는 정부 (동아일보 2005-08-10)

경제위기를 인정하고 이를 극복하는 데 전념하겠다는 모습은 현 정부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어렵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달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잠재성장률은 점차 회복될 것”이라며 “참여정부는 결코 경제에 거품을 만들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KDI는 바로 그 회의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4.0%에서 3.8%로 하향조정하고 잠재성장률 하락을 경고한 내용을 보고했다.

④ 규제 안 푸는 정부는 민생경제의 敵이다 (동아일보 2006-08-16)

현 정부 들어 우리 경제의 성장률은 세계경제 성장률을 계속 밀돈다. 더구나 경기가 다시 하강국면이다. 이런 저성장과 불경기에 따르는 고통은 서민과 중산층에 집중된다. 투자 촉진, 일자리 창출, 소득 증가, 빈부격차 축소를 위해선 규제 완화와 친(親)기업 분위기 조성이 절실하다. 정부 산하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

46) <그림3> 참고

원(KDI)조차 “각종 행정규제가 매년 경제성장률을 0.5%포인트 갉아먹는다”고 분석했다. 국내에서 성장률이 0.5%포인트 높아지면 일자리는 4만5000개 늘어난다.

⑤ 경제-민생을 여전히 따로 보는 대통령 (한국일보 2006-09-02)

보다 큰 문제는 투자 활성화 등 성장을 위한 액션 플랜은 볼 수 없고 '복지가 곧 투자'라는 분배론적 관념과 효과가 의심되는 시혜적 처방만 넘쳐난다는 점이다. 지표의 건강성을 중시하는 대통령의 말이 설득력을 가지려면 먼저 참여정부의 GDP 성장률이 왜 잠재성장률을 훨씬 밑도는 4%선 안팎에 머물러 있는지부터 먼저 답변해야 한다.

⑥ ‘與野 민생경제회담’ 열어야 (조선일보 2007-01-29)

노 대통령과 강 대표 간의 민생경제회담은 열리는 것이 좋다. 강 대표가 회담을 제안하면서 밝힌 일자리 창출, 집값 잡기, 교육부담 줄이기 등은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논의해야 마땅할 의제들이다. 나라에 큰 영향을 미칠 한·미 FTA도 時限 시한이 코앞에 닥쳤다. 진작에 與野여야 최고 지도자들이 만나 큰 물줄기를 잡고 국민 실득에 나섰어야 했다.

⑦ 환란 후 10년, 민생 괴롭힌 ‘정치코드 이념경제’(동아일보 2007-02-14)

정부는 성장을 통한 경제의 파이 키우기보다는 증세(增稅)를 통한 재분배 정책에 매달렸다. 그러나 증세에 따른 생산요소 유출로 경제가 성장 탄력을 잃어 가고 있다. 절대적 빈부격차 해소를 고집하다가 성장도 분배도 다 놓친 꼴이다. 지금은 빈곤층의 저변이 확대되면서 양극화는 오히려 굳어지는 추세라고 이코노미스트들은 지적했다.

⑧ 민생 제쳐놓고 경제살릴 수 있나(세계일보 2004-02-25)

가난한 사람이 더 가난해져 절대빈곤층이 불어나는 현상은 우리 사회의 분배구조가 잘못돼 있음을 단적으로 드러낸다.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수십배씩 치솟은 부동산과 같은 자산 분배는 거론할 필요도 없다. 호황산업과 불황산업,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등 업종별로, 기업별로, 직종별로 소득의 '부익부 빈익빈'은 날로 심화되고 있다. 더구나 경기불황의 여파로 음식·숙박업에 종사하는 저소득층 여성을 비롯해 서민들이 주로 일자리를 잃는 바람에 빈부격차와 계층간 불평등은 환란 때보다 커졌다.

IMF사태 이후 구조적으로 재구성된 대외개방적인 사회제도 장치들은 극단적인 양극화 모델이 된듯하다. “그 근처에는 ‘민주’ 정부에 의한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국가적 수용과 무비판적 적응이 자리 잡고 있다고 할 것이다(조현연, 2006).” 우리사회는 외환위기를 넘기는 과정에서, 정리해고는 대량의 실업자를 양산했고, 그에 따라 생업을 위한 자영업자의 수가 일시적으로 증가 했다. 그러나 그들이 경쟁하는 과정에서도 부의 불균형은 존재했고 지역상권(Local Market Area)은 또 재벌이라는 규모의 경제에 눌러 버렸다. 다시 수입의 터전을 잃은 사람들은 이제 일자리가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일자리 창출이 중요한 새로운 사회문제로 부상했고, 양극화⁴⁷⁾로 인한 분배의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원인에 대해 조형제외(2007)는 외환위기를 계기로 하여 우리 경제 성장모델의 성격이 크게 변하면서 사회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고 했다. 특히, 개발 연대의 원리였던 성장을 통한 분배의 개선이라는 성장공유(shared growth) 모델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게 되면서 성장과 분배 고리가 단절되고 생산-고용-교육-복지-간의 연계성이 크게 약화되었다는 것이다. 즉 글로벌화와 기술 변화, 구조조정 등을 포함한 환경 변화 속에서 글로벌 대기업과 영세 중소기업 간의 경제적 양극화 현상이 심화 되었고, 이로써 성장의 분배 효과(trickle-down effects)가 사라진 원인이 되었다는 것이다. 그 결과 우리 사회의 양극화 현상은 매우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했다. 또한 양극화 현상에 따른 사회경제적 단절과 배제 현상의 배후에는 성장-고용-분배 간 선순환 구조의 해체라는 메커니즘이 작동하고 있는데, 성장과 분배의 단절에는 고용의 문제가 자리하고 있어, 성장이 양질의 고용을 보장하지 못하고, 고용이 빈곤을 해결하지 못하며, 고용의 질 향상이 생산성 향상과 성장 동력으로 작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는 것이다.

위의 ①~⑧까지의 사례들은 서로의 입장차가 있는 담론이라도, 핵심적인 키워드는 경제성장과 분배이다. 이 시기의 민생담론들은 분배보다는 성장우선에 무게를 두고 있었다. 그러나 정치에서 진보와 보수가 그러하듯이, 민생담론에도 성장과 분배는 서로 대립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구조를 보이고 있다. 즉 경제성장에는 탈규제로 인한 감세, 분배에는 사회복지에 대한 예산증가라는 불가피한 조건이 따르게 마련이라는 것을 담론들의 텍스트 구조로 알 수 있다. 이러한 담론들의 지속되는 생산에 의해 수용되고 내면화된 의식들은 양극화의 기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환기시켜 보건데, 90년대 노사분규의 원인이 되었던 저임금에 따른 낮은 소득과, IMF사태를 이르게 한 원인중 하나라는 과소비 풍조는, IMF사태 후 민생경제 담론에서 부상한 부의 격차 즉 양극화에 부합할 수 있는 실재였다고 말할 수 있

47) 분석자료에서 양극화란 단어는 2006-09-02 한국일보 ‘경제-민생을 여전히 따로 보는 대통령’에서 처음 등장했다. 90년대의 경제담론에서의 양극화란 주로 주식에서 소형주와 대형주의 규모의 간극 등으로 사용되었다.

다. 민생담론들이 재벌과 같은 경제주체들을 이면에 두고,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은 현상을 설명하는 방식이 변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낮은 임금을 받는 노동자는 늘 명시적이지만 과소비의 주체는 그렇지 않았다. 양극화는 항상 실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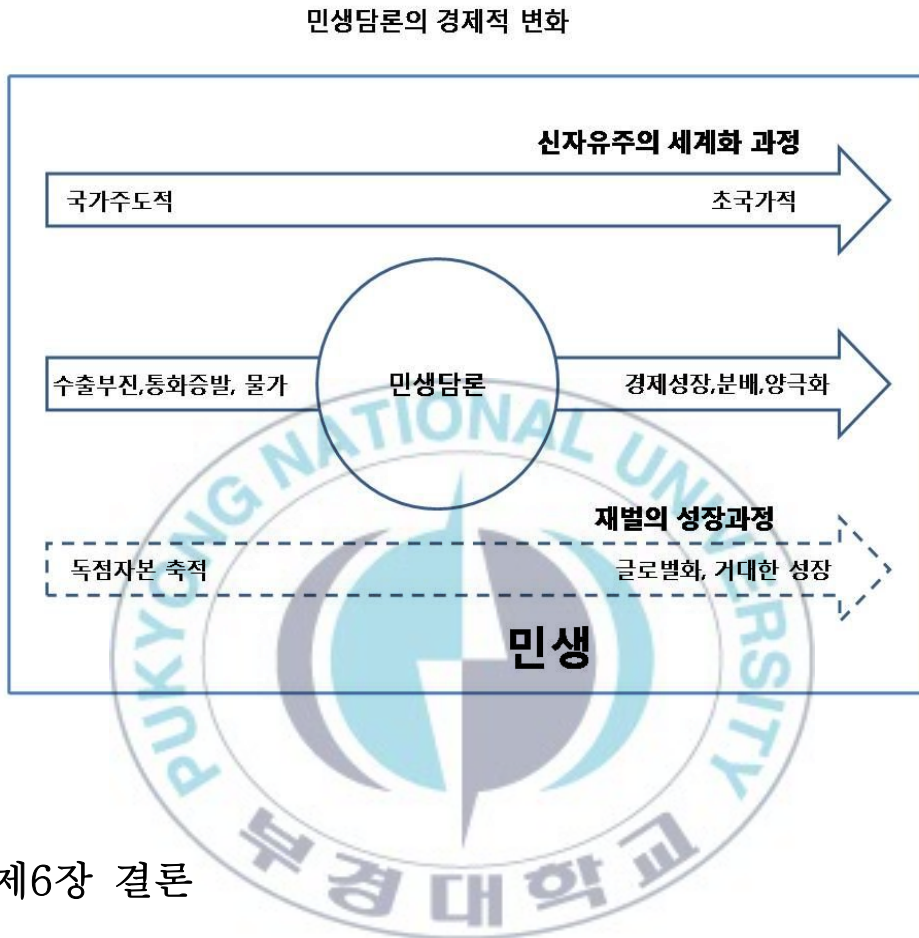
우리사회에 위기가 닥칠 때마다 민생 경제담론은 민생의 입장을 표방하며 경제정책을 주도하는 주체에 대해 비판을 가했지만, 위기를 벗어나려는 대안의 모색이나 구체적인 분석을 제시한 것은 아니었다. 주로 정부의 정책이나 대통령과 정치인의 언행에서 반사되는 피드백에 머무르고 있는 사례가 대부분이다. 신문사의 확고한 정체성에 입각한 독립적인 대안이 결여된 비판이었다고 볼 수 있다.

2007년 12월 19일, 연7%의 경제성장, 일인당소득 4만불, 7대강국 달성이라는 이른바 747공약을 내세운 이명박 후보가 당선되었다.

민생경제 회복에 전념을-이명박 당선자에게 바란다 (세계일보 2007-12-20)
국민은 민생경제의 회복을 차기 정부의 절체절명의 과제로 선택했다. 17대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이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를 당선자로 선택하면서 던진 메시지이다. 민선 대통령 선거 사상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이 당선자의 높은 득표율이 갖는 의미는 각별하다. 특히 투표에 참여한 유권자의 절반 정도가 이 후보를 지지했다는 것은 예사롭지가 않다. 이 당선자가 선거에서 내세운 '경제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열망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절절하게 보여준 것이다. 앞으로 이 당선자가 추진할 각종 정책에 그만큼 무게가 실릴 것이며 국정 운용도 용이할 것으로 전망된다.

위의 사례는 국민의 기대와 열망이 '경제대통령'을 탄생시켰다고 한다. 이명박 후보의 당선은 노무현 정부가 분배우선 정책을 펴고 있다고 꼬집어 비판했던 민생담론의 재생산과 전혀 무관하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이것은 담론의 흐름에 내면화된 국민의 기억자원이 발현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많은 사람들은 경제성장이 이루어지면 일자리문제, 양극화문제가 나아질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도대체 이명박 정부 이후 민생이 변한 것이 무엇인지 반문하거나 실감할 수 없다고 말한다. 아래는 지금까지 민생담론에서 사회경제적인 본고의 논의를 정리해서 <그림 5>로 나타내었다.

<그림 5> 경제영역에서의 민생담론 변화과정



제6장 결론

이 연구는 대중매체에서 발화되는 ‘민생’이란 어떤 의미를 가지며, 그것을 지칭하는 대상은 무엇인가? 하는 의문에서 시작되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입각하여, 1988년 2월 25일 대통령선거 직선제로 당선한 노태우 정부부터 이명박 정부의 임기가 끝나는 2013년 2월 24일까지, 한국의 주요 종합 일간지의 표제어에 ‘민생’이란 키워드를 담고 있는 사실들을 민생담론으로 상정하고, 페어클로우(Fairclough, 1995)의 비판적 담론분석틀에 의거해서 분석했다.

민생담론들의 주된 논지는 민생을 준거로 정부와 정치권에 대해 비판을 가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었으며 그 논조는 대부분 부정적이었다. ‘민생담론’의 제목에서 사용되는 ‘민생’이란 단어의 의미는 사전적 정의의 ‘국민의 생활’이기보다 정치의 대상으로서, 정부·정치인, 정치색을 띤 저항세력 등을 제외한 ‘국민’으로 사용되

고 있었다. ‘민생’의 정의가 ‘일반 국민의 생활 또는 생계’로서 의미를 가진다는 점에서, 삶의 문제라고 할 수 있는 불평등, 교육, 노동, 빈곤, 등의 문제를 신문의 민생담론에서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는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첫 번째 연구문제는 민생담론의 표현에 대해서 다루었다. 민생담론은 주로 주제가 네 글자의 합성어로 이루어졌으며 그 기능은 명사적이었다, 민생치안, 민생경제, 민생현안, 민생외면 등으로 명사화함으로써 민생과 사회적 주체에 대해 교량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뉴스가치가 있는 특별한 사건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주제들이 연발성이 강한 경향을 보이다가 특정한 시점에 일어난 큰 사건과 함께 담론의 주제가 전환되기도 하고 담론의 재생산이 전환기적 사건을 만들기도 하면서 서로 상보적인 관계를 이루고 있었다. 이것은 비단 표현만의 문제를 넘어 연구문제 전반에 걸쳐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민생담론은 표제어와 본문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사례도 빈번했다. 주제를 상술하는 위성단락에 의해서 혼탁해지는 결과를 보이고 있었는데, 주제를 포함한 도입과, 주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위성단락이, 결국 민생의 문제와 정치행위를 번갈아가며 비판하고, 요약인 결론에 이르는 구조를 보이고 있었다. 즉 위성단락의 배열이 바뀌어도 결국은 정부·정치권이 민생을 외면하고 있다는 우려 섞인 질책과 민생현안 우선에 대한 요구로 귀결됨을 알 수 있었다.

민생담론에 나타난 어휘도 대부분 부정적이었다. 부정적 진술에 대한 어휘들의 특징은 미래에 대한 우려 즉, 일어날 수 있는 일 조차도 ‘분명하다.’ ‘힘들다.’ ‘걱정이다.’와 같이 단호하고 단정적인 진술을 보이고 있었다. 반면에 긍정으로 사용된 어휘들은 평가, 의미와 같이 중의적인 단어를 ‘~스럽다.’ ‘~만하다.’ 등으로 긍정의 의미를 흐리는 보조용언을 함께 사용하거나, ‘다행스럽다.’ ‘다행스러운 일이다.’와 같은 어정쩡한 어휘를 사용하고 있었다. 또한 민생담론은 대체로 민생을 대변한다는 암묵적인 전제하에 정부·정치권과 저항세력에 의해 적대적이나 공격적인 질문을 정당화 했다.

두 번째 연구문제는 담론의 주체와 정체성 그리고 사회관계에 대해 고찰 했다. 사회가 변화함에 따라 민생담론역시 변해 왔다. 그러나 민생담론의 주체와 비판대상은 변했지만 그 대상이 정부와 정당, 단순화된 대항세력에 머무름으로써 다양한 주체를 수용하지는 못했다. 게다가 민생담론은 여전히 이 대항의 주체들을 단순화해서 묶어 버리거나 일관함으로써 우리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들을 내는 기능은 하지 못했다. 주체의 지위를 신문이 결정하면서, 민생의 입장을 신문사가 떠맡고 있는 것처럼 담론의 실천은 사회적으로 관행화 되어 왔다.

민생담론은 권력관계와 신문사의 가치판단에 따라 민생에 대한 해석의 입장을

달리하는 경우를 볼 수 있었다. 이른바 ‘지사에 유리한 정체성’을 설정하거나 ‘우리’라는 표현으로 신문사의 정체성이나 가치판단을 피력했다. 이런 표현은 ‘우리’라는 의미를, 자사의 입장에 암시적으로 국민의 뜻을 동반시켜 담론의 정당성을 유지하려는 것으로 간주 할 수 있다. 적어도 90년대 초중반 까지 ‘민생담론’에서의 ‘민생’이란, 몰개성적이며 피동적인 주체로 가정되어 왔다. 현대사회에서 개인들의 부상, 더불어 생활세계를 통해 기존의 사회체제에 저항하는 다양한 움직임들을 동반한다. 뿐만 아니라 개인들은 다양한 목소리들에 대해 통제력을 행사하는 기존 언론매체를 우회해서 SNS와 실시간 인터넷방송 등을 통해 즉각 소통한다. 개인은 이제 정부·정치권과 기성 언론매체의 진술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문은 이미 이러한 사회변화로 인해 국민 일반의 목소리를 ‘민생’이란 명목으로 주체지위를 규정 할 수 있는 권위에 도전을 받고 있다. 그런데도 여전히 많은 신문들은 다양한 사회주체들을 인정하지 않거나 주요 대상으로 다루지 않았다. 특히 동아일보의 사례는 촛불운동을 두고 시민운동을 둘러싼 좌파적·급진적·진보적인 행위로 상징하고 부정적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거나, 이들과 민생을 구별하고 있었다. 사회가 변하고, 민주주의가 진척되어도 민생담론은 여전히 민생의 주체지위의 제약을 초연하게 행사하고 있다.

세 번째 연구문제는 민생담론과 사회관계와 변화이다. 민생담론은 한국의 민주화·세계화 과정이라는 거대한 사회적 흐름에 관계했다. 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의 전반적인 민생담론은 민생-치안으로 접합되는 주체의 빈도가 유다르다. 이 시기는 민주화 이후 노동운동과 개헌과정, 과거청산을 촉구하는 시위대와 공권력의 갈등 등으로 과열된 양상을 보이고 있었는데, 민생담론은 치안문제에만 편중되어 재생산된 것을 볼 수 있었다. 치안을 주된 문제로 삼는 민생담론의 주제는 최초의 민선민간 정부인 김영삼 정부까지 이어졌지만, 90년대 후반부터는 민생치안이란 주체의 빈도가 현저하게 줄어들었다. 그 시점에서 민생담론은 두 가지 큰 줄기로 갈라지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첫째는 IMF 사태로 인한 민생담론의 경제적인 변화와 둘째는 비판대상의 변화이다.

90년대 민생담론의 경제적인 관점으로 볼 때, 노동쟁의, 물가, 통화증가율, 주택문제, 외환위기 등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었다면, 환란이후인 2000년대 들어서는 경제성장과 분배문제 부터 양극화 문제, 일자리 창출, 비정규직 철폐 등의 문제들에 대해 지면 할애를 하고 있었다. 이 시기의 민생담론들은 공통적으로 성장과 분배에 초점을 두고 있었지만 분배보다는 성장우선에 무게를 두고 있었다.

우리사회에 위기가 닥칠 때마다 민생 경제담론은 경제정책을 주도하는 주체에 대해 비판을 가했지만, 위기를 벗어나려는 대안의 모색이나 구체적인 분석을 제시한 것은 아니었다. 외환위기 때의 사회적 분위기라면 민생경제와 관련한 담론

이 상당량 쏟아져 나왔을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연구자의 예상과는 달리 ‘IMF사태와 민생경제문제를 직접 연결하는’ 담론의 사례는 극히 적었다. 또한 경제위기에 직면 할 때면, 의례히 재벌 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졌지만, 민생담론은 재벌개혁에 동참하고자 하는 의지가 소극적이었다. 정부·정치권과 정치색을 띄는 시민단체는 비판의 대상이 되지만 경제를 지배하는 재벌들에 대한 비판은 제외되고 있었다.

민생담론은 민생문제를 두고 정부와 국회의 불신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던 시기는 없었다. 김대중 정부에 들어서 다양한 민생현안에 대한 요구의 담론이 부상하기 시작했는데, 특이한 점은 대상의 변화이다. 90년대 중·후반까지 치안사건에 대한 정부와 정책의 불신에 있었다면, 김대중 정부에 들어서 부터는 국회와 정당의 의정행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정책에 대한 불신을 피력하고 요구하는 점은 변함이 없지만, 그 빈도가 증가 했으며 정책의 비판에서 정당의 행위 자체를 문제 삼기 시작했다. 특히 의정행위에 있어 의견과 갈등의 골이 민주화의 발전만큼 넓고 깊어졌다고 말할 수 있다. 이렇게 의정행위를 통해 발현되는 ‘이상적인 사회의 지향점’이 있다고 가정 한다면 이러한 중심으로의 회기가 혼란스러워 진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결국 언론의 자유도 이와 궤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국민은 국회와 정당의 순기능 보다는 역기능의 드러내는 민생담론에 상당시간 노출 되어 왔다. 이는 사실이던 아니던 간에 국민들이 정치에 대해 무비판적 불신을 가질 수 있다. 즉 이런 관행들이 바로 정치인에 대한 혐오와 무관심, 나아가서 냉소주의, 탈정치, 반정치 현상을 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한 다.

민생담론이 사회체계내의 실천이고, 이데올로기가 사회체계 내에서 작동한다면 국가 간의 비교는 매우 흥미로운 일일 것이다. 가령 한국과 정치적 이데올로기가 다른, 북한의 신문이 그들의 정권에 대해 이러한 비판들이 가능할지 환기시켜 생각해 볼 수 있다.

살펴 보건데 신문의 민생담론도 역시 권력관계가 재생산 되는 것이며 알튀세르가 말했던 ‘계급간 투쟁의 산물’이라는 것을 성립 시킬 수 있다. 그런 견지에서 보면 신문도 예외일 수 없기에, 적어도 신문의 민생담론은 명백히 권위적이라 할 수 있는 면모를 보여주고 있었다. 민생담론이, 변화하는 다양한 사회주체를 수용하지 못하고 주체·관계제약을 하는 것은, 신문지면이 가지고 있는 물리적 특성의 한계일 수 있다. 그러나 데스크의 경직성에 따른, 주체에 대한 교조적인 가치판단은 바뀌어야 할 것이다. 그러지 않는다면 오늘날 민생담론이 지칭하는 민생은 언론에 의해서 구별 지어진 허상일지도 모른다. 신문의 유연화와 다양한 주체를 수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림 6> 굴비 든 박근혜 위원장 (중앙일보 2012.03.22)



참고문헌

< 국내문헌 >

고경민·송효진(2010), 인터넷 항의와 정치참여, 그리고 민주적 합의: 2008년 촛불시위 사례, 「민주주의와 인권」 제10권 3호

김기원(2003), 재벌체제의 발전과 모순, 『한국자본주의 발전모델의 역사와 위기』 함께 읽는 책, 제1장, pp 45-75

김석영(2012), 「주체의 탈중심화에 기초한 현대 공간디자인의 사건성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31

김상조(2004), 재벌문제의 현실과 인식 : 1980~90년대 대내외적 자유화정책의 의미와 결과, 『박정희 모델과 신자유주의 사이에서』, 함께 읽는 책, 제4장, pp135-165

김서중(2003), 언론산업화 정책의 변천과 지배 담론, 그리고 대안 담론에 대한 고찰, 『통합과 배제의 사회정책과 담론』, 함께 읽는 책, pp175-204

김슬옹(2009), 『담론학과 언어 분석-맥락·담론·의미』, 한국학술정보(주)

김정훈(2006), 민주화·세계화 ‘이후’ 생활세계의 변화와 시민참여적 대안 - 풀뿌리 민주주의를 중심으로, 『민주화·세계화 ‘이후’ 한국 민주주의의 대안체제 모형을 찾아서』, 함께 읽는 책, 제8장 pp321-348

김종영(2011), 대항지식의 구성 : 미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운동에서의 전문가들의 혼성적 연대와 대항논리의 형성, 『한국사회학』 제45집 1호, pp109-153

김재한(2012), 『대한민국 국회, 불신과 양극화』, 한림대학교 출판부

김용진(1999), 한국과 미국의 신문사설 텍스트 비교 : ‘근거성’ 표현을 중심으로, 『사회언어학』 7권 1호 pp119-149

김용진(2003), 신문 사설 제목의 사회언어학적 분석, 『사회언어학』, 11권 1호, pp31-54

김일영(2009), 노태우 정부에서의 정치사회적 갈등양상과 해결경험, 「분쟁해결연구」, pp5-25

김효진(2008), 「한겨레신문과 조선일보의 사설 비교 연구 : 20년간 사설의 의제와 프레임을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노중일(1999), 「경제위기 관련 방송뉴스 보도 태도 분석 : MBC 뉴스데스크를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박종성(2006), 『탈식민주의에 대한 성찰-푸코, 파농, 사이드, 바바, 스피박』, (주)살림출판사

박용찬(2004), 「2004년 신어」, 국립국어원, p182

심광현(1992), 언어 비판과 철학의 새로운 실천-비트겐슈타인과 알튀세르, 「문화과학」 2호, 92년 겨울, pp47-83

신선희(2011) 「노인에 대한 비판적 담론 분석-신문사설(2000.1.1 ~ 2010.12.31)을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pp22-55

조기숙·박혜원(2008), 광장의 정치와 문화적 충돌 : 2008촛불집회에 대한 경험적 분석, 266 『한국정치학회보』, 제42집 제4호, pp243-268

장현근(2009), 민(民)의 어원과 의미에 대한 고찰, 『정치사상연구』, 제15집 1호, pp131-157

정권화(2007), 재벌개혁과 한국경제, 『한반도 경제론 : 새로운 발전모델을 찾아서』, 창비, 제4부 산업, 기업, 금융, pp230-248

정미정·백선기(2011), 한국신문의 영화에 관한 보도담론의 특징과 의미: 산업담론과 문화담론의 대립적 갈등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회』, 55권 3호, pp28-72

조형제 외(2007), 신진보주의 발전모델의 모색, 『한반도 경제론 : 새로운 발전모델을 찾아서』, 창비, 제1부, 국가발전모델, pp24-47

조현연(2006), 민주화·세계화 ‘이후’ 대안정당정치 모형연구, 『민주화·세계화 ‘이후’ 한국 민주주의의 대안체제 모형을 찾아서』, 함께 읽는 책, 제3장 pp125-159

조희연(2006), 대안담론과 ‘생태평화 사회민주주의’, 『민주화·세계화 ‘이후’ 한국 민주주의의 대안체제 모형을 찾아서』, 함께 읽는 책, 서장 pp1-31

양제진(2007), 유능한 민주정부의 창출을 위한 제도개혁과제, 『한반도 경제론 : 새로운 발전모델을 찾아서』 제1부, 국가발전모델, pp66-84

양운덕(2003), 『미셀푸코』, 살림

엄정식 편역(1983), 『비트겐슈타인과 분석철학』, 서광사

우하중(2005), 「내용분석을 통한 언론의 비브리오 보도사례 연구」,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23

정재철(2002), 한국언론과 이념 담론, 『한국언론학보』, 46권 4호, pp314-348

윤평중(2006), 『논쟁과 담론』, 생각의 나무

이기형(2006), 담론분석과 담론의 정치학 -푸코의 작업과 비판적 담론분석을 중심으로, 『언론과 사회』, 가을 14권 3호, pp106-145

이종영(2003), 정치적 프락시스로서의 담론투쟁 『통합과 배제의 사회정책과 담론』, 함께 읽는 책, pp19-74

최선열·김학수(2002), 국회보도의 부정주의 연구, 『의정연구』, 제8권 제1호 pp 160-197

홍성태(2008), 촛불집회와 민주주의, 『경제와 사회』 겨울호 통권 제80호, pp10-39

< 외국문헌 >

Althusser, L(1994), *Sur La Philosophie*, Edition Gallimard, 서관모·백승욱 역 (1997), 『철학에 대하여』, 동문선

Barker, C & Galasinski, D(2001), *Cultural studies and discourse analysis : a dialogue on language and identity*, Sage Publications Ltd, 백선기 역(2001), 『문화연구와 담론분석 : 언어와 정체성에 대한 담화』, 커뮤니케이션 북스

Bell, A & Garrett, P(1998), *Approaches to Media Discourse*, Blackwell Pu

blishers Ltd, 백선기 역(2004), 『미디어 담론』, 커뮤니케이션 북스
Fairclough, N(1995), *Media Discourse*, Edward Arnold, 이원표 역(2004),
『대중매체 담화분석』, 한국문화사
Fairclough, N(2011), *Language and Power 2nd*, Pearson Education Limited
(1989, 2001) 김지홍 역(2011) 『언어와 권력』, 도서출판 경진
Foucault, M, 1971), (*L'ordre du discours*, Gallimard, 이정우 역(2011), 『담
론의 질서』, 새길
Laclau, E & Mouffe, C(2001), *Hegemony and Socialist Strategy : Towards
a Radical Democratic Politics*, Verso, 이승원 역(2012), 헤게모니와 사회주의
전략 : 『급진 민주주의 정치를 향하여』, 후마니타스
Sarup, M(1993), *An Introductory Guide to Post-Structuralism and
Postmodernism*, Prentic Hall UK, 전영백(2005), 『후기구조주의와 포스트모데
니즘』, 서울하우스

기타자료

범죄와의 전쟁, 두피디아 < http://www.doopedia.co.kr/doopedia/master/master.do?_method=view&MAS_IDX=101013000852512 >
한국언론진흥재단(KINDS) 기사통합검색 <<http://www.mediagaon.or.kr>>
사이버 경찰청 <<http://www.police.go.kr/main.html>>

ABSTRACT

This study began with the following questions: "What is the definition of 'livelihoods of the people' in the discourse of mass media in the contemporary society?" and "What are the specific objects referred by it?" Based on these critical questions, this study set the period for the analysis from February 25 1998 when Roh Tae-woo Administration began to February 24 2013 when Lee Myung-bak Administration terminated. The study posited the discourse on livelihoods of the people as the editorials of Korean major daily newspapers containing the keyword of 'livelihoods of the people'. Then, the study analyzed them based on the framework of Fairclough's (1995) critical discourse analysis. Besides, prior to the practical trend on discourse analysis, the underlying background of the researcher's thoughts of this study are based on Wittgenstein's language theory, Foucault's discourse and Althusser's theory of ideology.

The Korean discourse on livelihoods of the people have been connected with massive social streams of democratization and globalization process. The overall discourse on the livelihoods from late 1980s to 1990s is remarkable in its frequency of themes connecting livelihoods to public order. This period demonstrates overheated aspects of Korean society after the democratization such as labor movements, constitutional amendments, protests demanding rectification of the past and the conflict with the governmental power. It is shown that the discourse on livelihoods of the public was reproduced leaning too much on the public order. This theme of discourse on the people's livelihoods continued until the Administration of Kim Young-sam, the first non-military civil president. However, from 1990s, the theme of livelihoods based on the public order decreased saliently in its frequency. After opening of Kim Dae-jong Administration, discourse on various issues in relation to livelihoods of the people began to emerge. The noticeable fact in this period was the change of target for the demand. It was similar in that the discourse expressed distrust of the policies and demanded the change, however, it began to question the acts of the political parties in

the criticism of the policies.

Whenever there were crises in our society, the economic discourse on the livelihoods provoked criticism against the principal agents handling the economic policies. However, it did not present specific analyses or alternatives to overcome the crisis. It could be assumed that in the social atmosphere of foreign currency crisis, discourse in relation to the livelihoods and economy would be generated in massive quantity. However, unlike the researcher's assumption, the examples of discourse on the 'direct relationship between IMF incident and the livelihood issues' were extremely scarce. Besides, the voices demanding the reformation of *chaebols* (business tycoons) were always raised whenever Korea faced the economic crisis, but the discourse was passive in its will to participate in the reformation of *chaebols*. The government, political circles and civil organizations with political disposition were the objects of criticism, but the *chaebols* dominating the economy were not the target of criticism. In the perspective of economy, the discourse on the livelihoods in the 1990s can be seen as the effort to solve the problems of labor dispute, consumer price, currency rate, housing problems and foreign exchange crisis. However, in the 2000s after the crisis, issues of economic growth, issues of distribution and polarization, and issues of employment and irregular employees were covering the editorials. The discourses on the livelihoods in this period were commonly focusing on growth and distribution, but growth was given priority over distribution.

When the study explored the issue of the livelihood of the people in mass media, based on the researcher's critical mind, the meaning of 'livelihoods of the people' generated by mass media was used as the object of the politics, rather than as the dictionary definition of 'living of the people'. That is, the government, political circles and opposition groups with political dispositions were excluded from the term 'the people'. In addition, under the implicit premise that the discourse on the people's livelihoods generally represents the livelihoods of the people, it justified the aggressive or hostile criticism against the government, political circles and opposition groups. In this respect, the discourse of

media is also the reproduction of the power relationship. The discourse in the papers clearly demonstrated the authoritative facade.



부록

민생이 포함된 신문사설의 표제어

번호	표제어	신문사	날짜
1	외면 당하고 있는 민생	경향신문	1988-05-21
2	민생치안에 분발하라	경향신문	1988-10-31
3	민생치안 문제 심각하다.	동아일보	1988-11-30
4	민생안정에 최우선을	경향신문	1988-12-06
5	질실한 민생치안	중앙일보	1988-12-08
6	민생치안에 총력 집중하라	국민일보	1988-12-12
7	세밀 민생의 불안을 없애달라	서울신문	1988-12-14
8	민생치안 이래서야	국민일보	1988-12-28
9	당수 정치에 가린 민생	조선일보	1989-03-11
10	시국치안과 민생치안	중앙일보	1989-04-01
11	민생안정없는 시국안정없다.	국민일보	1989-04-05
12	민생치안과 공권력	한국일보	1989-04-19
13	공권력의 횡포에 실종된 '민생'	한겨레신문	1989-05-04
14	민생치안, 정권걸고서	경향신문	1989-06-17
15	공권력이 폭력 되고 민생치안 간 곳 없어	한겨레신문	1989-06-17
16	민생치안 단호한대책 아쉽다.	국민일보	1989-06-17
17	민생치안 말만에 그치는가	한국일보	1989-06-21
18	민생치안에 내각운명 걸어라	국민일보	1989-06-22
19	민생치안'은 구호로 그칠 일 아니다	한겨레신문	1989-06-24
20	뒷북만 친 민생사법단속	국민일보	1989-06-24
21	송사리만 잡는 민생사법단속	세계일보	1989-06-25
22	민생사법, 중형으로 다스려야	국민일보	1989-07-18
23	안보와 민생에 역점을	동아일보	1989-07-19
24	민생치안 믿어도 될까	경향신문	1989-07-22
25	민생안정 없이 체제안정 없다	세계일보	1989-07-22
26	민생치안, 이번만은 믿을수있게	국민일보	1989-07-22
27	유언비어와 민생치안	중앙일보	1989-08-03
28	서울대병원'원천봉쇄'와 민생치안 경찰은 갈 곳과 할 일을 옮겨 찾으라	한겨레신문	1989-08-18
29	잠자는 민생법률	경향신문	1989-11-03
30	민생치안을 위한 발상전환	서울신문	1989-11-21
31	말이야닌 민생치안	세계일보	1989-11-21
32	연말 민생치안 특별대책 있어야	국민일보	1989-12-01
33	민생외면한 예산지연	경향신문	1989-12-02
34	민생치안 무엇이 문제인가	서울신문	1989-12-07
35	민생법안'처리와 국회의 직무태만	한겨레신문	1989-12-13
36	민생되찾는 특수대될까	조선일보	1990-01-12
37	민생치안... 실행을 보고 싶다	한국일보	1990-01-12
38	민생치안 무엇이 달라졌나	중앙일보	1990-02-08
39	민생치안 처방이 없는가	국민일보	1990-02-10
40	'시국'은 있고 '민생'은 없는 치안	한겨레신문	1990-02-11
41	민생치안에 시민참여를	조선일보	1990-02-16
42	'민생치안'에 헌병 보낸 근거는?	한겨레신문	1990-02-17
43	민생대책과 악법개폐가 큰 과제	한겨레신문	1990-02-18
44	민생경제 입법 후유증의 교훈	서울신문	1990-02-23
45	민생안정이 최우선이다/3·17개각과 새 각료에 거는 기대	경향신문	1990-03-17
46	민생안정과 개혁에 역점두라/새 내각에 기대하며	서울신문	1990-03-18
47	민생치안,근본적 수술을/신임 내무·법무장관에게 바란다	중앙일보	1990-03-19

48	내무-법무와 민생치안	조선일보	1990-03-20
49	민생치안과 「봉사하는 공권력」	한국일보	1990-03-20
50	민생치안 공수표 안돼야	국민일보	1990-03-20
51	민생치안의 확립 의지	서울신문	1990-03-20
52	민생치안 하나만이라도	경향신문	1990-03-20
53	화염병시위와 민생치안	세계일보	1990-03-21
54	민생치안과 「용기있는 시민」	한국일보	1990-03-27
55	‘민생치안 언론대책’의 그릇된 시각	한겨레신문	1990-04-01
56	물가비상과 민생안정	서울신문	1990-04-03
57	민생치안은 ‘세금’보다 조직으로	한겨레신문	1990-04-11
58	노·사·정 모두 정신차릴때/민생에 더이상 불안줘선 안된다	경향신문	1990-04-30
59	시국불안과 민생치안의 함수	서울신문	1990-05-04
60	경찰권 남용과 민생	세계일보	1990-05-18
61	민생치안의 공백 메우라	중앙일보	1990-05-27
62	다시 실종된 「민생치안」	경향신문	1990-06-02
63	조직폭력과 수사무력/민생치안 다짐은 헛 구호였나	경향신문	1990-06-20
64	민생치안의 「총체적 난국」	국민일보	1990-08-23
65	여야,재해 민생 외면할 건가	국민일보	1990-09-13
66	수재-민생-정치	세계일보	1990-09-13
67	민생치안에 모든 것을 걸라	서울신문	1990-09-26
68	민생치안 이번만은 기필코	세계일보	1990-10-14
69	민생치안과 수사경찰력	한국일보	1990-10-23
70	민생해결에 총력 기울일때/상처투성이의 민자당이 갈 길	한국일보	1990-11-07
71	「전쟁」 중에 깎인 민생치안 예산	중앙일보	1990-11-30
72	민생치안 예산 늘려야	국민일보	1990-11-30
73	민방에 밀린 민생 국감	세계일보	1990-12-04
74	민생치안과 전국민적 협조	서울신문	1991-01-13
75	민생을 걱정하라	중앙일보	1991-05-13
76	민생경제가 급하다	국민일보	1991-05-13
77	민생대책,개혁의지 담아야	세계일보	1991-05-28
78	민생치안 체제의 상시화	한국일보	1991-07-02
79	민생치안으로의 전환	동아일보	1991-07-03
80	경찰청 발족과 민생치안	세계일보	1991-07-03
81	통일정국 앞서 민생정국을	조선일보	1991-08-16
82	국정감사에 기대하는 민생문제/의혹해명과 ‘약속’이행 감시를	한겨레신문	1991-09-20
83	확고한 대책으로 민생 안정을/경제운용 더 ‘표류’하면 안된다	한겨레신문	1991-12-10
84	세밑 민생이 불안하다	국민일보	1991-12-17
85	다시 흔들리는 민생치안	중앙일보	1992-05-14
86	민생이 곧 대선이다	조선일보	1992-05-20
87	「레임덕」으로 실종된 민생	세계일보	1992-05-22
88	민생을 앞세우는 후보의 자세	서울신문	1992-05-30
89	정기국회와 민생경제	서울신문	1992-09-15
90	민생치안 어디갔나	경향신문	1992-10-07
91	경제와 민생문제 추궁에 분발해야	한겨레신문	1992-10-29
92	민생치안은 공백인가	중앙일보	1992-12-05
93	민생치안 위협하는 선거바람	경향신문	1992-12-06
94	한파속의 세모, 「민생」도 생각하자	서울신문	1992-12-15
95	공직기강과 민생치안확립	세계일보	1992-12-25
96	「민생사정」의 원칙과 방향	세계일보	1993-05-02
97	사회기강 세우는 민생사정	경향신문	1993-05-09
98	민생치안 어디 갔나	경향신문	1993-07-08
99	민생물가를 안정시켜라	중앙일보	1993-10-02
100	물가와 민생,경제	국민일보	1993-10-02
101	민생치안 정신 차려라	한국일보	1993-10-16
102	민생치안 왜 이리 허술한가	경향신문	1993-10-17
103	경찰은 민생체제로	경향신문	1993-11-06

104	민생치안 총력체제로	국민일보	1993-11-29
105	민생치안, 구호만 요란하다	국민일보	1994-01-11
106	때강도가 짓밟는 「민생치안」	한국일보	1994-01-28
107	민생개혁 이제부터/문민정부 1년	한국일보	1994-02-25
108	민생치안에 보다 주력하라	중앙일보	1994-08-22
109	민생치안에 총력을 다하라	서울신문	1994-09-12
110	정쟁보다 민생을 챙기라	경향신문	1994-11-02
111	다시 민생치안에 눈돌려야	국민일보	1994-11-18
112	민생치안에 더 큰 비중을	국민일보	1994-12-27
113	선거철 민생치안 빈틈없어야	서울신문	1995-06-20
114	선거와 민생행정	동아일보	1995-06-21
115	민생외면 국회 설 땅 없다	세계일보	1995-07-05
116	민생 불안케하는 폭력시위	서울신문	1995-10-01
117	민생경제에 중점 접근해야	서울신문	1995-12-06
118	민생 중기위한 세법시행	서울신문	1995-12-12
119	새 내각 경제팀의 과제/경제와 민생안정 최우선을	서울신문	1995-12-18
120	구멍 뚫린 세밀 민생치안	중앙일보	1995-12-24
121	민생과 민심 안정의 의지	서울신문	1996-01-05
122	민생부터 안정시키라	경향신문	1996-01-10
123	민생치안을 강화하라	동아일보	1996-01-11
124	경제난, 물가고, 민생고	국민일보	1996-02-02
125	공명선거와 민생행정	동아일보	1996-02-07
126	「민생치안」 구멍 뚫렸나	세계일보	1996-05-15
127	정책따로 민생따로	국민일보	1996-07-12
128	민생으뜸 상위 활동을	세계일보	1996-07-23
129	수재민들의 민생실종	국민일보	1996-08-23
130	민생 위협하는 전셋값	국민일보	1996-08-26
131	민생 중시하는 생산 의정을	서울신문	1996-09-10
132	민생 치안은 안전인가	세계일보	1996-09-22
133	암울한 경제·민생	국민일보	1996-11-29
134	민생분야 파업은 안된다	중앙일보	1997-01-15
135	민생치안도 급하다	세계일보	1997-01-28
136	시국에 밀린 민생문제	세계일보	1997-02-10
137	민생치안에도 신경써야	국민일보	1997-02-19
138	민생치안 강화해야	국민일보	1997-11-01
139	임시국회 민생 위주로	서울신문	1997-12-22
140	걱정 앞서는 민생치안	서울신문	1998-01-05
141	느는 범죄, 움추린 민생	세계일보	1998-01-05
142	민생치안은 더 확고하게	경향신문	1998-01-06
143	民生행정은 간데없고	세계일보	1998-04-06
144	「민생 국회」 되도록	국민일보	1998-05-02
145	민생외면한 텅빈국회	국민일보	1998-05-13
146	민생 외면하는 「식물국회」	경향신문	1998-06-27
147	「선거최면」에서 민생정치로	중앙일보	1998-07-23
148	뒤늦게 민생 챙기는 국회	서울신문	1998-08-08
149	국회 民生 챙겨라	서울신문	1998-08-24
150	민생외면 장외투쟁 중단하라	서울신문	1998-09-14
151	민생분야 총체적 사정	국민일보	1998-10-14
152	민생이 政爭 다음인가	서울신문	1999-08-10
153	政爭에 발목잡힌 민생현안	서울신문	1999-08-11
154	민생과 경제 볼모일 수 없다	동아일보	2000-04-09
155	국회파행에 방치된 민생현안	문화일보	2000-07-20
156	민생국회' 조속히 다시 열이라	경향신문	2000-07-27
157	民生국회' 즉각 열이라	세계일보	2000-07-27
158	선 민생법안 후 교섭단체	중앙일보	2000-07-28
159	민생 외면하는 국회	중앙일보	2000-07-28

160	민생국회 즉각 소집하라	국민일보	2000-07-28
161	야, 민생국회 동참하라	경향신문	2000-07-31
162	民生 외면한 '나들이 정치'	세계일보	2000-08-10
163	이런 '민생투어' 할때인가	한국일보	2000-08-11
164	이제는 다시 '民生'이다	세계일보	2000-08-19
165	정치권, 민생부터 챙겨라	국민일보	2000-09-19
166	민생현안부터 처리하라	서울신문	2000-09-26
167	정쟁풀고 민생 챙기라	서울신문	2000-11-06
168	국회, '民生'은 어찌 하려는가	한겨레신문	2000-11-21
169	영수회담과 민생	서울신문	2001-01-06
170	'방탄국회' 아닌 민생국회 돼야	문화일보	2001-01-10
171	민생돌보는 생산적 정치	서울신문	2001-01-26
172	임시국회, 민생이 최우선이다	세계일보	2001-02-05
173	개헌논위보다 민생안정 먼저다	문화일보	2001-03-26
174	민생우선의 임시국회돼야	경향신문	2001-04-02
175	민생에 고통주는 과격시위	동아일보	2001-06-04
176	또 정쟁에 밀리는 '민생'	서울신문	2001-06-26
177	또 정쟁에 밀린 민생	세계일보	2001-07-02
178	민생안건' 방치해선 안된다	경향신문	2001-07-09
179	표류하는 민생안전	세계일보	2001-07-09
180	사실여야싸워도민생은챙겨야	조선일보	2001-08-06
181	뒷전으로 밀리는 민생	국민일보	2001-10-29
182	잠자는 국회' 민생 솟가슴	한겨레신문	2001-11-20
183	국회, 민생법안 외면해도 되나	한겨레신문	2001-11-26
184	청와대의 民生탐방	세계일보	2001-12-03
185	민생 치안 어디갔나	국민일보	2001-12-22
186	아직도 민생대책회의인가	중앙일보	2002-01-17
187	민생 안정' 실천 뒤따라야	한겨레신문	2002-01-17
188	정치권, 민생도 챙겨야 한다	서울신문	2002-05-10
189	민생물가 확실히 잡아야	경향신문	2002-08-27
190	정기국회 민생만은 제대로	국민일보	2002-09-02
191	정치권, 민생 돌볼 기회다	한국일보	2002-09-03
192	민생의근본은역시경제다	조선일보	2003-03-03
193	政策이왔다갔다하면民生은명든다	조선일보	2003-05-06
194	정당 놀음에 밀린 민생법안	서울신문	2003-06-19
195	7월국회, 민생부터 다뤄라	한국일보	2003-07-01
196	국회 민생법안 더 마뤄선 안돼	동아일보	2003-07-30
197	민생법안 자유투표 꼭 넓혀야	서울신문	2003-08-01
198	민생 챙기는 청와대 회동 돼야	서울신문	2003-08-28
199	경제·민생 주름살 최소화	경향신문	2003-09-15
200	경찰의 첫째 업무는 민생치안이다	동아일보	2003-11-05
201	민생 표류 방지할 것인가	경향신문	2003-11-12
202	국회 민생입법도 챙겨라	서울신문	2003-11-19
203	盧도 崔도 세계를 보라, 민생을 보라	동아일보	2003-11-27
204	민생과 국정이 기다린다	한국일보	2003-12-03
205	측근비리 특검에 맡기고 민생 챙겨라	동아일보	2003-12-04
206	재의결 다음 과제는 민생이다	국민일보	2003-12-05
207	이제 특검에 맡기고 민생 챙기라	한겨레신문	2003-12-05
208	정치권 이제 민생에 전념하라	서울신문	2003-12-05
209	국회 이제 민생부터 챙겨라	경향신문	2003-12-05
210	총선보다 민생이 최우선이다	문화일보	2004-01-02
211	盧대통령, 경제·민생 우선이라더니	동아일보	2004-01-05
212	선포식보다民生부터챙겨라	조선일보	2004-01-28
213	격돌과 폭로, 이것이 민생정치인가	세계일보	2004-02-02
214	민생 제쳐놓고 경제살릴 수 있나	세계일보	2004-02-25
215	'代行정부' 경제와 민생이 핵심이다	동아일보	2004-03-15

216	高 大행, 경제와 민생부터 안정시켜야	세계일보	2004-03-15
217	상생·통합 정치로 민생경제 행거라	세계일보	2004-04-16
218	정치권, 이제 민생경제 살피야	한국일보	2004-04-17
219	개헌'보다 민생부터 챙길 때야	경향신문	2004-04-29
220	'민생' 첫발 내딛는 鄭-朴 회담 돼야	동아일보	2004-04-30
221	'민생·경제 정치' 실천이 관건이다	세계일보	2004-05-04
222	변협 '민생인권' 지적 주목해야	문화일보	2004-05-06
223	개혁과 민생안정 조화 이루어면	서울신문	2004-05-17
224	실천 주목되는 '민생안정과 상생정치'	세계일보	2004-05-17
225	노대통령,민생현장과 거리 있다	경향신문	2004-05-29
226	민생경제 살리는 새 국회 돼야 한다	세계일보	2004-05-31
227	이해찬 내각 민생부터 행거라	서울신문	2004-06-30
228	민생경제 살리는 것이 먼저다	경향신문	2004-07-08
229	민생경제 법안 국회처리 서둘러야	한국일보	2004-07-15
230	여당은 민생 살릴 생각 있나	한국일보	2004-08-03
231	정쟁 멈추고 민생으로 돌아가라	서울신문	2004-08-04
232	열린우리당의동문서답(東門西答)민생투어	조선일보	2004-08-19
233	'민생 전념' 또 빈말이어선 안 된다	동아일보	2004-08-24
234	경제·민생국회 행동으로 보여라	서울신문	2004-09-16
235	국감, 민생안정에 초점 맞춰야	경향신문	2004-10-04
236	'민생 국감' 다짐 벌써 잊었나	한겨레신문	2004-10-13
237	民生보다 중요한 명분 있나	서울신문	2004-11-09
238	민생법안 최우선으로 심의하라	한국일보	2004-11-11
239	정상화 국회, 민생부터 살피야	국민일보	2004-11-11
240	民生이어려운것도와거탓이라니	조선일보	2004-12-01
241	민생에 희망 줄 國政 전환 기대한다	동아일보	2004-12-21
242	예산과 민생법안 처리 더는 차질 없게	동아일보	2004-12-22
243	무너지는 민생 이제야 알았나	동아일보	2004-12-23
244	국회, 민생 현안부터 처리하라	국민일보	2004-12-28
245	설 최대화두는 민생과 경제	문화일보	2005-02-07
246	民生전념해야'여당다운여당'이다	조선일보	2005-04-04
247	민생대책, 현장에서 출발하라	한국일보	2005-06-04
248	민생 외면한 "정치 올인" 안된다	세계일보	2005-07-07
249	여당, 民生 외면한 권력게임 그만두라	동아일보	2005-07-11
250	민생과 거리가 먼 여당 제언	세계일보	2005-07-11
251	지금은 選舉制보다 민생 걱정할 때다	국민일보	2005-08-01
252	민생과 나라살림 '同僚' 위기로 모는 정부	동아일보	2005-08-10
253	민생대책 실종 보여준 '중국산 민물고기'	동아일보	2005-08-24
254	정기국회, 민생안정에 최우선 하라	세계일보	2005-08-29
255	盧대통령·朴대표 '민생 회담'이라야 한다	문화일보	2005-09-02
256	聯政 접고 '民生정치' 경합하라	동아일보	2005-09-08
257	연정론 이제 끝내고 민생에 총력을	세계일보	2005-09-08
258	국민은 정책·민생 국감 원한다	한국일보	2005-09-22
259	민생에 눈감은 채 '파탄 경제'구했다는 정부	동아일보	2005-10-21
260	재선거 민의 받들어 민생정치 매진하라	세계일보	2005-10-27
261	이제는 생산적 민생정치로 겨루자	한겨레신문	2005-10-31
262	민생수사권 이양과 견제장치의 조화를	동아일보	2005-12-06
263	정치철학보다民生에관심갖는대통령되길	조선일보	2006-02-27
264	사학법에 발목잡힌 산적한 민생법안	경향신문	2006-04-29
265	민생법안 처리 더 미뤄선 안된다	서울신문	2006-05-02
266	국회는 민생법안부터 처리해야	한국일보	2006-06-27
267	사학법과 민생법안 연계는 잘못이다	경향신문	2006-06-28
268	정부·여당 민생에 올인하라	세계일보	2006-06-29
269	지방자치, 민생의 산실로 거듭나야	세계일보	2006-07-03
270	강재섭 대표 민생우선 다짐 주목한다	서울신문	2006-07-12
271	민주노총은 민생의 敵, 공공의 敵이 되려는가	동아일보	2006-07-22

272	민생 외면 보여주는 여권 대란	서울신문	2006-07-29
273	규제 안 푸는 정부는 민생경제의 敵이다	동아일보	2006-08-16
274	한나라당, 민생 걱정하는 정당 맞나	한겨레신문	2006-08-28
275	경제-민생을 여전히 따로 보는 대통령	한국일보	2006-09-02
276	與圈과 DJ, 민생은 버랑 끝인데 政治劇 벌이나	동아일보	2006-10-30
277	민생법안 방치로 서민 더 올리지 마라	한겨레신문	2006-10-30
278	"민생 의정"으로 성난 민심 달래야	세계일보	2006-11-17
279	당·청 갈등 접고 민생부터 살펴야	세계일보	2006-11-30
280	정치극판에 쏘는 힘을 민생에 돌려라	한국일보	2006-12-04
281	청와대는 민생이 뭔지 아는가	경향신문	2006-12-08
282	국회, 민생 거론할 자격 있나	세계일보	2006-12-22
283	개헌 논의, "민생의 블랙홀" 안 된다	세계일보	2007-01-11
284	개헌과 FTA 집착 말고 민생 해결에 전념해야	한겨레신문	2007-01-24
285	노 대통령, 피해의식 벗고 민생주력을	서울신문	2007-01-24
286	민생 외면한 채 권력놀음만 하는 정치권	세계일보	2007-01-24
287	'與野 민생경제회담' 열어야	조선일보	2007-01-29
288	청와대 민생회담, 조건에 얽매일 필요 없다	경향신문	2007-01-29
289	초당적 민생협력체제 시급하다	세계일보	2007-01-30
290	대통령과야당대표, 民生合意의 '기적'을	조선일보	2007-01-31
291	청와대 민생회담, 양보와 상생의 미덕 보여야	세계일보	2007-01-31
292	청와대 민생회담이 지켜야할 3대 원칙	문화일보	2007-02-02
293	2월 국회 민생법안 표류 우려한다	서울신문	2007-02-05
294	개헌, 탈당, 민생 표류, 공허한 비전 2030	동아일보	2007-02-06
295	민생은 이렇게 공한데 정치는 뭘 하나	한국일보	2007-02-08
296	靑·한나라, '민생 합의' 실천 지켜보겠다	서울신문	2007-02-10
297	민생회담 합의' 구두선에 그치지 않기를	경향신문	2007-02-10
298	민생회담, 합의보다 실천이 중요하다	세계일보	2007-02-10
299	환란 후 10년, 민생 괴롭힌 '정치코드 이념경제'	동아일보	2007-02-14
300	민생과 거리 먼 그들의 '진보 논쟁'	동아일보	2007-02-22
301	盧정권 '코드 立法劇'이 끝없이 괴롭히는 民生	동아일보	2007-03-01
302	민생 외면한 한나라당의 사학법 연계	한겨레신문	2007-03-07
303	말로만 민생 챙기는 개점휴업 국회	세계일보	2007-03-14
304	각 政派, 꿈수 부리지 말고 민생법안 타결하라	동아일보	2007-04-19
305	민생법안 표류, 盧대통령 열린우리당 책임 더 크다	문화일보	2007-05-02
306	민생경제 발목 잡는 불합리한 토지구제 풀라	동아일보	2007-05-05
307	정치권은 민생법안 처리 서둘러라	세계일보	2007-06-27
308	대선 앞이면 잠자는 국회 민생법안	한국일보	2007-06-28
309	대선에 정신팔려 민생 내팽개친 국회	국민일보	2007-06-28
310	대선 올인 자제하고 민생법 처리하라	서울신문	2007-06-28
311	민생사범 18만 적발한 국정원의 놀라운 국민감시망	동아일보	2007-07-18
312	정부와 공기업이 民生苦뒤틀전에서 벌인 파티	동아일보	2007-11-05
313	민생경제 회복에 전념을-이명박 당선자에게 바란다	세계일보	2007-12-20
314	정권 교체기 민생치안 불안, 경찰 뭐 하나	동아일보	2008-01-07
315	민생치안, 정권 말에 실종됐다	세계일보	2008-01-08
316	시국치안 몰두하고 민생치안 제쳐두나	한겨레신문	2008-03-20
317	'골목 안' 민생치안이 法治의 ABC다	동아일보	2008-03-21
318	민생과 國運 가를 4·9총선	동아일보	2008-03-28
319	公부문 人事, 경제와 民生 도울 책임자 엄선해야	동아일보	2008-04-12
320	4월 임시국회, 民生의 뜻 바로 알고 일하라	동아일보	2008-04-16
321	'과담' 떨치고 民生 살리기 나서야	국민일보	2008-05-10
322	여, 복당 문제 매듭짓고 민생 전념하라	세계일보	2008-05-29
323	민생 불만 키운 경제운용 시스템 바로잡으라	동아일보	2008-06-03
324	서민고통 덜어 줄 획기적 민생대책을	한국일보	2008-06-07
325	10조원 民生대책...에너지종합대책도	조선일보	2008-06-09
326	고유가 고통 덜어주기, 민생 전 분야로 확산돼야	동아일보	2008-06-09
327	민생종합대책 서민경제 살려야	서울신문	2008-06-09

328	'6·10촛불시위'이틀날쏟아진속보이는데경제·민생대책	조선일보	2008-06-12
329	쏟아붓기식 '민생대책' 문제 있다	경향신문	2008-06-12
330	입으로만 민생정치 백날 떠돌아봤자	국민일보	2008-06-13
331	광고主 협박은 反민주反시장으로 民生까지 해친다	동아일보	2008-06-19
332	'쇠고기'를 넘어, 民生 회복에 國力 모으자	동아일보	2008-06-23
333	고유가 민생대책 위해 규제혁파·감세 시급하다	문화일보	2008-06-23
334	서민들은민생대책목마르게기다리는데	조선일보	2008-06-30
335	물가·민생 안정에 MB정부 명운 걸어라	서울신문	2008-07-03
336	민주당, 代議정치로 돌아와 民生 회복에 나서라	동아일보	2008-07-07
337	지각국회,민생현안 타결로 별충하라	국민일보	2008-07-10
338	民生정책 '울 스톱' 시키는 국회의 파업	동아일보	2008-08-07
339	민생 경제 멎는데 정치인은 뭘 하는가	세계일보	2008-08-09
340	여야, 민생 살릴 減稅 방안부터 협의하라	동아일보	2008-08-30
341	이념 전쟁 대신 민생정치 펼쳐라	서울신문	2008-08-30
342	減稅, 민생경제 활성화로 연결시켜야	동아일보	2008-09-02
343	생활공감 정책, 실질적 민생과제로 보완·지속해야	문화일보	2008-09-06
344	'생활공감 정책' 더 찾아내 민생에 보탬 주라	동아일보	2008-09-09
345	추경안 외면하고 민생 애기할 엄치있나	국민일보	2008-09-13
346	'민생 초당 대책' 영수회담 다짐 지켜지길	서울신문	2008-09-26
347	정략 접고 민생 챙기는 국감 돼야	서울신문	2008-10-06
348	민생의 어려움 가득 담긴 사회통계조사	한국일보	2008-10-18
349	민생 위협하는 촛불, 또 켜나	세계일보	2008-10-25
350	정부와 여야당, 민생법안을 너무 가볍게 다룬다	동아일보	2008-11-17
351	'쟁점 법안' 잠시 덮고 경제·민생법안부터 처리하라	동아일보	2008-12-01
352	다수결도 타협도 없는 최악의 反民生국회	동아일보	2008-12-01
353	민생·경제·정체성 관련 법안조차 막을 텨가	세계일보	2008-12-16
354	한나라당,경제민생법안처리가우선이다	조선일보	2008-12-25
355	民生 깔고 앉은 김배지들, 차라리 국회 떠나라	동아일보	2008-12-25
356	대통령의 약속, 民生현장서 通해야 의미 있다	동아일보	2009-01-03
357	국회, 민생법안조차 내팽개칠 텨가	세계일보	2009-01-06
358	경찰의 '민생치안' 분발이 절실하다	세계일보	2009-01-07
359	민주당, '세비 10% 반납' 이전에 民生입법부터 하라	동아일보	2009-02-09
360	민생·경제 법안 우선 처리하라	국민일보	2009-02-28
361	경제·민생법안은 반드시 처리하라	서울신문	2009-03-02
362	민생치안대책 강력하고 지속적으로	한국일보	2009-03-04
363	민생경제법안 밀쳐놓고 '3월 휴무' 외유 중인 국회	동아일보	2009-03-06
364	복지사각지대줄이기위한6조원民生대책	조선일보	2009-03-13
365	민생법안 시행령, 의미 있는 조속 발효	한국일보	2009-03-25
366	폭력街闖세력이 경제와 민생 혼든다	동아일보	2009-05-04
367	다시 민주·민생·통일의 창간 가치를 세운다	한겨레신문	2009-05-15
368	민주당, MB정권 애먹이면 民生나아지나	동아일보	2009-05-23
369	이제 제자리로 돌아가 民生과 安保다지자	동아일보	2009-05-30
370	무너진 경찰 기강, 민생치안 의지 있나	세계일보	2009-06-02
371	미디어법에 쓸려간 민생 어찌할 텨가	서울신문	2009-07-24
372	미디어법은 미디어법이고, 민생이 더 중요하다	세계일보	2009-07-24
373	한나라당의 '민생 타령' 듣기 민망하다	경향신문	2009-07-25
374	민생 뺑개치고 의원 외교 타령인가	서울신문	2009-07-27
375	민생·서민 밀어내는 4대강 사업 예산	경향신문	2009-08-08
376	민생 중요하지만 사면권 남발 경계해야	세계일보	2009-08-12
377	광복 64돌, 통합과 민생에 힘을 때다	서울신문	2009-08-15
378	1朴2鄭, 정치적 경쟁심을 민생 살리는 에너지로	동아일보	2009-09-08
379	민생행보가 'MB 로또' 이벤트 안 되게	한국일보	2009-09-16
380	제1야당 나가야 할 길은 민생이다	국민일보	2009-09-19
381	민생 치안이 경찰 최우선 임무다	국민일보	2009-10-14
382	예산심의 怠業하며 무슨 민생정치 외치나	동아일보	2009-11-17
383	'예산심의 파업'하며 민생정치 운운하나	동아일보	2009-12-01

384	대치정국 빨리 풀고 민생을 보듬어라	국민일보	2009-12-17
385	민생 외면하다가 뒤늦게 서두는 '학자금 특별법'	문화일보	2010-01-14
386	2월 국회 세종시에 민생 파문지 말기를	서울신문	2010-02-02
387	'민생 약속' 안 지킨 2월 임시국회	한국일보	2010-03-03
388	민생 외면하고 보좌관 늘린 몰염치 국회	서울신문	2010-03-04
389	민생 치안 위한 파출소 인력 확보가 먼저다	한국일보	2010-03-29
390	국회는 집시법 표류시켜 민생 불안 조장 말라	동아일보	2010-06-22
391	의원 재선用선심예산부터 민생 위해 돌려라	동아일보	2010-08-05
392	민주당은 4대강 잡고 민생 챙겨야 한다	세계일보	2010-08-06
393	민생법안 묶어 놓고 친서민 경쟁이라니	세계일보	2010-08-10
394	첫 '野政 협의', 민생협력 모델 만들라	문화일보	2010-09-24
395	예산안·민생법안은 여야 빅딜 대상 아니다	서울신문	2010-10-14
396	G20 안전 강화하되 민생도 살펴야	국민일보	2010-11-06
397	민생과 무관한 '개헌 의총'	세계일보	2011-01-22
398	걱정되는 '사면초가 경제', 민생부터 챙기라	세계일보	2011-02-01
399	설 연휴 식탁 위에 올린 고단한 民生문제	문화일보	2011-02-01
400	국회는 달아놓고 '民生걱정' 잠꼬대하는 정치	동아일보	2011-02-06
401	민생 안정 위한 여야 영수회담 돼야	세계일보	2011-02-07
402	민생은 모든 정치 현안보다 우선한다	국민일보	2011-02-08
403	이 대통령과 손 대표, 민생 위해 통 큰 행보를	세계일보	2011-02-08
404	민주당·국회서民生문제책임과대책단단히따지라	조선일보	2011-02-14
405	민생국회 제대로 열고 영수회담도 하라	국민일보	2011-02-14
406	민주당, '民生' 우선 노선으로 새출발해야	문화일보	2011-02-14
407	청소년 공부방 없애는 게 민생 정책인가	한겨레신문	2011-02-22
408	민생법안 우선처리 약속은 어디 갔나	한국일보	2011-03-10
409	정치권 갈등 재생산 말고 민생국회 챙겨라	서울신문	2011-04-05
410	새 경제팀 '민생에 올인'하는 길뿐이다	한국일보	2011-05-09
411	손 대표, FTA 국민이익 가로막는 게 민생정치인가	동아일보	2011-05-12
412	孫대표'民生진보'가중도중민심얻으려면	조선일보	2011-05-28
413	진보 대통령, '민생' 담는 큰 그릇이어야	경향신문	2011-06-02
414	KBS 수신료가 그토록 화급한 민생사안인가	세계일보	2011-06-22
415	재계·정치권,民生'위해서라면더다뤄야	조선일보	2011-06-27
416	李·孫 진정한 민생정치 위해 더 소통해야	동아일보	2011-06-28
417	靑野대표 더 자주 만나 민생 고민하라	서울신문	2011-06-28
418	진정성 갖고 민생현장 찾아라	국민일보	2011-07-18
419	민생 어찌 되건 제 밥그릇 챙기는 지방의원들	동아일보	2011-11-01
420	'예산심사 거부' 민주당이 민생정당인가	동아일보	2011-11-29
421	民生 일선 공무원들의 거룩한 희생	문화일보	2011-12-05
422	국회 정상화, 민생현안 처리에 만전 기해야	세계일보	2011-12-09
423	복지 확대로 경기침체 속 민생 안정 꾀해야	경향신문	2011-12-13
424	박근혜, 비대위 그릇에 '민생'을 채워야	경향신문	2011-12-28
425	대통령의 낮은 자세 민생 챙기기는 당연	한국일보	2012-01-03
426	민생법안 내팽개친 국회, 변명은 뭐가	세계일보	2012-02-29
427	신뢰·명예 다 잃은 경찰 민생치안 주력해야	서울신문	2012-04-10
428	새누리, 몸 낮추고 민생 챙겨라	국민일보	2012-04-13
429	정부·정치권 이젠 민생살리기 머리 맞대야	서울신문	2012-04-13
430	18대 국회 민생법안이라도 처리하고 끝내라	서울신문	2012-04-17
431	민생 버리고 정쟁만 일삼은 최악 국회	국민일보	2012-04-26
432	이한구 원내대표, 親朴 넘어 국악·민생 국회 지향하라	문화일보	2012-05-10
433	한미 FTA 성과, 민생경제로 연결하길	동아일보	2012-05-21
434	전근대적 사내하청 인정하자는 새누리 민생법안	한겨레신문	2012-05-31
435	주폭 민생사법 차원서 법대로 엄단해야	서울신문	2012-06-01
436	소비 더 얼어붙으면 경제도 민생도 시든다	동아일보	2012-06-09
437	'지각 국회' 민생이 우선이다	국민일보	2012-06-30
438	지각 국회 제대로 쇄신하고 민생 챙겨라	서울신문	2012-06-30
439	추경, 대선용 아닌 민생살리기 목적이야	서울신문	2012-08-08

440	112 장난전화는 민생치안의 적이다	세계일보	2012-08-29
441	자강·참여·민생이 민주당 위기 탈출의 길이다	경향신문	2012-09-03
442	규제 만능주의 종착점은 '시든 경제, 힘든 민생'	동아일보	2012-09-15
443	대선 싸움판 우려되는 국감, 민생이 제1원칙	국민일보	2012-10-05
444	여야 직능단체 요구 옥석 가려야 민생 지킨다	서울신문	2012-11-27
445	MB정권의 민생 실패에 박 후보는 책임 없다	경향신문	2012-12-03
446	교육은 민생의 핵심, 교육감 선거에도 관심을	한겨레신문	2012-12-19
447	야권, 민생 앞세우는 견제세력으로 재기하길	서울신문	2012-12-20
448	복지와 민생 챙기려면 증세 적극 검토해야	한겨레신문	2012-12-22
449	새 정부는 민생 치안과 기초 질서 바로 세우라	동아일보	2012-12-28
450	'민생 정치'가 무색한 국회	중앙일보	2013-01-02
451	민생 뒷전인 성남시·시의회의 진흙탕 싸움	한겨레신문	2013-01-04
452	특별사면 필요하나 민생 범죄에 국한해야	동아일보	2013-01-28
453	북핵·민생에 초당적 대응... '새정치' 기대한다	한국일보	2013-02-07
454	민생사면 성패, 통합과 패자부활이 관건이다	서울신문	2013-02-12
455	서민물가 팽개치고 '민생' 얘기할 수 있나	세계일보	2013-02-19

